

제434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임시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7일(화)

장 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가. 산업통상부 소관
나. 중소기업부 소관
다. 지식재산처 소관
2. 2026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9)
3.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0)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2
가. 산업통상부 소관
나. 중소기업부 소관
다. 지식재산처 소관
2. 2026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9) 2
3.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0) 2

(10시19분 개의)

○소위원장 정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여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예산결산소위원회 소위원장을 맡게 된 정진욱입니다.

소위원장을 처음 맡는데요, 걱정도 많고 또 한편으로 기대도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통해서 중동 상황으로 인한 자원 수급 불안, 환율 상승 등 대외적 여건에 기인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 동력을 얻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께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오찬을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가 협력해서 위기 극복에 나선다는 모습을 보니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과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이분들의 위기 대응의 소관 부서인 우리 산자중기위가 국민을 위한 국회 운영과 합의에 모범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전체회의 의결까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빠르게 속도감 있게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극복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빠르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 부탁드립니다. 정부 부처도 위원님들의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자세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 말고도 새롭게 우리 소위원회의 위원이 되신 분이 계셔서 기존에 계셨던 위원님들께 인사말씀하시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재관 위원님,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재관 위원 아닙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가. 산업통상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다. 지식재산처 소관

2.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9)

3.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0)

(10시21분)

○소위원장 정진욱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를 참고해서 사업별·항목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자료에 기재된 세부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사업별 예산 증감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일 경우 그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 항목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보류했다가 추후 보류 항목만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지식재산처,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순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지식재산처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식재산처 소관 사업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자료 지식재산처 소관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지식재산처 일반회계 세출의 세부사업명 K-Brand 국가인증제도 운영 관련입니다.

추경안에는 95억 원이 신규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쟁 대응이라는 추정 목적과 무관하고 이미 26년 본예산으로 동 사업의 용역이 진행 중이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강승규 위원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사업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추정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시범사업의 취지로 10개국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45억 4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반면에 중소기업의 자부담 비율을 낮추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5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지식재산처는 정품인증시스템의 보안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투자 대상국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한편 기업 간 공정 경쟁이 저해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중소기업은 전쟁으로 인해서 제조원가 상승과 유사상품 유통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승규 위원 예.

○소위원장 정진욱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중소기업이 제조원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식재산 보호 기반을 강화하는 브랜드 보호 사업이 왜 전쟁 대응 추정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지요? 지금 설명하신 것 등을 제가 머리가 나빠서, 아둔해서 못 알아듣겠는데요.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 보세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이미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마켓에서 한류 편승으로 인해서 짝통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 2024년 우리 기업들의 해외에서의 피해액이 7조 원이고요, 그리고 K-Brand 무단 선점 현황도 2023년에는 5000여 건이었는데 25년에 1만 1400여 건으로 2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K-푸드 위조 상품 유통은 4년 사이에 88배나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이미 전쟁을 치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전쟁으로 나프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라면 봉지라든가 스낵 포장지, 음료, 생수병, 화장품 용기 등 그로 인해서 부담이 엄청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중동의 전쟁이 짝통과의 전쟁과 같은 내용이에요? 전쟁의 의미가 같은 전쟁이라서 같은 의미예요? 지금 저한테 그 얘기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중동과의 전쟁에서 지금 유가 상승 등으로 제조원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에 짝통과 가짜 상품들 때문에 짝통과의 전쟁을 하고 있어서 K-Brand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짝통과의 전쟁이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짝통이 더 많이 기승을 부려요? 그래서 지금 짝통과의 전쟁, K-Brand 보호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많이 필요해요? 더 사업을 확장해야 돼요? 어떤 사업을 확장하실 건데요?

○소위원장 정진욱 차장님, 이 사업의 구체적 내용, 핵심 내용을 아주 간략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국회에서 지적해 왔듯이 해외에서의 한류 편승 상품 짝퉁 유통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께서 특단의 짝퉁 단속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해 오셨고요, 그리고 늘 정부가 좀 나서서 해 달라고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재처에서는 정부가 직접 전면에서 나서 가지고…… 지금까지는 사태가 터지고 나면, 유통되면 컨설팅 비용 지원하고 권리화 비용 지원하는 이런 소극적인 대응이었지만 이번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정부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강승규 위원 왜 그걸 정부가 지금 나서요, 추경에? 정부가 그런 제도화를, 제도적으로 하는 것을 왜 이제 나서냐고.

○소위원장 정진욱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 사업의 정확한 내용이 전달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정확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하시라고요, 취지가 아닌.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조폐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획기적인 특허기술인 정품인증기술을 사용해서 QR코드와 그리고 AI 워터마크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외 소비자들이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 제품을 촬영을 하게 되면 바로 실시간으로 어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제품의 짝퉁이 유통되고 있는지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대응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도 같이 대응을 하게 될 겁니다.

○김종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강승규 위원 자, 잠깐만요.

○소위원장 정진욱 잠깐만요, 강승규 위원님. 이미 손을 드신 분이 있어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손을 들고 계시니까……

○강승규 위원 아니, 그래도 조금 내용은 얘기드려야…… 내가 의문시하는 건데, 하나만 더요.

이거 본예산에 세웠었어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본예산에는 이거와 유사한 사후 대응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그때는 사전이 필요 없었어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아닙니다. 정부가……

○강승규 위원 그런데 중동 전쟁이 나니까 사전 대응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지요. 이게 무슨 전쟁 예산이에요?

○소위원장 정진욱 강승규 위원님……

이재관 위원님이 제일 먼저 손 드셨고요. 그다음에 정동만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권형엽 위원님 순서로 말씀 들겠습니다. 그다음에 허성무 위원님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관 위원 지금 이 제도의 취지와 관련해서 저도 지난번 국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공감을 하는데요. 이 피해액의 최근 누계를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2024년 OECD에서 조사를 했는데 위조상품 유통으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액은 7조 원이고 이로 인해서 국내 고용이 사라진 것도 1만 4000명에 달합니다. 세수 감소도 한 1조 8000억 정도 됩니다.

○**이재관 위원** 맞습니다. 중소기업이 어렵게 사업화를 통해서 해 놓은 부분들이 오히려 특히 인근 중국을 비롯한 국가에서 버젓하게 인터넷상에서 위조상품으로 유통되는 실제 사례를 현장에서 취재를 해서 저희들이 국정감사 때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중동 전쟁과 연관시키는 것보다는 그 피해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작에 했어야 되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어떤 상황으로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예.

○**이재관 위원** 실제로 기술 약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의 기술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유출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부서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한 피해들이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그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작에 해야 될 부분들이 오히려 그동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추경과 관련해서 편성을 해서 조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습니까?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러니까 중동 전쟁하고 이 부분을 연결시킬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진작에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 거를 못한 부분을 지금 추경 차원에서 해서 중소기업들의 기술 약탈이라든지 브랜드 도용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그 차원으로 처음에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중동 전쟁을 계기로 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한 겁니다.

○**이재관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동만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군요.

○**김종민 위원** K-Brand 국가인증제도라는 게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들이 K-컬처 붐을 타고 잘 팔리니까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이런 게 벌어지고 해외에서 더 많이 벌어지는데, 짝퉁 제품들을 파는데 이거 구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데는 제가 얼마 전에 사례를 보니까 이걸 적발을 해서 재판을 가요. 그런데 피해액은 수십억인데 재판해서 받아낸 건 3500만 원이에요. 중국 법원이 3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렇게 주지를 않아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대응을 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마침 이번에 기술적으로 조폐공사에서 위조 지폐 감지장치 같은 그런 기술로 해서 QR코드를 집어넣으면, 카메라로 비춰 보면 이게 위조다 아니다라고 하는 게 딱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조다 그러면 이게 바로 신고가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그 자동시스템을 부착하는 건데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지요. 그런데 지금 강승규 위원님께서 이거 왜 전쟁 추경에 없어서 하느냐? 그 말도 항목상으로 보면 일리는 있는 얘기인데……

지금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중소기업이 한 9000억 정도를 매월 추가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조상품 피해액이 매월 한 6000억 됩니다. 그러니까 유가로 인한

부담과 이 위조상품 피해액이 6000억, 9000억이 시너지를 일으켜 가지고 중소기업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항목이 추정 항목이냐 아니냐? 뭐 추정 항목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 중소기업이 국제유가 상승으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는데 기업 피해액이 계속 누적되면 또는 같이 동반하면 같이 발목을 잡아요. 이게 쉽지가 않은데, 버티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용역을 해서 개발을 해서 한 1년 있다가 할 거다 그러면 강승규 위원 얘기대로 본예산에 담는 게 맞는데 제가 알아보니깐 이것 예산집행을, 만약에 우리가 증액한 걸로 따지면 한 155억 하잖아요. 155억을 하게 되면 8월, 9월부터 바로 전 세계 90개국을 상대로 해서 이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이 6000억의 피해액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유가 상승과 중동 불안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심리적이든 실질적이든 상당히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하자는 것이고.

이것을 위원님들 얘기대로 만약에 본예산으로 담아서 하자, 그것도 형식적으로 보면 일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자면 만약에 본예산으로 간다면 10개월 정도가 지연돼요. 그러면 10개월 동안 약 6조의 피해액을 우리가 방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5억이 아까워 가지고 중소기업 6조의 피해액을 우리가 방치하게 되는 게 맞냐. 국가 예산으로 봐도 1조 5000억의 세수를 놓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아끼자 또는 예산을 좀 냉정하게 집행하자 이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 취지에서 보더라도 월등하게 효용성이 높은 예산이다. 155억 투자해서 기업에게는 6조 그다음에 우리 세수에는 1조 5000억을 거둬들이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간 놓쳐 버리면 이것 날아가는 거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항목 여부를 떠나서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셔서 8월부터 우리 중소기업이 6000억의 부담을 덜 지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권향엽 위원님.

○권향엽 위원 K-Brand 정부인증 사업 여기서 논점은 중동 전쟁과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전쟁 추정이라고 하는 이것과 항목이 연관성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가가 10% 오를 때마다 석유화학제품 제작비 단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예, 2%……

○권향엽 위원 그리고 실제 저희가 석유화학, 플라스틱 용기 제작업체도 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 이중의 고충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수급 불균형, 원료에 대한 수급 불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위조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기승을 부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야 된다, 전쟁 예산이 아니다 이 논쟁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점을 유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화장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다 화학 원료로 같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쟁 예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김종민 위원님께서도 위조상품에 따른 피해액 6000억을 막는 것부터가 사실은 국고를 세이브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하자라고 하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도 지금 현재 너무나 심각한 석유화학제품 그다음에 포장·용기 제조업체 이런 데의 어려움들을 생각한다면 빨리 인증제도를 제대로 안착시켜서 위조상품을 예방하는 것이 도움을 주는 것이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한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허성무 위원님.

○허성무 위원 이 제도의 근본 취지라든지 다 말씀하실 수 있는데, 2015년도 우리나라 20대 수출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0대 수출 상품 2개를 놓고 비교를 해 보면 18개가 똑같아요. 그런데 2개가 달라졌습니다. 그 20대 수출 상품 안에 새로 들어온 게 뭐냐 하면 K-뷰티하고 K-푸드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K-Brand의 핵심이지요.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실상 K-뷰티와 K-푸드가 위조상품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품인지 위조품인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 중소기업들이 부담해야 될 엄청난 부담들을 국가가 나서서 좀 경감시켜서 경쟁력을 높여 주자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매출과 세수 등등을 확보한다……

이 논리는 김종민 위원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비하는 외국 소비자들의 우리 제품의 신뢰도 제고입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외국 소비자들도 이것이 가품인지 위조품인지 진품인지를 소비자 스스로가 금방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무역 전쟁이고 우리 제품 전쟁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반영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을 요망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오세희 위원님.

○오세희 위원 저는 지재처에다가 한마디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제가 국감 때도 얘기했지마는 위조상품에 대한 대응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시제품만 나와도 위조가 바로 나와요. 그 직전에 다 나와.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 온 게 문제예요. 너무 늦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약 11조 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잖아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예.

○오세희 위원 저는 11조 넘는다는…… 심지어는 요즘 스웨덴의 한 분은 K-뷰티처럼 본인이 홍보해 가지고, 그런 것에 문제점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루빨리 진짜, 우리가 이것을 더 늦게 하면 할수록 국가적인 손해, 그리고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참 많이, 굉장히 에너지를 소비합니까. 그래서 지재처가 빠른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인제사……

아까 말씀 다 하시고 다른 얘기 다 했지만 저는 부처들이 너무 속도가 늦다, 이미 위조상품 때문에 지금 사업을 못 해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으면 하루가 빠르게,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동만 위원님.

○정동만 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국감에서 짝퉁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오세희 위원님 말씀처럼 본예산에 태워서 빨리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 추경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쟁하고 좀 무관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했는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실시를 전 세계 90개국에 합니까?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70개국에 합니다.

○정동만 위원 70개국. 그러면 K-Brand의 폐해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지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중국……

○정동만 위원 그렇지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동남아, 인도네시아도 많고요.

○정동만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해서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보면서 하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위원님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상표를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개발 중인 상표를 한 6월경에 출원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70개국이 아니고 10개국이나, 우리 전체 수출의 98%를 차지하는 나라를 70개국으로 잡았고요. 절반 정도만 하게 되면 나머지 절반 나라에서 우리 인증 표장을 모방해서 상표가 선정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법무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전체 70개국에 한번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동만 위원 그러면 정품인증시스템 이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인증시스템은 조폐공사에서 획기적인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 기술 자체는 조폐공사가 가지고 있지만 실시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하게 될 겁니다, 실제 제품에다가 라벨을 찍는 거는요.

○정동만 위원 아무튼 이 추경이 전쟁 추경이라고 했는데 시범사업 취지로 하는 이런 사업들을 여기에 담았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것을 시범사업을 해서 중국이나 또, 한번 하면서 점차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하여튼 늦은 감이 있지만……

○정동만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저도 보태서 말씀드릴게요.

전액 다 필요하단 말씀이시지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예, 국가는 다 필요합니다.

○구자근 위원 국가가 다 필요하다, 그러면 70여 개 국가인데 지금 홍보비 얼마 책정해 뒀습니까?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홍보비가 25억 원입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70개국 나누면 대충 어느 정도 돼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3억 5600입니다.

○구자근 위원 한 3500만 원 정도 될 건데, 70개국에 평균적으로 n분의 1 하면 3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예.

○구자근 위원 3500만 원인데, 방금 정동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집중은 동남아, 주로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그렇다면서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예.

○구자근 위원 거기도 공히 그냥 n분의 1 해서 3500만 원씩 홍보를 그렇게 합니까?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아닙니다. 전체 홍보 25억의 12억 원이 홍보 콘텐츠 제작비용입니다. 제작비용이고……

○구자근 위원 아니,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쪽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쓰라고 이렇게 알려야 되는 홍보비도 여기에 포함돼 있을 것 아니에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홍보비는 많지 않고 홍보 콘텐츠 제작비용이 많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 구축이 언제 완료돼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시스템 구축 자체는 올 연말까지 마무리가 될 겁니다.

○구자근 위원 아까 6월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6월에 출원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우리 기업들이 외국을 상대로 해서 소송도 하고 수사, 단속 요청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들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가 대신해서 대응을 같이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맞습니다.

○구자근 위원 짝퉁 대응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예.

○구자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충분하게 사전 준비가 다 되었다고 위원들이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예, 3월부터 준비를 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업계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런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도 그렇고 또 정동만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 국감에서도 이 부분은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담지를 못하고 추경에 덜컥 이렇게 담아 오니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전쟁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굳이 전쟁이라는 용어를 넣어서 이렇게 담아 와서 하니까, 그것도 추경에 담아 오니까 의아한 거잖아요.

지금 국가 재정건전성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라 빚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정건전성 이야기할 때는 그것 무시하고 그렇게 예산 가면서…… 우리가 조금은 자제해 주면서,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심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들은 이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추경예산 편성에서 대통령이 전쟁 추경이라고 한마디하니까 여기저기서 끼어들어 와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그냥 신규사업들로 막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우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잘 명심해 주

십시오.

○강승규 위원 위원장님, 저도 추가 질문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잠깐만요. 김종민 위원님 먼저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잠깐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전쟁 추경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추경 심사에서 되게 중요한 지적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쟁 추경이든지 무슨 추경이든지 그 추경에 해당되는 사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항목이 있고 간접적으로, 그 추경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보완해 주는 그런 항목까지를 다 추경 항목으로 그동안에 인정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합리적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유가 상승이 추경의 핵심적인 원인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중소기업 피해액이 월 9000억인데 정부에서 이 9000억을 대 줄 수 있나요? 유가 상승이라고 하는 추경의 본질적인 원인을 정부가 예산으로 직접적으로 제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최고가격제 이런 것은 예산 투입해서 바로 보완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적인 유가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액을 정부가 무작정 다 예산으로 대체해 줄 수는 없는 일이지요.

이 9000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추경을 못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9000억을 최대한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다른 항목 중에 긴급한 항목이 있다면 지금 추가로 9000억 부담이 생긴 중소기업에게 이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상쇄시켜 주거나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적합한 게 이 K-Brand 인증제도인데 당연히 본예산에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늦기는 했지만 지금 이 유가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다 이런 측면에서 광의의 간접적인 유가 상승에 따르는 추경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강승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잠깐만 위원장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작하고 35분 정도 지났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식재산처 안건은 하나입니다만 산업부 소관이 25개, 중기부 소관이 24개입니다. 그래서 49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발언하셔야 됩니다, 마땅히.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오늘 중으로 안 끝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차수 변경해서 할 수 있지요?

○강승규 위원 예, 합시다.

○소위원장 정진욱 차수 변경해서 할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 의견 다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다 받아서 충분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기다리시는 정부 부처에서 오신 분들도 오늘 밤을 샌다 미리 집에 다 말씀해 주시고요, 밤을 쉰 준비 다 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의견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로 말을 자르거나 줄이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안 되면 모래도 할 수 있고요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수 변경해서 한다는 것 미리 말씀드리니까 준비해 주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승규 위원님 말씀해서 끝까지 정리가 안 되면 정리가 안 되는 것은 빨리빨리 보류를 하겠습니다. 보류해서 다시 심사하고 또 안 되면 또 심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충분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 지식재산처의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K-Brand 분쟁 대응지원사업비라는 예산이 있지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예.

○강승규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74억 원입니다.

○강승규 위원 거기에서…… 인증 표창이에요, 표창이에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표장입니다.

○강승규 위원 표장 개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지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예, 1억 원 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국가인증표장을 남들 똑같은 걸 할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가진 그런 문양을 개발하는 겁니다.

○강승규 위원 그게 이것 아니에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예?

○강승규 위원 지금 하겠다는 이것 아니에요, 그게?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그걸 개발해서 글로벌 나라에 출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증 표장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이 가짜 상품과 우리 K-Brand를 구별하는 표장, 그게 QR 마크든 뭐든 그것 아니에요? 그 예산 아니에요, 이게?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예, 그것 맞습니다. 그 예산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개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갑자기 지식재산 보호 기반 추경에 신설해서 95억을 요구해요? 지금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용역이 진행 중이에요. 용역 결과 안 나왔어. 그게 조폐공사에서 가지고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몰라.

정부의 일이 그래요? 지금 용역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을 갖다가 70개국에다 다 뿌려서 하겠다라고 그걸 추경에다가 95억 요구하는…… 지식재산처나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운영해요, 국가예산을?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그건 아니고요……

○소위원장 정진욱 잠깐만요.

○강승규 위원 K-Brand 분쟁 대응 지원사업비 1억 원으로 인증 표장을 개발하고 있으면 그것이 완료돼야 사업 예산을 책정할 것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이든 그 후년이든.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그게 뭔지도 얘기 안 하고 그저 지금 가짜 상품이 창궐해서 짝퉁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번 예산에 95억을 편성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부가 예산 요구한 95억 내역들을 살펴봤어요. 정부인증 표장 국내외 출원에 4000만 원씩 70개국을 해서 28억. 그래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예.

○강승규 위원 개발도 안 됐는데 인증 표장 국내외 출원 그것을 지금 추경에다 반영하

는 게 정부의 합리적인 예산 절차예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표장……

○강승규 위원 제가 얘기하는 데에 대답만 하세요. 그것에 대해 제가 의혹 제기하는 것에 나중에 합리적인 답변을 해 보세요.

두 번째 보니까 해외 위조상품 추적 인프라를 구축한대요. 정품인증기술 도입 지원 해서 1개당 7원인지 10억 개 공급하기 0.5…… 그러니까 0.5는 기업이 자부담으로 50% 하게 하고 정품인증기술 도입 지원을 하겠다, 기업에다가. 그런데 지금 기술도 없어, 이제 용역 하고 있는 거야. 용역 결과 그게 제대로 합리적인 용역이 나올지 몰라요. 용역 하면 무조건 나온다는 100%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을 하는 거예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예.

○강승규 위원 그다음에 아까 구자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국내 및 해외 70개국에 홍보비 25억을 반영했어요. 그랬더니 영상 제작 및 해외 주요 매체·SNS 송출이야. 그렇게 해서 25억이야. 그런데 지금 정부 계획을 보니까 올해 이것을 추경에서 반영해 주면 상반기에는 의견수렴을 하고 인증 기준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을 하반기까지 하겠다.

용역 결과도 안 나왔어. 용역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 기술이 합리적인 기술이고 이것이 가짜 상품을 구별할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들면 그 용역 결과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게 QR 마크든지 뭐든지. 시스템 구축도 안 했는데 홍보영상을 찍는데. 아까 홍보영상 찍는데 콘텐츠 제작비 12억이래요.

제가 홍보 전문가예요. 뭐 내용이 있어야 콘텐츠를 제작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또 딜리버리 하는 데 어찌고저찌고 해 가지고 95억 추경 중에서 25억을 홍보비로 쓰겠다. 이것은 그냥 돈을 뿌리려는 거지, 공중에다가.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전담기관을 운영한대요. 전담기관 운영이 얼마예요? 4억 원이에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예.

○강승규 위원 인건비 3억 5000 해서 10명, 500만 원씩 7개월 한대요.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이런 전담기관 없어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뭐 하는 기관이에요? 이런 것 하는 기관 아니에요? 이 전담기관을 또 구축해요? 어디에다가? 누구를 뽑아서?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 이것을 지금 추경해 주라고……

○소위원장 정진욱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충분히 하렸잖아요.

○소위원장 정진욱 정부가 하는 일을 그렇게 비판하시면……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

○소위원장 정진욱 강승규 위원님!

잠깐 멈춰 주세요.

○강승규 위원 제가 의혹 제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소위원장 정진욱 잠깐만요.

실무적으로 다른 분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재산처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박진환이라고 합니다.

답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강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꼭지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개발하는 용역이라는 부분에서 용역의 결과물은 기술에 대한 시스템은 아니고요. 통상 보시듯이, 예를 들어 국가 인증 같은, 대한민국 같은 태극기 같은 이런 문양 같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해외로 나갔을 때 한국을 식별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개발되지 않은 고유의, 어떤 모방의 소지가 전혀 없는 그런 표장을 개발하는 걸 저희가 지금 착수를 해서 6월까지 빨리 개발하려는 거고요. 그걸 저희가 국내에도 등록하고 해외에도 출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해외에서 모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추적 인프라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정품 인증 기술은 아까 말씀드렸다고 조폐공사가 이미 있습니다. 이미 조폐공사와 협업을 해서 진행 중이고, 해당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게 상반기 중까지는 어느 정도 되고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는데 8월부터는 완료가 돼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표장 그리고 표장을 부착한 제품이 해외에 수출되면 그것이 해외에 유통이 될 테고 저희가 조폐공사와 협업을 해서 만든 시스템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스캔을 하고 위조상품이 발견되면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8월부터 가동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비 같은 경우도 8월부터 해외 소비자가 실제 그것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홍보물 자체가 그 전에 해외 소비자에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여러 가지 해외 매체를 통해서 해외에 보내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순서는 그렇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실에 답변 내용은 가짜예요?

○**소위원장 정진욱** 잠깐만요. 잠깐만요.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충분히 토의를 하자면서요.

○**소위원장 정진욱** 충분히 토의하는데 발언하실 때는 위원장님 허락을 득해서 해 주세요.

○**강승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지금 필리버스터 하는 것 아니지요? 상임위에 와서 필리버스터 하는 것 아닙니다.

○**구자근 위원** 소위에서는 대충 마이크 순서 없이 그냥 했었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오늘 대충 안 합니다. 저는 새로 하는 위원장이어서 기존에 하셨던 방식대로 못 합니다.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님.

○**허성무 위원** 이게 잘못하면 약간 오해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표장 개발이라는 게 디자인 이야기 아닙니까? 고유의 디자인을 개발한다는 거지요?

○**지식재산처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박진환** 예, 맞습니다.

○**허성무 위원** 우리나라 것으로 식별되는 고유의 디자인 개발이고, 개발된 디자인을 국내외에 등록·출원하는 데 또 비용이 드는 거고 그리고 기간도 들고.

그리고 이것은 이미 개발이 어느 정도 다 돼 가고 있는 거지요, 이미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처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박진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렇지요? 진행 중에 있지만 어느 정도 잘돼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곧 될 거라 보고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조폐공사 기술은 그 기술에 이 디자인을 얹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구현이 가능한 것이고, 그다음에 8월부터 구체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리 콘텐츠 제작이 돼야 되는 거고 홍보가 돼야 되는 거고 바로 그렇게 해야 제품이 나왔을 때 외국의 소비자들도 알 수 있고 감시하는 우리나라의 감시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정리해 낼 수 있는 거고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걸 쪽 준비해 가는 데 필요한 예산들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씀이지요?

○**지식재산처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박진환** 예, 정확히 맞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1억이 있었다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새로운 예산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좀 쉽고 편하게 잘 해 주시면 오해가 없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이것은 절박하게 필요한 겁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특히 위조가 많은 것이, 가짜가 많은 것이 K-뷰티하고 K-푸드인데 이게 지금 10년 전에 비하면 유일하게 20위권 내에 진입한 우리의 독자 수출품이고 이미 이게 한 11위, 12위 이렇게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위조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이것을 빨리 힘을 모아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소위에서 예산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주장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저는 오늘 말씀하시고 싶은 것 있으면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는데 누가 봐도 충분히 이야기가 됐는데 계속 발언이 나올 때는 보류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님 말씀까지 듣고……

○**강승규 위원** 아니, 저도 팩트체크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소위원장 정진욱**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하시든 아니면 소관 부처의 답변을 통해서 하시든 내용들이 상당히 공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질의를 하는데 그 질의 내용이 기존의 답변 내용 속에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더 이상 그 질의를 진행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심사 과정에서 오가는 질의와 답변의 내용들을 또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본인의 발언, 질문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향엽 위원**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이게 전액 추경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 시범사업으로 한 10개국 정도 먼저 해 보고 더 확대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대상은 70개국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은 편성된 것 같은데 이 브랜드화하는 것이…… 저는 한 가지, 지금 질문의 요지는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 위조상품에 대한 풍선효과……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예를 들면 10개국 정도를 대상

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 위조상품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오히려 더 범람할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예를 들어서……

○**권향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 사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표장을 만드는 거라든가 QR코드 시스템을 갖추는 거라든가 이런 인프라를 만드는 데 대부분의 사업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10개국으로 하든 70개국으로 하든 그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위원님께서 같은 질문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일부 국가, 예를 들어 10개 국가만 먼저 하고 뒤에 안 하게 되면 나머지 60개 국가에서 상표가 무단 선점될 수 있습니다. 상표 무단 선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고 정부에서 그 지원들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그런 일을 되풀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권향엽 위원** 알겠습니다.

○**지식재산처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박진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만 추가 설명드리면요……

○**소위원장 정진욱** 그러세요.

○**지식재산처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박진환** 지금 저희가 개발하는 표장이 해외 국가에 등록을 하는데 10개국만 등록을 하고 나머지 60개국에 등록을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태극 문양과 관련된, 만약에 그런 문양을 저희가 해외에 등록을 했는데 중국·동남아만 하고 예를 들어 중동이나 중남미 이런 데 안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브로커들이 그걸 보고, 더구나 국가 표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위조할 수 있거든요. 해당 국가에 등록을 해 버리면 저희가 나중에 그 국가에서 위조상품이 생겨도 정부가 나서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70개국을 일괄적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권향엽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특허는 전 세계에 동시에 하는 게 가장 좋겠지요. 이번 인증 표장은 어떻게 보면 저는 세계 지식재산권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한 제품의 위조 여부를 즉시 확인해서 소비자가 그 제품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조폐공사가 가진 위조 방지 기술과 그다음에 우리가 가진 IT 기술 또 AI 기술을 결합한 획기적인 사업이어서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야기했는데 이 사업은 이 정도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 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에 진행하시는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제가 팩트 체크 좀 할 게 있어요, 질문한 것에 대해서.

○**소위원장 정진욱** 잠깐만요. 아니, 재심사할 때 하세요.

○**강승규 위원** 위원장님, 충분히 한다고 그랬잖아요!

○**소위원장 정진욱** 재심사할 때 하세요.

○**강승규 위원** 충분한 대화 한다고 얘기해 놓고……

○소위원장 정진욱 충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충분하게 이야기했고……

○강승규 위원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이 제가 질문한 답변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그 팩트 체크는 하고……

○소위원장 정진욱 잠깐만요, 재심사하겠습니다. 보류했다가 재심사할 거니까요.

○강승규 위원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보류하더라도 제 질문 하나는 받고 하시지요.

○구자근 위원 아니, 두 번씩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소위원장 정진욱 아니요, 됐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충분히 말씀하셨고 위원님들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재산처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는 보류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통상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혹시 정말 궁금하신 것들은 다시 심사할 때 꼭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퇴장하셔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통상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통상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일 경우에는 그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통상부 소관 연번 1번 사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추경예산안 심사자료 산업통상부 소관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먼저 연번 1번 무역보험기금 출연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기금배수는 19.2배로 낮고 순자산이 안정적인 상태이므로 추경 증액분 50%인 5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산업통상부 및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보증·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유관기관 연계, 신용정보서비스 제공 확대 등 보험 공급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감액이 아닌 정부안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 지금 무보기금이 충분하지 않아요? 지금 모자라요? 지난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높여 줬잖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강승규 위원 많이 좋아졌는데 왜 지금 와서 또 추경을 해야지요? 이게 추경할 사항

이예요? 지금 무보가 파산 위기에 있어요? 추경에서 이렇게, 지금 좋아지고…… 아니, 제
가 자료를 보니까, 기금배수가 지금 얼마예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19.2배 정도입니다.

○강승규 위원 18.9배가 아니고 19.2배예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26년 최근……

○강승규 위원 아, 19.2배네요.

그런데 신보의 법정한도도 20배라면서요? 그러면 이게 적절한 것 아니예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무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은 저희들
도 그렇게 알고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들, 신보나 기술신보나 그런 데 비하면
아직은……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무보가 부실 관리된 거예요? 무보가 기금배수를
그 정도 해도 충분하니까 여기까지 해 왔잖아요. 그래서 작년 예산에서도 엄청나게 올려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추경에서 올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님,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게 한 3조 정도 되는데 정부 예
산 들어가는 것 외에 자체적으로도 한 770억 원을 추가로 해서. 당초 이것은 작년 예산
에 반영할 때 없었던 돈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예산에서 770억 원을 추가로 넣어서 3조를
만드는 것이기는 합니다.

○강승규 위원 이것 절반만 감액하지요. 아니, 지금도 기금배수가 충분하고 또 그전보
다도 굉장히 양호해졌다면서요. 그런데 추경에서 이렇게 1000억씩이나……

○오세희 위원 1000억? 500억.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500억으로 절반 정도 줄이시지요, 지금 오세희 위원님도 그렇
게 주장하시는데.

○오세희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야. 500억 감액한다고 여기다가 넣으셨잖아. 나는
그건 아니지.

○강승규 위원 줄이세요, 이것 너무 많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작년에 많이 올려 주셔서 무보가 강화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보가 새로 해야 될 것들이 많은 데다가 사실은 대미 프로젝트 중에 보면 마스가
프로젝트는 무보의 자체 자금으로 감당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작년에 예산심의 때 제가 예산소위까지 들어가서 충분히 심의했잖아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희
가 수없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그래도 정부안대로 갔어요. 지금 여기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자꾸 예산 갖다가 있는 것 그냥…… 아니, 반도체 호황에 있다고 해서 나와 가지고
그것 다 써 버려야 시원하겠습니까?

아니, 오늘도 어느 신문에 보면 GDP 대비 올해 말에 국가부채가 50% 넘는다면서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님, 그래서……

○강승규 위원 산자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서로들. 그러
면 이런 부분에서 한 절반 정도 감액하는 것을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강승규 위원님이 워낙 강력하게 감액을 주장하는데 민주당 위원님
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해서 좀 이따 다시 한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것은 빨리빨리 보류해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자료 2쪽 연번 2번입니다.

수출지원기반 활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역사업인 개별지원 사업은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것인데 예산 가용 여건 및 준비가 미흡하므로 추경 증액분 75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산업통상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개별지원 사업의 예산 증액이 실제 현지 대응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무역관별 운영 여건과 사업 수요를 사전에 점검하고 지역별 인력·예산 배분 및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감액 없이 정부안이 유지될 것을 건의드립니다.

부대의견은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원안대로 하고 부대의견을 수용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아니, 아닙니다.

○강승규 위원 정동만 위원이 여기 감액 의견 냈는데……

○오세희 위원 그런데 여기 와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구자근 위원 아니, 일단은 물어는 봐야 되지. ‘철회하겠습니다’ 하든지 물어는 봐야지. 위원장님이 그냥 독단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소위원장 정진욱 감액 의견에 대해서 정동만 위원님 철회하시겠습니까?

○정동만 위원 철회 못 합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그러면 연번 2번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번 가지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3번입니다.

가전산업 AX 전환을 위한 AI 핵심모듈 및 혁신제품화 기술개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역사업인 가전산업 전장배선 조립공정 자율화 기술개발은 전장배선 공정에 휴머노이드 기반 AI 자율 제조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초정밀 로봇핸드 및 AI 제어 기술개발, 작업 환경 맞춤형 개조 등을 위한 36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수용합니다.

○허성무 위원 제가 한말씀……

○소위원장 정진욱 허성무 위원님.

○허성무 위원 창원공단에 가전이 있습니다. LG 가전 부분이 있는데 월풀을 제치고 세계를 제패했지요. 세계 1등인데 제가 수많은 하청 협력업체들을 다녀 보면 가장 단순하고 반복적이면서 가장 저임금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또 실제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대개 경력단절 여성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르게 AI를 통해서 전환을 시키실 필요가 있고, 이게 사실은 가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K-2 전차나 K-9 자주포나 여기도 계속 전장화되면서 이 부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이 다 그렇듯이. 그래서 가장 단순한 데부터 시작해서 빠르게 산업 전환을 해 줘야 될 부분이라서 위원님들에게 간곡하게 좀 동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4번입니다.

제조암묵지 기반 AI모델 개발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조업 명장의 암묵지를 디지털화하고 제조 AI를 개발하는 것은 중장기 과제에 해당하여 추경 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추경안 8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2개월분 177억 8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산업통상부 및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명장의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정부 원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부대의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규 위원 예.

○소위원장 정진욱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암묵지 기반의 AI 모델 개발하는 것이 아주 단순합니까? 암묵지라는 게 사람이나, 그게 특성상 주관성이 강하고 그런데 그것을 객관화·데이터화시켜서 지속 가능하게 쓰자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제조 명장이나 누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특성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AI라도 개발을, AI가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것이 아주 상용화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가려면 프로그램과 상당히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저희도 지난번에 중국에 가서 여러 가지 로봇이나 관련 첨단 빅테크 산업들을 둘러봤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중국이 10년, 20년 하면서 우리를 추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긴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제조 암묵지 기반 AI 개발 필요하지요. 그런데 지난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그

동안 AI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정부가 산업부든 뭐든 AI에 대해 관심 없었던 거 아니고 정부 정책으로 해서 쪽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모든 부처에 모든 걸 갖다가 다 AX 전환 예산을 수조 원을 넣어 놔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그러면서도 투자를 해야 된다, 좋다,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제조 암묵지 기반의 AI 모델을 개발한다, 추경에 넣었어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건가요? 추경에 넣을 때는…… 이런 거야말로 시장 조사도 하고 어떤 분야가 정말…… 여기에 예를 몇 가지 들었더만요. 어떤 분야 내에 경쟁력이 있을지, 암묵지 기반의 AI를 실제 했을 때 그게 올바른 데이터가 나와서 AI가 정말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다 보니 경쟁력이 있겠다 이렇게 해서 뭔가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추경에 딱 이렇게 넣어요.

저는 이렇게 산자부가 제조 암묵지 기반의 AI 모델 개발을 추경에까지…… 이거 추경에 넣었다는 것은 추경 좀 내놔라 그러니까 급조해서 내놓은 게 저는 거의 맞다고 보는데 이거는 오히려 훨씬 더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아주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서 이 예산에 대해서 감액 예산을 냈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답변 전에 잠깐 산업부에 여쭙보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께 사전에 예산안, 특히 이 암묵지 관련해서 사전에 설명을 하셨던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제 의원실을 방문해서 위원님께는 직접 못 하고 보좌진들하고는 협의를 나누기는 했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지금 강승규 위원님 질의를 보면 이 내용에 대한 배경이라든가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맥스 얼라이언스라든가 또 그것의 기본 바탕이 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사전 전제돼야 되는 것들이 강승규 위원님께 전혀 전달이 안 된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쭙보는 겁니다.

우선 답변해 주시고요, 이어서 권향엽 위원님 그다음에 허성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우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도 비슷하게, 기획을 했던 실무 과장들한테 저도 그것부터 물어봤던 사안인 거고요.

두 가지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작년에 기획을 이 부분까지는 못 했던 게 사실이라는 말씀인 거고, 저희들이 10개의 맥스 얼라이언스를 작년부터 운영을 아주 가일층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 전문가들하고 기업들간의 의견들 중에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의 가장 우선순위가 암묵지의 AI화 부분 쪽이 있어서 이번 추경 작업에 서둘러서, 시급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선 넣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차원 말씀드릴 게 결국 세계적인 제조업 기반, 파운드리 기반을 갖고 있는 것을 AI와 접목해서 해야 하는 부분 쪽의 가장 마지막, 또 시급하면서도 지금부터라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이 암묵지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본예산 쪽으로 차분히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1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는 아쉬움과 시급함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도 보편은 공급망 안정 쪽

에 신산업 전환 쪽 부분들이 포함돼 있어서 그 취지로 산업부에서 넣게 됐다는 배경을 설명 올립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권향엽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권향엽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상해에 가서도 중국의 AX 관련해서 현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강승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해서 이 부분을 잘 살려 내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기 쉽지 않다 하는 취지에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러면 추경의 성격에 타당하냐 하는 것이 문제일 텐데요. 사실은 지금 제조 현장에 가서 보면, 특히 암묵지가 많이 쌓여 있는 중소 제조 현장에 가서 보면은 너무나 일손 부족입니다. 대부분 단기 외국인 근로자에 의해서 충당되고 있고 그 수급마저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인해 가지고 숙련된 노동 인력이 지금 은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암묵지가 통째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속도전을 해서 빨리 암묵지를 모으는 것 우선 그것부터 해내야 된다고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 9개월 정도, 또 본예산에 반영되고 그 본예산을 집행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을 우리가 사실은 놓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 준비를 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고, 오히려 이게 800억 원 정도가 적절한가 저는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800억 원의 산출 근거 여기다가 했었는데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제대로 준비해서 전 사업장이 좀 속도감 있게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허성무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허성무 위원 제조 명장이라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강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국가 명장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조업의 명장들이지요. 국가에서 다 인정을 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도 주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 은퇴를 많이 해서 산업단지 주위에 가면 이분들의 모임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과거 창원시장 할 때 이분들이 다 그냥 쉬고 계셔서 이분들에게 사무실을 내 주고 이분들을 전공별로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해서 각 기업들이 기술 지원이 필요할 때 이분들한테 연락하면, 협회에 연락하면 해당 분야 명장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 파견하고 사무실 운영하는 비용을 시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기술 자문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는 아날로그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날로그고 기술 명장들의 구체적인 자기 기술들과 경험들을 데이터로 축적하고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디지털화하는 거지요. 지금 그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제가 포항에 있는 포스코 1고로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쇠의 분홍색 불꽃, 빨간색 불꽃, 파란색 불꽃, 그 불꽃의 강도에 따라서 수천 장의 사진을 찍어서 명장들이 이 불꽃일 때 쇳물을 빼야 된다, 이 불꽃 되면 고로에 더 열을 안 줘도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까지는 명장들의 경험에 의해서 됐습니다. 그런데 수천 장의 사진을 찍고 수천 장의 필름을 만들어서 가장 적의한 때를 골라내고 그것을 디지털화하고 AI 접목해서 최대 효율을 높여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명장들이 무너지기 전에 암묵지들을 전부 디지털화해야만 대한민국이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저 무서운 공세 속에 우리가 제조업으로

여전히 먹고살려면 이 길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중국과 우리와의 제조업 전쟁입니다. 중동 전쟁보다도 더 가혹한 전쟁이고 중국 제조업의 굴기 때문에 우리가 공포를 느끼고 살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이런 것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동만 위원님 먼저 하시고 구자근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 이게 신규 연구개발 사업지요, 그렇지요? 이 50개 과제에 AI를 접목하겠다고 하는데 단기간 사업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지금 전쟁 추경에 슬그머니 예산을 끼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하고 최근에 상해 가서도…… 데이터를 접목해서 해야 됩니다.

이 자체가 계속 기술 축적하고 데이터 구축하고 또 모델 개발하고, 검증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갑자기 AI 사업 하겠다고 지금 예산 800억을 넣어서 하는데 바로 투입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개의 맥스 얼라이언스를 유지하고 활동하면서 나왔던 가장 큰 중요한 의견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수요를 체크를 한 바인 거고요. 수요가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다고 하는 것까지는 확인한 상태에서 추경안에다가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래서 신규 예산에 시범사업조차 없이 이렇게 예산을 넣어서 바로 투입할 때 사업이 잘 되겠냐, 또 추경의 의미하고도 전혀 맞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보다 더 시급한 예산은 지금 충분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액 삭감을 해서 더 시급한 사업에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구자근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 차관님, 이게 총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단년도 800억 원입니다.

○구자근 위원 민자는 없어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민간 매칭은 15% 정도를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해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대안도 말씀드리고.

지금 자꾸 필요성 이야기하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당초, 그러니까 본예산 세울 때 이런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세우는 게 맞고 우리가 지금 추경을 하고 있잖아, 추경을. 없는 돈 짜내서. 지금 반도체가 호황이 아니면 그렇게 됐겠어요? 그렇지요? 남은 여유분 1조 정도밖에 지금 국가채무 갚지를 앓는데, 그게 1%밖에 안 됩니다. 올해 예를 들어 108조 정도 예산을 하던데……

아까 말씀 있었지만 GDP 대비 지금 현재 상황이 51% 넘어가잖아요. 저는 기억에 문재인 대통령이 40%만 넘어가도 나라가 망할 것같이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이라는 이유를 내가 계속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하면, 제가 예결위 간사할 때도 그랬어요. 그 어려울 때 심지어는 부처 운영비까지 다 깎아서 그래도 먹고살고 운영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예비비까지 다 깎았다니까요? 그래

도 나라 운영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는 본예산 때, 당초 예산 때 우리가 이런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하는 게 맞다, 추경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차관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암묵지라는 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허성무 위원님께서도 충분하게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직관이나 육감이나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잖아요, 제조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 조선업라고 쳐 가지고 보면 거기에 명장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용접하는 사람, 도장하는 사람, 조립하는 사람, 품질 검사하는 사람, 그 분야별로도 다양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개발뿐만이 아니고 지금 실제 현장에도 적용한다는 것이잖아. 그러면 단년도 사업으로 이게 되겠어요?

지금 저희들 이야기 아닙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추가 보완이 생기는 것, 단년도 사업으로 시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닙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전체 금액 1000억 정도 되는 돈을 지금 이 추경에 시급하게 들어오는 게 맞냐라는 것이…… 전체적인 것은 맞지만.

그렇게 볼 때 적어도 이 부분을 그렇게 한다면 다양한 스펙트럼과 다양한 제조 분야에 수백·천·만 가지가 있을 건데 계속사업도 아니고 단년도 사업으로 개발해서 완성하겠다는 그 시도 자체가 저는 의아스럽고, 그렇게 할 수도 없을뿐더러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800억 다 하지 말고 적어도 한 10% 정도 해 가지고 먼저 어느 한 분야나 타깃을 정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다음 본예산에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켜서 그렇게 해서 더 담아내세요. 이것 단년도 사업 1000억 잡아넣어서, 800억 잡아넣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차관님, 제조 암묵지 기반 AI 모델 이 사업이 지금 단년도 예산이어서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됩니까? 내년 본예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소위원장 정진욱 준비하고 계시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구자근 위원 그러면 더 깎아야 되지.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아니, 그런데……

○소위원장 정진욱 잠깐만요.

그렇게 중요해서 내년 본예산에 들어갈 거가 올해 추경에 들어가는 게 지금 문제인 것 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회를 보면서 느끼는 게 암묵지는 꼭 필요하다, 그런데 예산은 줄 수 없다 지금 계속 이렇게 돼서 굉장히……

○구자근 위원 줄 수 없다라는 게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하자는 말이지. 왜 그걸 안 준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소위원장 정진욱 그리고 저도 예결위 위원입니다마는 요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 석학들이 뉴노멀 시대에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구분이 없어진다고, 본예산을

만들었더라도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사회 변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사실은 추경의 상시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필요한 것은 언제든 할 수 있는데……

○강승규 위원 위원장님, 추경의 상시화라는 것을 이렇게……

○구자근 위원 왜 이해를 그리 시킵니까?

○소위원장 정진욱 제가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강승규 위원 위원장께서 혼자 독단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추경제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교과서 다시 쓰는 거예요?

○오세희 위원 저희도 발언할게요.

○소위원장 정진욱 그렇게 돼서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구자근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개인적인 의견이고 국가재정법상 여기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정진욱 말씀 듣고 논의가 해결이 안 되면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구자근 위원 전액 삭감.

○소위원장 정진욱 이재관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허성무 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시나요?

○허성무 위원 짧게 주시지요.

○오세희 위원 저 얘기할게요.

○소위원장 정진욱 오세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십시오.

이재관 위원님 하십시오.

○이재관 위원 차관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이가 크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속담에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암묵지의 소중함 또 적시,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그 부분까지 저는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이게 과연 추경 성격에 맞느냐라고 보지만 사실은 작년에 경제가 어려웠을 때 소상공인들이 100만 개 이상 폐업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경제에 민감한 것이 이쪽 제조, 소상공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추경을 하는 것도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 경계선상에 있는 많은 제조기업들이 앞으로 사실 이런 여유 있는 상태에서 암묵지를 과연 얼마만큼 축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전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 가는 암묵지를 시급하게 모으는 것이 지금 타이밍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 사업 규모를 800억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다 하기 위해서는 수천억 이 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정부가 800억이라는 계획을 세웠을 때는 나름 우선적으로 사라져 가는 지역의 또 분야에 대한 디지털화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같이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아까 허성무 위원님께서 발언하셨기 때문에 오세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 허성무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성장이 있기까지는 제조업의 기반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최근에 문래동의 소공인 단지를 갔는데 정말 아깝더라고요. 청년 떠나고, 그런 명장들이 살아서 우리 대를 이어야 되는데 다 떠나서 인력이 없어요. 나이가 다 60대, 70대 되는 분들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국 봤지만 나라 전체를 다 AI 기반 인공지능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 어쨌든 이 비용 800억 갖고 이게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추경에 담아야 되나 하지만 추경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산업을 뒷받침하고 멈춤이 없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원을 하는 게 국회 아니겠어요? 나는 그 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본예산이기 때문인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제조의 명장들 이걸 담을 수 있으면 또 청년들이 유입할 수 있으면…… 산업이 이어져 가야만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잡고 올해는 이 800억을 가지고 꺼져 가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이걸 꼭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허성무 위원님.

○허성무 위원 허성무 위원입니다.

구자근 위원님께서 시범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800억이 그 시범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이걸 디지털화해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데가 제가 말씀드렸던 포항에 있는 포스코 1고로고요, 그게 등대공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원에 있는 LG전자 1공장도 세계적인 등대공장이 됐습니다.

바로 이런 암묵지들이 디지털화되고 또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제조 AI까지 융합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내는 건데, 경쟁력을 만들어 내는 건데 이게 추경에 맞나 이것은 충분히 야당 위원님께서 지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시급하고 절박합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가 미루고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제가 호소드립니다.

○구자근 위원 저는 전액 삭감이고 시범사업도 없이 이걸 단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올 투자해서 가는 데 있어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국회예정처에서도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공히 여러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다만 10%라도, 5개 사업이라도…… 지금 50개 과제 선정해 놨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중에 5개라도 선정해서 그렇게 한번 가 보세요.

그러면 50개만 되겠습니까, 이게? 과제 선정하는 것 50개면 충분해요?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제조업 과정에 그 분야별로, 섹터별로 얼마나 많은 건데 그게 이렇게 해서 완결 됩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사실 품목으로 봤을 때 시범사업 성격이 있습니다. 우선 제일 급한 데가 말씀해 주신 뿌리산업 쪽하고 그리고 조선하고 자동차 부분 쪽이 먼저 시범사업적 성격으로, 1차적으로는 그 3개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내부사업들이 그 3개의 섹터로 많이 될 것 같다는 말씀……

○구자근 위원 일단 보류해 주يس소. 보류해 주고……

○강승규 위원 아니, 지금 이게 다 인정하면서도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니까 시범사업부터 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소위원장 정진욱 잠깐만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4번은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5번 넘어가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자료 3쪽입니다.
미래모빌리티 확산제도기반 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수출 다변화 지원은 중견·중소 자동차 부품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일대일 밀착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수출 다변화, 판로 개척 필요성을 고려해서 50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면 원안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50억 5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6번입니다.

소부장공급망안정화 종합지원입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나프타 수급안정 지원 사업은 석유화학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인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프타 관련해서 기준단가, 물량, 보조율을 상향하고 나프타 외 기초유분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1조 143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나프타 수급안정 지원 사업의 목표 생산량을 제고하고 보조율을 상향하는 등 나프타 수급 지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대체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나프타 비축을 확대하는 등 중장기 대응방안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다른 부대의견으로 산업통상부는 단기적인 수입선 다변화 지원 사업을 운용하는 외에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등 최소한의 수급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먼저 증액의견에 수용입니다.

부대의견 중 대체수입선 다변화와 나프타 비축을 확대하자는 중장기 대응방안 함께 강구를 하는 부대의견에 대해 수용입니다.

마지막, 요소 국내 생산기반 재구축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23년도에 사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생산기반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강구하려고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대기업체 한 군데하고 심도 있게 논의까지 했었습니다마는 5년간 매년 2000억 원 정도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잠정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내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 대신에 비축을 최대한 늘리는 쪽으로 그 자금을 활용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잠정 결론을 그 당시에 내리고 그 이후에 그 기저하에서 추진이 되어

왔었다라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증액하는 걸로 통과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증액을 하고 부대의견이 지금 2건이었는데 차관 설명이 첫 번째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 두 번째는 수용이 어렵다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대의견만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소위원장 정진욱 첫 번째 부대의견만 수용하는 걸로 되는 거지요?

○구자근 위원 서운하지만 철회할게요.

○소위원장 정진욱 철회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부대의견은 철회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4쪽입니다.

연번 7번입니다.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역사업인 AI 로봇 및 부품 실증은 AI 팩토리, 휴머노이드 및 휴머노이드용 부품 실증을 통해 상용화 및 국산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본예산 또는 단계적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추경안 200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반면에 AX 확산의 적기 지원을 위해서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감액 없이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정부안 유지를 최소한으로 건의드리고 증액에 대해서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제가 지금 이 항목을 찾다 보니까 이게 어떤 예산이고 어떤 것이 증액되고 다른 예산과 차별성이 뭔지를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우선 이것부터 물어볼게요.

지금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으로 본예산에 567억이 있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거기에 200억을 증액한다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200억 증액하는 내용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추경에서 하겠다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이 세부사업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예, 하세요.

○산업통상부인공지능기계로봇과장 이동철 기계로봇과장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본예산에서는 저희가 서비스로봇·제조로봇 실증 이런 내역사업 트랙이

있었는데요, 거기다 저희가 AI로봇하고 휴머노이드 관련된 별도 트랙을 하나 더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강승규 위원 잠깐만요. AI로봇……

○산업통상부인공지능기계로봇과장 이동철 AI로봇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부품 실증을 별도 트랙으로 이번에……

○강승규 위원 휴머노이드 실증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200억 한다는 얘기지요?

○산업통상부인공지능기계로봇과장 이동철 예, 맞습니다.

○강승규 위원 이것은 그러면 그동안에 본예산에서는 없었습니까? AI로봇과 휴머노이드 실증사업은 본예산에 없었어요?

○산업통상부인공지능기계로봇과장 이동철 지난해 저희가 본예산에서 이것을 별도 내역사업으로 신설을 하려고 했는데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강승규 위원 못 했어요?

○산업통상부인공지능기계로봇과장 이동철 예, 정부안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로봇산업기술개발 R&D 사업에 1735억이 있어요. 그것은 뭐지요?

○산업통상부인공지능기계로봇과장 이동철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로봇산업기술개발 사업 안의 내역사업으로 휴머노이드 기술개발 사업이 있고요,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R&D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추경으로 200억을 증액하려고 하는 사업은 비R&D 사업으로 사업 성격이 근본적으로 R&D와 비R&D 차이가 있다는 점 설명 올립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로봇산업기술개발 사업 1735억 중에 휴머노이드 로봇 AX 기술개발이 59억이 들어가 있지요?

○산업통상부인공지능기계로봇과장 이동철 예, 맞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술개발을 해야 되는데 실증사업은 또 뭐지요? 여기 200억에서 실증사업은 뭘 실증사업을 해요?

○산업통상부인공지능기계로봇과장 이동철 기술개발이 된 그 부품에 대해서……

○강승규 위원 기술개발도 안 했잖아요. 이제 59억을 넣었어.

○산업통상부인공지능기계로봇과장 이동철 위원님, 설명 올리면 휴머노이드나 AI로봇이 한 가지 제품만 생산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이 생산됩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러겠지요.

○소위원장 정진욱 설명을 충분히 들으면서 하십시오.

○강승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을 답변을 해 줘야지, 다른 얘기를……

○소위원장 정진욱 아니, 거기까지 조금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강승규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에……

○소위원장 정진욱 하십시오.

○강승규 위원 자, 본예산에 휴머노이드 로봇 AX 기술개발이 59억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 여기 200억 올해 추경에서 하겠다는 실증사업에서는 이미 개발돼 있는 AI 로봇이나 휴머노이드를 실증사업 하겠다는 거예요?

○산업통상부인공지능기계로봇과장 이동철 예, 맞습니다.

○강승규 위원 어떤 분야가 있어요?

○산업통상부인공지능기계로봇과장 이동철 철강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이런 쪽의 휴머노이드를 초기 단계지만 개발한 기업들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실증을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로봇산업기술개발 사업에서 휴머노이드 AX 기술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고도화된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겠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본예산에 휴머노이드 로봇 AX 기술개발을 R&D 차원에서 59억을 넣었다는 것은 이런 분야를 기술개발해서 내년부터 또 실증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예산 순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본예산의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에 567억 원의 올해 예산을 만들 때 제조로봇 실증, 서비스로봇 실증, 규제혁신로봇, 대규모 융합 이렇게 다 해 놓으면서 AI로봇에 대해서는 실증사업이 없어요. 왜? 개발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아까 아주 저급한 단계의 휴머노이드가 만들어졌다는데 그것이 이렇게 200억 원을 추경에 넣어 가지고 실증사업을 해야 될 만큼 그런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거예요? 안 돼 있으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R&D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또한 지금 추경 예산에 산업부에서 예산 얼마 만들어 내라 그러니까 여기 갖다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본예산에 있는지 없는지, 왜 여기서는 안 넣고 다시 AI 부분만 여기 567억에 또 200억이 추가됐을까…… 제가 그것 찾느라고 지금 눈이 빠져요. 그렇지요? 이것 전액 삭감입니다.

○정동만 위원 동의합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님, 잠깐만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설명해 주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우선 작년에 본예산 안쪽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반영을 못 시켰던 점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 쪽은 기술개발을 한 것들이 다시 실증으로도 오기도 하지만 작년에 이미 반영을 하려고 했었던 것은 이 기술개발 프로그램이 아닌 상태에서도 이미 민간이나 업계에서 개발되어 있는 것 중에 바로 실증 쪽에 지원을 할 만한 것들이 있어서 작년에 예산 할 때도 별도로 프로그램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못 넣었던 부분 쪽에 대한 수요가 있고 또 요청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반영해서 그러한 기업들의 수요를 좀 만족시키고 또 실증을 빨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넣게 됐다는 점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차관님, 그러면 지금 R&D 사업에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과 그다음에 여기 7번의 사업은 영역이 다른 거지요? 대상이 다른 거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다른 차원으로 넣어져 있는 겁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알겠습니다.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지금 우리 천안 지역에 디스플레이 제품 실증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실증센터에서 점검하고 하는 것이 꼭 연구센터,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한 것만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개발된 부분도 여기 와서 실증을 받는, 점검을 받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R&D와 이 실증이 꼭 스텝 바이 스텝 개념으로 또 항목과 항목 그렇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의 말씀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게 제가 설명 올리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이 사업은 지금 감액을 주장하시는 게 굉장히 강하셔서 일단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하도록 하고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8분, 점심시간이 돼서 2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2시가 아니고 2시 10분까지입니다. 조금 넉넉하게 시간을 잡았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정진욱 시간이 돼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8번부터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8번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부 추경 심사자료 4쪽입니다.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정량표시상품의 시판품 조사 결과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작은 경우가 25%나 되어서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가 시급하므로 내역사업인 계량기·정량표시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에 13억 5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3억 5200만 원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9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9번입니다.

지역형 피지컬AI 혁신캠퍼스 구축입니다.

대구·전북 지역 캠퍼스와 연계해서 전문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현장밀착형 연구거점 확보를 위해서 10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전북 지역에 혁신캠퍼스-러닝팩토리를 연계한 모듈형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50억 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두 가지 다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대구·전북 지역 캠퍼스 전문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위해서 100억 원 증액하고요, 전북 지역 혁신캠퍼스 관련해서 50억 원 증액하는 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차관님, 그러니까 100억 원과 50억 원 각각입니까, 아니면 100억 원 하나만 지금 수용하신 겁니까?

○소위원장 정진욱 지금 각각에 대해서 하신 거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의 것에 전북 것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에요 100억 원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100억 원에 대해서입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그러면 100억 원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번 10번, 수출대응형 무기·전력지원 체계 핵심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수출형 무기 및 전력지원 체계 핵심 플랫폼 기술개발을 위해 98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위원님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연번 11번입니다.

K-로봇 피지컬AI 부품 실증-생산 연계 검증사업입니다.

국산 로봇부품 실증 환경 구축 및 국산 로봇부품 기반 피지컬AI 조기 상용화 가능성 검증을 위해서 60억 원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60억 원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2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2번입니다.

미래모빌리티 AI 소프트웨어 검증시스템 구축입니다.

AI 전장부품 개발을 위한 시험센터를 건립하고 관련 장비 구축을 위해서 4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0억 원 증액 통과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6쪽, 연번 13번입니다.

자발적 탄소시장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글로벌기준에 부합하는 자발적인 탄소시장 인증체계 구축 및 플랫폼 운영을 위해서 30억 원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0억 원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조선해양 피지컬 AI 실증 테스트필드 구축사업입니다.

자율제조 기반 AI 기술을 스마트 조선소에 도입하기 위해서 제조로봇 및 장비의 구현과 검증에 필요한 10억 원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억 원 증액 정리하겠습니다.

15번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5번입니다.

표준형 배터리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배터리 제조사와 수요기업 간 배터리 공급·수요 불일치 해소를 위한 표준형 배터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5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5억 원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자료 7쪽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연번 1번, 석유비축사업출자입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비축기지유지보수는 9개 석유비축시설의 유지보수를 통한 비축유의 안정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년도 추경안에 사전용역비 30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제5차 석유비축계획을 상회하는 비축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비축시설 증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므로 3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내역사업인 비축유구입은 연차별 비축유 확보를 통해서 석유수급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비축유 구입을 위한 예산 소요액은 한국석유공사의 자체 재원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재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사전용역비와 비축유 구입비 모두 정부 원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강승규 위원 의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지금 정부가 비축시설을 몇 개 가지고 있지요? 9개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기지로 보면 9개입니다.

○강승규 위원 9개 기지의 비축 용량이 얼마예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전체가 1억 4600만 배럴입니다.

○강승규 위원 그런데 지금 6차 석유비축계획에서 2030년 목표가 얼마입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130만 배럴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강승규 위원 1억 260만 배럴 아니예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1억 4600에다가 130만을 더하면 그렇게 됩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지요, 적다니까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030년 석유 비축 목표량이 1억 260만 배럴 아니예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승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6차 석유비축계획상에도 1억 260만 배럴인데 지금 시설은 1억 4600만 배럴이에요. 무려 4340만 배럴의 초과 시설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비축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그 어떤 사전 검토도 없이 여기에다가 비축시설 추가비용으로 30억이 필요하다고 추경 반영한 그 근거는 뭐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용량 기준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량에서, 비축이 되어 있고 실제 사용 가능한 잔여 공간으로만 보면 1400만 배럴 정도만 사용 가능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미 구입 스케줄이 있는 것을 다시 사용 가능한 양에서 제외하고 나면 실제 추가 투입 가능량이 저희들이 추산할 때는 26만 배럴에 불과한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저는 그 설명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비축시설이 있고 비축 목표액이 있다면 2030년 기준으로 1억 260만 배럴 정도만 비축해 놓으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비축 목표량인데, 비축시설이 1억 4600만 배럴인데 여기에 지금 사용 가능한 게 1400만 배럴은 비어 있는 게 1400만 배럴이라는 건가요? 그러면 이미 비축해서 쌓여 있기 때문에 추가 비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단순 산술을 하면 그런 건데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님, 대전제는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봐도 비축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훌륭한 시설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6위에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의 위기가 유사 이래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것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비축이 전 세계적으로도 훌륭하고 많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은 했지만 이 위기를 겪고 나서 지금보다 더 해야겠다고 정부 내에서 우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말씀처럼 5차 비축계획에 추가로 하고자 하는 물량을 이 추가경정예산에서 당겨서 구입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 담을 수 있는 용량까지를 채우는 비축시설도 갖추자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뭘 얘기를 하시려는 건 알겠는데 정부가 일을 할 때 계획이 있어야 되고 계획을 수립할 때는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용역도 하고 전문가의 검토도 받고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할 때도 다양한 의견 수렴도 하잖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나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비상사태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났어요. 그러면 만약에 해야 된다면, 이 비축시설도 늘려야 된다면 제6차 석유비축계획이 이거로써 부족하다…… 아까 전에 몇 차 거를 앞당겨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선 석유비축계획을 다시 수립한다든지 어떤 절차적인 걸 통해서, 이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걸 보니 앞으로 석유비축계획이 지금의 산술 규칙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추가적으로 어떤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겠고 수급 계획은 어떻게 돼 있고 중동에서 벗어나야 되겠고 뭐 이런 것과 함께 비축계획 시설을 해야지 무작정 이번에 사상 초유의 사태가 나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로, 용량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추경에서 그냥 무조건 해서…… 이게 정부 계획입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님, 위원님 지적에 저도 당연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전 용역을 하는, 설계 플러스 용역까지 하는 비용이 30억 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의 판단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 용역을 하면서 좀 더 구체화 되고……

○강승규 위원 제가 그 용역비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일단 석유비축계획이라는 게, 개발 계획도 1단계 2단계가 있듯이 일단 석유비축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수정해서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 가지고 비축시설이 더 늘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밝아 가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게 추경에서 무조건 용역비 30억 넣는다고 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걸 정부가 돈 있다고 무조건 추경하겠다, 추경 목표로 넣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적하는 게 타당치 않나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저도 맞다고……

○강승규 위원 제가 용역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용역을 하려고 하더라도 계획 수립

을 먼저 해야지요. 석유비축계획이 있는데 이미 계획상 용량을 초과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축계획을 다시 재검토해서 수립하지도 않고 어떻게 비축시설을 늘리는 용역비를 잡냐고요.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이나 이거예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전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까지 같이 이루어지는데 말씀처럼 비축계획들이 이미 5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수급기본계획처럼, 전력수급기본계획도 간이 기본계획을 간년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축계획을 사전 용역을 시행해 가면서 먼저 비축계획을 수정해서 하는 것을 같이 추진해서 그 부분이 되는 전제하에 이 용역을 추진 하겠다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하여튼 저는 이 계획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합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혹시 다른 위원님……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저는 강승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추경 이야기하면서 국가 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맞지 않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주야장천 민주당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맞지 않다 또 전쟁 추경 요건에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용역비 30억 원 어떻게 산출됐어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됐습니까, 30억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구자근 위원** 예.

○**산업통상부석유산업과 윤종성** 안녕하십니까? 석유산업과 담당 팀장 윤종성입니다.

비축시설 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기지를 새로 건립하는 조건으로 해서, 과거 13년도에 울산 석유비축기지 용역비를 고려해서 산출했습니다. 당시에 총……

○**구자근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전체 총액이 정해져 있고 그 총액에 맞춰서 사업을 발굴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2013년도 거, 13년 전의 울산 석유기지 지하화 용역 기준을 당겨다가 그대로 비슷하게 용역비 30억이라 해서 이렇게 넣은 건데 지금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여유 용량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유 용량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걸 시작해도 적어도 칠팔 년 걸리는 사업인데 굳이 추경에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아까 차관님께서 답변하실 때도, 사용 가능한 용량이라는 의미가 뭐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첫 번째는 잔여 용량 중에서 이미 구입 스케줄이 정해져 가지고 들어올 물량들은 가능 물량에서, 가능 공간에서 빼야 되고 또 하나는 용량이 100이라고 그럴 때 이 100을 꼭 다 쓸 수가 없습니다, 탱크가. 한 80 정도만 써야만이 여러 가지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서 데드 스탁(dead stock) 개념의 20% 정도를 빼고 나면 실제 추가 저장 가능한 용량이 그렇게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자근 위원** 국가 정책이 예측 가능해야 되고 또 신뢰성을 가져야 되는데 분명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또 국가에서 이야기한 석유비축계획을 발표했을 때는 2030년까지 적어도 1억 배럴입니다, 한 1억 260만.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전체 풀로 채워도,

2030년까지 폴로 채워도 4000만 배럴이 남는다고 저희가 보는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 시점에, 추경에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지금 용역하게 되면 부지 선정이라든지 부지 선정할 때 수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게 보통 한 6년에서 칠팔 년 걸리지 싶은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굳이 추경 때 이렇게 들어와서 소모적 논란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소위원장 정진욱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지금 말씀해 주신 2013년의 것을 갖다가 자료로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2013년이 석유비축기지의 마지막 추진 연도입니다. 제가 2012년도에 석유과장 할 때 마지막 저장탱크를 완공하는 단계를 하고 있었을 때고 그 이후에는 석유 저장탱크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까지 해 왔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번 사태 전까지는 의미 있는 판단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용 용량을 저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다고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상황임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이 문제는 우리가 홍수가 나면, 그동안에는 한 50년 주기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100년 주기의 준비를 해야 되는 때가 오고요, 때로는 200년 주기의 홍수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석유비축분이 사실 알고 보면 많지 않다, 굉장히 잘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지 않다 또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가 훨씬 적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언젠가는 비축기지 늘리는 걸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늘리는 비축기지의 용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탱크 기준으로 40개를 더 추가해서 2000만 배럴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2000만 배럴이면 우리가 며칠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인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전쟁 전 기준으로 하면 10일이 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그렇습니다. 늘려도 10일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4000만 배럴 이렇게 이야기하면 2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소위원장 정진욱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저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이 상황을, 정부가 하는 일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왜 2013년 자료를 가지고 했느냐 또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저는 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추가로 말씀 듣고 논의가 정리가 안 되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관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이재관 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들 지적한 것처럼 비축 용량을 늘리

기 위해서는 계획의 변경과 그리고 그런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건 맞는 건데 지금 중동 사태를 겪으면서 이것이 오늘 만약에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그 수급의 여파가 최대 5년 정도까지 상당히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평상시에 예측했던 거하고는 새로운 계획의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정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정상적인 예측 프로그램에 의해서 확보하기에는, 사실 그게 정상이지만 그러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설명을 하시는 게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획의 변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그 정황을 말씀하시는 것이…… 2000만 배럴을 추가 확보하는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정부가 필요 없는 비축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왜 계획에 의해서 비축 물량을 늘리지 못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이 사업 예산의 확보에 더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비축계획을 바로 마련해서 추경에 보고를 드리면서 할 수 있었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강승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선후가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용역 쪽에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간이 비축계획을 수립해서 산업위에도 보고드리고 그리고 용역 계획의 결과가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정부 쪽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이 건은 의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위원장님!

○소위원장 정진욱 추후 심사 때 말씀해 주세요.

○구자근 위원 아니아니, 이거 토론하면서 이야기는 들어야 되지……

○강승규 위원 토론 좀 해, 토론 좀 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구자근 위원 의견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이야기는 들어 줘야 되지.

○소위원장 정진욱 자, 2번 안건 가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토론해야지!

○소위원장 정진욱 추후 심사 안 하실 겁니까?

○강승규 위원 추후 심사하더라도 지금 얘기도 못 했어. 정부 얘기……

○구자근 위원 한마디씩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승규 위원 팩트를 들어야지요, 팩트를!

○소위원장 정진욱 아니아니, 충분히 하셨고요. 아니, 됐습니다.

○구자근 위원 뭘 충분히야!

○정동만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정진욱 2번 안건 가 주세요.

○강승규 위원 정진욱 위원장님!

- 소위원장 정진욱 2번 안건 가 주세요.
- 정동만 위원 아니, 위원장님!
- 소위원장 정진욱 2번 안건, 석유유통관리 사업……
- 강승규 위원 아니, 팩트를 확인하는데 왜 질문도 못 하게 하고 무슨……
- 소위원장 정진욱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 구자근 위원 아니, 소위를 이래 운영하는 게 어딴어! 도로 이렇게 유지하는 겁니까?
- 강승규 위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 구자근 위원 질의하도록 해 줘야 되지.
- 정동만 위원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위원장님 마음대로 합니까?
- 구자근 위원 질의하도록 해 줘야 되지요.
- 강승규 위원 질의를 하게 해야지, 질의를!
- 소위원장 정진욱 진행은 제가 합니다.
- 강승규 위원 추가질의하더라도 질의를 하게 해야지, 뭘 그래!
- 소위원장 정진욱 진행은 제가 합니다.
- 강승규 위원 안 돼요. 뭘 지금……
- 구자근 위원 아니, 이렇게 독단적으로 운영을 하세요?
- 강승규 위원 팩트를 확인도 안 하고, 팩트도 물어보는데 정부 답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지 이게. 추가질의하더라도……
- 소위원장 정진욱 지금 문신학 차관님이 충분히 답변하셨어요.
- 강승규 위원 물어볼 게 있어요.
- 구자근 위원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 소위원장 정진욱 충분히 답변하셨고……
- 정동만 위원 위원장님 생각이고.
- 강승규 위원 정진욱 위원장!
- 소위원장 정진욱 아니, 잠깐만요.
수석전문위원님, 진행해 주세요.
- 구자근 위원 질의할 수 있도록 딱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강승규 위원 진행 안 돼요. 하지 마요.
- 소위원장 정진욱 이후에, 추후에 심사합니다.
- 강승규 위원 뭘 추후에 심사를 해요?
- 소위원장 정진욱 그때 발언해 주세요.
- 구자근 위원 아니, 충분하게 준비해 왔는데 문도록은 해 줘야 될 거 아니야.
- 소위원장 정진욱 아니아니, 그때 발언해 주세요, 그때.
- 강승규 위원 혼자 해.
- 소위원장 정진욱 의견이 정리가 안 될 때는……
- 강승규 위원 안 돼요. 안 돼요, 못 나가요.
- 구자근 위원 의견 들어 보고 정리를 해야 되지!
- 권향엽 위원 위원장님!
- 소위원장 정진욱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보고해 주세요.

○강승규 위원 보고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구자근 위원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한다고 아까 모두에 이야기하셨지 않았습니까? 밤이 새도록 들어 본다면요?

○소위원장 정진욱 당연하지요.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들어 봐요, 들어 봐요.

○구자근 위원 그러니까 들어 보라니까?

○소위원장 정진욱 준비하세요, 밤새울 준비.

○구자근 위원 아니, 한 바퀴는 돌아야 될 거 아니야.

○소위원장 정진욱 한 건을 가지고 오래 논의해서 거기에서 뭔가 생산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으면 모르지만……

○강승규 위원 생산적인지 아닌지는 정진욱 위원장 혼자 판단해요? 여기가 당신 혼자 국회야? 위원장 앉으니까 뵈는 게 없어요?

○소위원장 정진욱 여러분께서 추후 심사 때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안 돼요, 안 돼요.

○소위원장 정진욱 오늘 저녁에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강승규 위원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수석전문위원, 하지 마세요.

○소위원장 정진욱 결과는 똑같습니다.

○강승규 위원 수석전문위원, 하지 마세요.

○구자근 위원 의견을 듣도록 해 줘야 되지.

○정동만 위원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소위원장 정진욱 상임위를 무슨 필리버스터 하듯이 하려고 오신 것 같은데……

○강승규 위원 위원장이 무슨, 여기가 독재 정치야?

○구자근 위원 참나, 회의 진행을 어떻게 이래 해?

○소위원장 정진욱 국민의힘, 일 좀 합시다.

○강승규 위원 일을 하는 거야, 이게.

○구자근 위원 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일하고 있잖아, 지금.

○소위원장 정진욱 보류한 다음에……

○구자근 위원 일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소위원장 정진욱 추후 심사하면 됩니다.

○구자근 위원 그거는 위원장 생각이요! 일하고 싶다니까요.

○소위원장 정진욱 지금 2번인데 앞으로 해야 될 게 한 3~40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구자근 위원 그거야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지. 왜 본인이 예단해?

○소위원장 정진욱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안 됩니다, 얘기 들으세요.

○소위원장 정진욱 2번 안건 해 주십시오. 보고해 주세요.

○강승규 위원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소위원장 정진욱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과가 똑같습니다.

○정동만 위원 뭘 결과가 똑같아요?

○강승규 위원 결과가 똑같은지는…… 뭘 소리 하는 거야!

○구자근 위원 공예의 관심법 쓰는 거야, 뭐야!

○소위원장 정진욱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국정발목을 잡는 이걸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지켜보니까 그런 거지, 지켜보니까.

○정동만 위원 우리가 언제 국정발목을 잡았어요? 궁금한 거는……

○오세희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권향엽 위원 위원장님, 좀 이야기 들어 보시지요.

○구자근 위원 듣도록 해 줘야 되지.

○소위원장 정진욱 아니요, 아니요. 안 하겠습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구자근 위원 소위를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강승규 위원 결과 똑같으면 혼자 운영하지 뭐 들어!

○소위원장 정진욱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정진욱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 석유비축사업출자에 대해서 정동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 차관님, 정부의 비축 대응이 너무 무관심하고 안일했다 그렇게 봅니다. 올해 비축예산을 감액했지요? 230억 감액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결국 이게 계약이 체결되면 12월 달에 도입되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12월까지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정동만 위원 그래서 금번 추경예산이 확보된다고 당장 석유가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석유공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지금?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연내 도입 말씀이십니까?

○정동만 위원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연내 도입까지는 가능할 걸로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런데 석유공사 재원은 그대로 두고 무작정 지금 추경만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 부분에 대한 판단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선 석유공사의 재원이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의 고갈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재원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고, 비축유를 구매해야 되는 경우에 정부의 재정지원 쪽을 반영해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는 합니다.

○정동만 위원 석유공사 재원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석유비축기지 운영 수익만 해도 3200억입니다, 지금. 차관님 말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 부분 쪽은 전체 석유공사 예산 지출입 계획 쪽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 쪽에 쓰게 되면 석유공사의 다른 사업이나 다른 것들을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석유공사도 지금 문제가 있네요. 국내 정유사와 200만 배럴 확보 계획을 추진하다가 이를 파기하고 90만 배럴을 해외에서 판매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알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한쪽에서는 석유 팔고 한쪽에서는 비축 필요하고, 이렇게 추경을 한다는 말입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 부분 조금만 설명드리면 그게 공동비축 부분 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축유하고는 다른 성격의 사안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공동비축에 우리가 우선 구매권을 발동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석유공사가 잘 발동을 해서 외국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게 바람직했었다라고 우선적으로 산업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현재 산업부가 석유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렇지요.

작년 내내 우크라이나 전쟁 하고 있고 중동 전쟁이 고조되고 하면 정부에서는 이 시그널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측을 하고 또 비축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정동만 위원 이 부분에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재산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강승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 저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비축시설이 남아도는데도 비축시설을 추경으로 반영하는 이 정부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석유를 사지 못하고 있는데, 석유를 어디서 수급을 못 해 오고 있는데 시설이 부족하고…… 그동안 비축을 많이 해 났으면 이 사태를 우리가 좀 현명하게 넘길 수 있겠다라는 인상을 주듯이 추경에다가 갑자기 칠팔 년 걸리는 비축시설을, 시설이 남아도는데도 아직 석유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장차 상당한 후에나 채워서 효용가치가 있는 비축시설을 추경에다 굳이 하겠다고,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하는 것이 정부가 추경을 바라보고…… 이 중동 사태에 따른 국가 위기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유가 양등에 따른 다른 피해 산업, 여러 가지 석유 연관 제품 등에 대한 직접지원 또는 유류세 추가 인상 등 석유가 양등에 따른 지금의 국민 피해, 서민경제를 보듬으려는 노력보다 정부가 이것을 은근히 살짝 포장해서 비축시설을 해서 우리는 이제라도 제대로 대응하겠다라는 거짓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입니다.

석유비축시설은 지금부터 충분히…… 우리 비축계획이나 이런 것이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50년 빈도의 위기, 100년 빈도 200년 빈도의 위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라서 홍수 조절 방법을 바꾼다 하듯이 그렇게 바꾸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필요한 그리고 국민의 세금이 어딘가에 쓰여야 된다고 할 때는 제대로 쓰여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맞지 않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두 번째, 그런 측면에서 유가가 급등해서 우리 경제에 많은 부담이 된다면 산자부에서도 그런 쪽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쪽에 이번 추경의 많은 부분 등을 조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불요불급하거나 뭔가 포장하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지원,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지적하지 않습니까? 화물, 택시 그다음에 운수업계 이런 데 직접지원을 하고 유류세를 낮추든지 유가 급등에 따른 다양한 지원, 그냥 뭐 어디다가 돈 뿌리고 10만원에서 60만 원 전 국민에게 뿌리는 이런 부분 등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들 지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먼저 의사진행 관련해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개인 의견이니까 그냥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소위를 해 보면 발언시간을 제한을 안 하고 발언을 하게 되잖아요. 사실 소위는 여러 가지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회의 절차기 때문에 발언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의 관행이 발언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하는데 그래서 소위에서의 발언은 발언 당사자가 가능한 한 좀 절제하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발언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회의가 안 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몇 건 하다가 썩 늘어져 버리면 뒤에는 막 줄속 심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유비축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이나 예산 문제를 논의할 때 대개 보면 의도를 의심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편성권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정치적으로 청와대나 이런 데서 누가 오더 때린 예산 몇 개 안 돼요,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담당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일 열심히 하자고 만들어 낸 예산편성안인데, 그래서 의도를 의심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책적인 판단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정책 판단은 편성권을 정부에 주고 의결권을 국회가 갖는 이유는 편성권이 엄청나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영역의 업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복잡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감안해서 편성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편성 관련해서는 정책적인 의견 차이가 있다면 가능한 한 정부의 편성 의견을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의결에 필요한 명백한 사유가 있다면 또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이 비축 문제는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지금 이 돈을 여기다 투입한다 그래서 이게 허투루 쓰여지는 돈은 아니거든요, 이걸 지금 쓰느냐 나중에 쓰느냐 이런 차이는 좀 있겠으나. 그런데 정부가 정책적인 판단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비상 상황이고 불가촉한 상황이니깐 이 불가촉성에 대비하기 위한 이 정도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여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왜 필요하냐를 일일이 따져 봐야 우리 소위 차원에서 디테일한 근거를 가지고 결정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대한 검토 또 상황에 대한 판단에서 볼 때 정부의 이 비축 확대 의견에 대해서 그냥 수용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권향엽 위원님.

○권향엽 위원 오늘 비축기지시설 확충에 대한 장시간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비축기지, 여기 추경에서 30억 원 필요한 부분에는 시설의 안

전성을 좀 더 점검하고 시설 보완·교체하는 그런 비용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전쟁 상황이 일어나리라고는 작년 예산을 심사할 때 예측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이렇게 봉쇄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수입 다변화에 대한 노력도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비축시설이 남아도는데 새로 비축시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들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면밀하게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30억 정도의 이 추경은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비축기지를 연구용역하고 기지를 확보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또 신속하게 진행되기가 어려운 그런 사업의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안대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제대로 준비를 해 나가게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어떠십니까? 지금 1번 석유비축사업출자 관련된 논의를 길게 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들이 다 상당히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비축기지를 사실은 쇠를 달궜었을 때 두드리듯이 이 문제가 부각됐을 때, 평소 에 필요하더라도 부각됐을 때 해결하는 것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로 저희가 굉장히 격하게 했고 또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구자근 위원 안 됩니다. 양보 안 됩니다. 삭감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그러면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1번 안건은 보류하고 추후 더 논의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번 안건.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가 아니고 지금 두 번째 것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아까 1번을 같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신 겁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밑의 것 질의를 해야 되는데요.

○소위원장 정진욱 비축유구입과 관련된 걸 추가로 질의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구자근 위원 예, 나는 따로따로 나눠서 하는 줄 알고.

○소위원장 정진욱 그것도 지금 감액의견이신 거지요?

○구자근 위원 아니요. 감액의견은 아닌데 아까 정동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추경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 재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석유공사 재원이 말씀하신 대로 고갈되었다, 상황이 없다, 넉넉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저희들이 자료 받은 것은 한 3000억, 4000억 그렇게 여유가 된단니까 굳이 정부 재원으로 말고 석유공사의 재원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이 계획 세울 때는, 예를 들어 환율하고 배럴당 유가가 지금 현재는 또 다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수정하든지 여러 가지 계획에 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비축 목표도 수정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액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석유공사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그러면 보류하는 걸로 하고요.

2번,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8쪽입니다.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입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석유통합관제센터는 석유시장 불법행위 신고 창구 통합과 원스톱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석유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추경 편성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업비 165억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내역사업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검사시험장비는 석유제품 등의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정 검사시험장비 도입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추경 편성 목적·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46억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석유유통관리지원은 석유제품 유통 전 단계에 대한 감시, 현장점검 등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제반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추경 편성 목적·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12억 40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반면에 단속 횟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본예산과 동일하게 동결되어 있어서 부실 검사 및 현장 안전 문제가 있으므로 인건비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 2건이 있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기존 오피넷과 석유관리원의 시스템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산업통상부 및 한국석유관리원은 인건비가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인력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9쪽에 부대의견 2건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및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통합관제센터 관련 정보화시스템의 구축 계획 및 요구 기준, 세부 사양 등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연내에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 완료를 위해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통상부는 중동 사태에 대한 대응 필요성에 따라 석유통합관제센터의 구축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석유통합관제센터, 검사시험장비, 석유유통관리지원 이 3건에 대한 예산에 대해 정부 원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또한 부대의견 4건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강승규 위원 의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이 부분도 정부가 이번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관리 차원에서 또 유가 관련 전쟁 추경 관련해서 본말이 전도돼 있다,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 하나로 시장에 대해서 기본과 또는 부대적인 상황 등에 대해서 전도돼 있다 이렇게 제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석유 품질관리, 그러니까 유가가 시장에서 통용되는데 가격이나 수급 정보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가짜석유 또는 적절하지 않은 가격 이런 부분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정부가 통합으로 관제한다, 통합으로 컨트롤하는 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소위 말해서 저희들 시각에서 얼마나 알토당토않은 얘기냐면 석유도 시장의 제품이고, 이게 무슨 국가가 품질을 관리하고 유통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작은 시장이 아니예요. 지금 여기가 사회주의 경제도 아니고.

석유라는 것은 엄청난, 석유공사도 있고 다양한 석유 유통기관에 의해서 시장에서 관리되고 있어요. 거기에 가짜석유가 통용되고 유가 인상이 적절한 시기에 따라서 제대로 안 되고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시장에서 가격이 교란된다는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는 다른 대부분의 공산품이든 제한된 공급 상품이든 시장에서 통제되는 걸 원칙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지금 석유통합관제센터에서 해야 된다는 상당수 일을 이미 석유공사, 석유관리원 이런 데서 적절히 가격 정보도 제공하고 있고 품질·유통 인프라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오일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한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니까 갑자기 통합관제센터를 만든다, 그래서 매번 점점 나와서 월 2000회 품질·유통 검사를 확대하고…… 그동안은 가짜석유가 있는데 그 가짜석유가 문제가 안 됐습니까? 이번에 중동 사태가 나니까 가짜석유가 아주 시장을 교란할 만큼 엄청나기 때문에 이렇게 관제센터를 새로 223억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 석유 시장이 그러한 상태인가요? 유통이 문제인가요? 지금 중동에서 수급이 잘 안 되고 우리 정부가 수급을 잘 못 해 와서 그게 문제지요. 정부가 못 하는지 중동 사태 때문인지 트럼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런 것을 계속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때는 석유 저장시설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시설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은 또 석유가격이, 수입은 제대로 공급되는데 가짜석유가 유통되고 가격 통제가 잘 안 돼서 폭리를 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이것을 처방하는 게 맞습니까? 대한민국이 이게 맞습니까? 좀 양심에 찢리지 않아요? 난 이걸 보고…… 그리고 여기에다 225억 원을 넣는대요.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였어요? 이 정도로 우리 석유 유통시장이 이렇게 천박했어요? 그래서 석유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야 돼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보고요.

시급성이나 그다음에 기존 시스템은, 그러니까 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오픈넷 그것은 완전히 구시대 시스템이에요? 필요 없어요? 지금 시중에서 유통되는 것 다 그냥 가짜로, 정유회사별로 지들 마음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석유 시장이 교란돼 있어요? 그래서 석유가격이 이렇게 막 폭등해요, 지금? 아니잖아요.

원인과 그 원인에 대한 처방이 있어야지 원인 처방 없이 보이는 것을 살짝 눈가림해서 주유소에서, 정유사에서 폭리 취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최고가격제 해야 되고 이렇게 유통 관리해서 제대로 관리하면 관리할 수 있다, 중동에서 아무리 석유가 공급이 안 되더라도 우리 것 다 관리하면 된다…… 이런 걸 국민들한테 속이는 거잖아요. 이것 저는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허성무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정진욱 허성무 위원님.

○**허성무 위원** 차관님,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석유통합관제센터 이게 석유관리원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거기에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부처 내에 만드는 겁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지금 위원님 질문과 강승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좀 연결돼 있어서 같이 말씀 올리면 통합관제가 석유 유통시장을 컨트롤하겠다는 거고 하는 취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가격 정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석유공사의 오픈넷으로 돼 있고 가짜석유 때문에 물량 정보를 받았던 것들은 아주 십수 년 전부터 석유관리원이 쪽 보고를 받고 유지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몇십 년간 석유 유통시장을 관찰해 보면 항상 이러한 석유 위기 또는 급격히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시기에 유통시장에 항상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 부분은 가장 큰 게 옛날에 잘 아시는 세눅스부터 시작해서, 가짜석유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차량떼기, 탱크로리떼기라고 하는 무자료 거래, 도유하는 문제 그 부분들이 여지없이 항상 이러한 에너지 위기 때 꼭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석유 유통시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라는 말씀 하나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 시기에 먼저 석유관리원에서 물량 자료를 받고 나중에 석유공사가 가격 정보를 받다 보니까 두 정보가 같이 있어야만 이 위기 때 건전한 유통시장을 하는 데 투명한 정보도 되고 그다음에 정책을 갖추는 데 의미가 있는데, 97년에 석유산업이 자유화가 됐는데 다시 돌아가자는 그 말씀이 절대 아니라……

○**허성무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차관님께 여쭙보는 게 석유통합관제센터가 그러면 산자부 소관으로, 산자부에서…… 시행 기관이 어디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시행 기관은 석유관리원 쪽으로 되는데 산업부와 가까운 데에 이 센터를 두고 통합 시스템을 좀 갖추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허성무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가적 위기 상황 아닙니까, 중동 전쟁이? 그리고 우리가 여러 차례 에너지 위기도 겪었고 그랬는데, 국가적 위기 상황이고 국민들한테는 매우 불행한 시기인데 항상 이런 위기와 불행을 틈타서 폭리를 취하고 자기 자신의 부를 늘리기 위해서 아주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창궐을 하지요. 이런 시기 때마다 창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넘어가면 가짜 휘발유가 판을 치기 시작하지요. 그것은 뭔가 하면 가짜 휘발유를 유통시켰을 때 유류세를 빼먹는 거지요. 국가의 세금을 통째로 빼먹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국가의 세금을 포탈해서 치부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는 세눅스처럼 그런 유사 제품도 있고 그다음에 톨루엔하고 솔벤트를 섞은 가짜 휘발유, 그다음에 휘발유 양을 줄이고 거기에 일부 등유를 섞어서 휘발유라고 하는 가짜, 그다음에 등유에다가 색소를 타서 디젤로 해서 파는 것, 이런 온갖 가짜들이 판을 치고……

평소에도 약간의 가짜들은 유통되고 있지만 이렇게 유가가 폭등될 때는 그 폭리 규모가 너무 커서 아주 가짜가 초대형으로 유통되는 경우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석유 품질과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특히 국세를 빼먹는 이런 아주 파렴치한 범죄 집단을 단속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처럼 그런 걱정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실

질적으로 이걸 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국가 위기 사태를 악용해서 정말로 국가의 세금을 축내고 폭리를 취하는 이런 나쁜 자들을 제대로 단속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품질관리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그런 사업이다. 그래서 제대로 이번에 구축해서 유가가 오를 때마다 나타나는 이런 나쁜 형태들을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산은 타당하고 반드시 이번 추경에 넣어서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이게 센터 구성이 되면 인원 구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될 텐데, 아까 부처 근방이라니까 세종쯤에 갖다 놓겠네요.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그 센터의 구성원들에게 권한이 다 주어지나요? 제도적 정비도 필요 없이 그 센터의 고유 기능으로 권능적으로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다 소화가 되나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피넷에 들어오는 가격 정보와 물량 정보가 워낙 영업비밀과 관련된 것이어서 그 각각에 대해서 우려되는 것이 누설되거나 그러지 않는 제도적인 또는 규정상의 틀들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살펴 보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 통합관제라는 개념 속에서 묶여져야 되는 거라고 치면 전체 컨트롤타워가 되려면 가격이나 품질 부분만은 넘어가야 되는데 가격 표시는 제각각이잖아요. 예를 들어 가격 표시는 지자체에서 관할하고 담합은 공정위에서 하게 되는 거고 매점매석은 재경부에서 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각 기관마다 다 다른데 이걸 컨트롤타워라고 이야기하면……

담합 같으면 공정위의 고유 업무인데 이 컨트롤타워에서 가지고 와서 컨트롤할 수 있나? 나는 이 제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사항들을 고쳐 가지 않고 이걸 그냥 껌데기만 갖다 놓고 인원만 늘려서…… 그러면 인원 구성을 어떻게 할 거예요? 각 부처에서 한 명씩 만나 품질관리원에서 돌리나, 센터장이 급이 어느 정도 되고…… 산업부에서 지금도 다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석유관리과에서.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님,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관제라는 게 석유공사 자료와 관리원 자료 두 개를 통합 관리한다는 의미지…… 제목이 ‘관제’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가 아니라 두 개의 시스템을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관리해서 통합 시스템을 갖추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구자근 위원 그런데 너무 오버하는데, 그 정도 같으면 산자부에 유능한 부처 공무원들이 있는데……

저는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가격부터 해서 품질부터 해서 담합부터 해서 매점매석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부 기능 속에서 컨트롤을 해서, 지금처럼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을 서로 보고하는 체계가 달라서 혼선이 생기는 부분들을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종합적으로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고 보고

를 받고 ‘내가 삭감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했다. 그래서 내가 철회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야기 들어 보면 그 두 가지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관제센터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지요, 그것.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이 나중에 활용이 되는 것은 말씀처럼 매점매석이니 담합이니 또는 탈세니 하는 것의 기초 자료로 당연히 사용됩니다. 사용되지만 그것은 정부부처에서 필요로 할 때 그 규정에 의해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 네 개의 기관들을 이쪽 센터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관제·통제하고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까지는 아닙니다.

○**구자근 위원** 그런데 뭔가 부족해요. 내가 보고받을 때는…… 하여튼 삭감은 철회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더는 말 못 하겠는데, 차관님 이야기 듣고 나니 내가 더 혼동스럽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 이것은 그냥 정부 의견을 수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강승규 위원** 아니에요, 저는 지금 삭감이에요.

○**소위원장 정진욱** 그러면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저는 철회했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구자근 위원님은 삭감 의견 철회하신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3번, 석유유통구조개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석유유통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석유시장 감시단은 수요자인 소비자 관점에서 유통시장을 감시하고 소비자의 유통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사업인데 추경 편성 취지 및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2억 80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석유 수급불안 등 고유가 시기에 반복되는 석유시장 유통구조와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서 정기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증액 의견에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허성무 위원**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구자근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제가 답변할 게 1번과 2번이 각각 있어서, 석유시장 감시단 사업은 정부 원안 유지를 건의드리고 두 번째 신규 내역사업으로 추가로 3억 원을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안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그렇지요.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보고받고 대충 했는데 이것 한번 8000만 원 깎으세요, 그냥. 8000만 원 깎고 2억만 하면 됩니다. 추경 하고 하는데 여기 세미나 하고 축제하고 이것 필요 없습니다. 8000만 원 깎고 2억만 갖고 가세요.

그래도 나쁜 주유소, 좋은 주유소 가리는 게 나는 그렇게 탐탁지 않아요. 이것 고통 분

답해야 되는데, 이 감시단 어느 단체에 둘지 모르겠지만 내가 더 파고들어 가지는 않겠어요. 어느 단체에 줘서 이 권한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가 가지고 좋은 석유 주유소, 나쁜 석유 주유소 레테르 붙이는 건데…… 지금 고통 분담하자고 이렇게 가격 제한해 가지고 해 놓고 뒤돌아가서는 이 주유소 아주 나쁜 주유소야, 이 주유소는 좋은 주유소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대신에 그 8000만 원 깎으세요.

○소위원장 정진욱 차관님, 어느 단체에게 감시단을 주는 겁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아닙니다.

시민단체 쪽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특정 단체를……

○강승규 위원 시민단체가 단체지 그러면 뭐예요, 그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어느 특정의 한 단체를 지정하지는 않았……

○소위원장 정진욱 그런 건 아니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구자근 위원님 말씀을 저희 정부 쪽에서 받아들여서 8000만 원 감액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향엽 위원 그런데 사실은 나쁜 주유소, 좋은 주유소를 가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변두리 쪽으로 가면, 도농복합지역 같은 데 가서 보면 폐주유소인데 실제로 저장장치는 있고 주유소로 판매 행위는 하지 않는 데 그런 데를 통해서 사실은 불법 유통 그다음에 제품 잠금 그러한 현상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유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중간에 사실은 매점매석이라든가 원유 잠금 그런 현상들이 있어 가지고 원활한 수급을 방해한다면 그것도 문제겠지요. 그런 점은 좀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명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이재관 위원님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재관 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3번 안건은 정부에서 8000만 원 감액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면 감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그러면 3번 안건은 8000만 원 감액을 반영하고 그 밑에 있는 3억 원 증액도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그렇게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연번 4번입니다.

석탄비축자산관리비입니다.

정부 석탄비축 물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부 비축기지 간 관리·방출을 위해서 10억 7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으로 10억 7200만 원 증액 정리하겠습니다.

5번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연번 5번, 폐광대책비입니다.

내역사업인 근로자대책비는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한 광부들의 헌신을 기리는 광부의 날 지자체 기념행사 지원을 위해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수용입니다.

○허성무 위원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광부가 사라지고 있는데 광부의 날이라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그걸 위해서 행사비를 이렇게 쓴다는 것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석탄 탄광이 다 이제는 문을 닫았잖아요.

○소위원장 정진욱 정부에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광부의 날은 정기국회에서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하면서 논의가 됐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간에 우리나라 산업화의 석탄 부분 쪽에서, 특히 석탄업에 종사했던 광부들의 헌신을 기념하는 날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우리 상임위의 의견이 모아지고 기념일로 제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자체의 기념의 날 행사잖아요. 저도 지자체장을 했지만 지자체의 기념의 날 행사는 지자체가 예산을 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원도나 또 그 산하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예산을 섞어서 해야 되는데 이걸 국비로 지원한다는 게 근거가 있냐는 말이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이걸 지금 법정기념일로 하겠다라고 법에 돼 있어서……

○허성무 위원 그 법정기념일이 무지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달력을 펼쳐 보면? 그것 다 국비로 지원합니까?

○구자근 위원 제헌절 하고 하지.

○허성무 위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구자근 위원 광복절도 하고 제헌절도 하고……

○허성무 위원 광복절하고 제헌절하고 같은 날이 아니지, 그것은 국경일이고 이것은 단순히 국가기념일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신중하고 정중하고 또 정밀하게 다 판단해야 되지만 감액을 하기 위해서 이유를 대려면 끝이 없는 것이고 증액을 하기 위해서 이유를 대려면 끝이 없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도 제가 굳이 감액을 하려고 증액에 반대하려고 하면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구자근 위원 반대하시지요. 입장 넣어서 반대하시면 되지, 뭐.

○허성무 위원 위원님, 왜 그러십니까? 지금 내가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비웃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비아냥거리면.

○구자근 위원 아니, 놀리는 게 아니라 반대를 하시면 되지, 그것 뭐……

○소위원장 정진욱 구자근 위원님, 말씀 중일 때……

○허성무 위원 아니, 나는 지금 정부 측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자근 위원 예.

○허성무 위원 그래서 정부가 동의를 하고 안 하고, 정부의 의견으로 판단을 하시겠지만 만약에 이런 기념일이…… 물론 산자부 산하의 기념일은 그리 많지 않겠지만 전 정부 부처에 국가가 지정한 이런 기념일들이 많은데 이것을 전수조사해서 정부 예산 지원이 얼마가 있는지 확인해 봤을 때 과연 전 기념일에 다 이렇게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있느냐는 말이지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그러면 이게 보편타당한가 그런 것을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부처나 다른 기념일에 대한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으시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만……

○허성무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지적을 하는 거고요.

물론 과거에 어려움을 겪고 희생된 분, 산업화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거니까 지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번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증액을 반대하지 않지만 이런 부대의견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저도……

○소위원장 정진욱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광부의 날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항상…… 저는 구미라는 특수성을 가진 공단을 가지고 있는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늘 민주화 유공자법을 민주당에서 이야기할 때 산업화 유공자법이 왜 없을까, 특별법이…… 그래서 저도 산업화 유공자법이라고 특별법을 하나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광부의 날이라고 이렇게 어느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실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에, 그 엄혹한 시절에 산업 현장에서 그분들의 희생과 노력과 그런 뒷받침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과하지 않다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필요성은, 더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쯤 되새겨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우리 미래 청년들, 청소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어떤 발자취 위에서, 이 전쟁의 상흔 위에서 오늘의 선진국 대열에 끼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씩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 질문 하나만 할게요.

차관님, 이것 2억 원이 계속 연례적으로 책정되는 예산은 아니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추경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단발성으로……

○김종민 위원 앞으로 연례적으로 계속 책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산업통상부석탄산업과장 김정기** 이 사업 담당하고 있는 석탄산업과장입니다.

아까 이것을 계속할 거냐 말씀 주신 것과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뭐 하는 게 있느냐, 그런데 일단은 이 기념일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 모두 적합한 행사,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강원도에서 기금 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을 1억 원 정도 태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냥 단발성으로 끝날 거냐, 저희는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종민 위원** 그러면 제가 의견 하나 드릴게요.

저는 이 증액은 동의하는데 광부의 날 지정할 때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광업인의 날과 광부의 날에 대한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광부의 날이라는 게 우리의 지나온 좀 어려웠던 역사를 기념하고 기리는 면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공감대를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광부의 날이 지정된 건데 기념행사도 그런 점에서 아직 그분들 중 살아 계신 분들도 남아 있고 또 아직 이 지역에 광업 또 광산, 광부들의 삶의 흔적이 남아 있는, 그 시기의 이런 것을 기리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지원을 하는 건데 이것을 계속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고정적인 걸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 점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그래서 자체적으로, 처음에는 광부의 날이 지정이 됐으니까 중앙에서 좀, 산자부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이후에는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 드립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유념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그러면 5번 폐광대책비 2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6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6번,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2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으로 인하여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재자원화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현황 파악 및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산업통상부는 영세 재자원화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미비측 전략광물의 비축 확대를 추진하고 산업별 수요 구조 및 수입 차질 발생 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조사·연구 기반 구축을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부대의견 두 가지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대의견을 넣어서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7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연번 7번 최고가격제 이전 가격 산정 갈등 관련 정부의 중재 필요와 관련한 부대의견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 공급된 물량의 가격 산정과 관련해서 정유사 및 알뜰 3사 간의 갈등을 해소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구자근 위원 예,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부대의견 관련해서 의견 제안하겠습니다.

김원이 간사께서 부대의견으로 지금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에 공급된 물량의 가격 산정과 관련해서 정유사하고 알뜰 3사 간에 갈등 해소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최고가격제를 급작스럽게 시행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부분들을 정부에 지적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아시아경제에서 보도한 내용도, 예를 들어서 진보 진영에서도 즉각 폐지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선의로 서민들의 부담을 낮춰 준다고 당초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지금 석유 소비도 부추기고 국가재정도 부담을, 얼마나 들어갈지…… 지금 예비비도 5조 원 넣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도 받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가격이 시행되고 그다음 주 되면 언제쯤 될 거다 이야기하면 이게 막 엄청나게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구자근 위원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오히려 줄 세우기도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품귀 현상도 일으키고 가격도 획일화시키고 시장에 개입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유사 손실 일어나는 보전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나 어떻게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계획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최고가격제 관련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구자근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과 함께 김원이 위원님이 부대의견 낸 것에 대한 산업부 의견 간단하게 들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의견이 통일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갈수록 최고가격제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나 또는 학계에서도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단기와 장기를 어느 정도로 구분해야 될 거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가 그 상위 개념인 이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면서부터 가장 큰 고민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올리면서 그 고민의 결과 중의 하나가 최고가격제를 하되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타

이트한, 딱 정해 놓은 최고가격제가 아니라 2주 간격으로, 국제가격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반영되어 가는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서 반영은 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여전히 전개될 수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념해서 판단하고 또 보완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알뜰 3사와 정유사 간의 정산과 관련된 문제는 구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하지 않았던 사안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벌어졌던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 필요로 하는 조치들은 하겠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는 양 당사자 간 상거래의 문제기 때문에 먼저 알뜰주유소와 정유사 간의 협의를 좀 지켜보고 지켜본 결과를 가지고 저희 산업부에서 조정을 하거나 또는 서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말씀해 주신 사안을 유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7번 안건은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인데요.

연번 1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자료 12쪽입니다.

연번 1번, 지역산업위기대응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위기지역 내 석유화학, 철강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서 전기요금 긴급 지원 12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울산지역에 대해서 기업 지원 및 인력 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7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산업통상부는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기업 지원 및 인력 양성 지원이 실제 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 및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효과를 측정·관리하기 위한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위의 산업위기지역 내 석유화학, 철강 기업 전기요금 긴급 지원 1220억 원 증액과 관련해서 지금 연번 1번에 있는 사항은 지역산업위기대응 기존 사업에 증액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취지로…… 14쪽입니다. 연번 3번입니다. 산업위기지역 위기업종 전기요금 한시지원은 동일한 사업 내용과 동일한 예산액인데 기존 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세부 사업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의 석유화학, 철강 기업에 대해서 1220억 원의 전기요금 긴급 지원하는 것을 기존 사업 내에서 증액을 하거나 연번 3번처럼 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1220억 원을 증액하거나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1번에 대해서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석유화학 특별법을 할 때는 전기요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측이 반대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달라졌고, 상황 변화가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20억 원 증액을 하는 것에 대해 수용합니다.

다만 방식에 있어서 여기에 있는 방식보다 뒤쪽에 있는 신규사업으로 증액을 하는 게, 예산편성상의 용이성 차원에서 뒤쪽에 있는 신규사업 방식으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두 번째, 17억 5000만 원 증액에 대한……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17억 5000만 원에 대한 증액도 수용합니다. 다만 울산지역이라고 해서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특정 지역을 빼고 증액을 해 주시면, 결국은 관련된 지역이 3개로 압축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 문제만 좀 빼 주시면 증액하는 데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수용하시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그러면 연번 3번 신규사업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견 없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번과 3번은 3번을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증액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1번은 울산 지역 특정 지역을 빼고 17억 5000만 원 증액하고요, 그다음 부대의견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2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번 항목, 산업단지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옛지 AIDC 실증 시범사업은 1MW급 이하 규모의 초고효율 모듈형 데이터센터를 조성해서 산단 입주기업과 AI 솔루션 기업을 위한 실증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추정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서 14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산업단지 AI 데이터센터 1개소를 추가로 구축하는 데 필요한 1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제조업 AI 전환의 핵심 요소인 제조 전(全) 공정 시뮬레이션, 디지털트윈, AI 솔루션 적용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데모다크팩토리 실증기반 구축 내역사업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200억 원 필요하다는 의견과 100억 원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내역사업인 탄소중립 선도모델 구축은 산업단지 내 탄소저감 사업을 집중 수행해서 산업단지가 글로벌 탄소 규범·규제 대응을 선도하고 산업단지 내 분산에너지 보급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2개소 추가 추진을 위해서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역사업인 산업단지구조고도화는 2026년도 문화선도산단 2개소 추가 선정 그리고 지원을 위해서 2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내역사업 스마트그린산단촉진은 2026년도 AX 실증산단 구축사업 지정 규모를 현행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하기 위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 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산업통상부 소관 일반회계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첫 번째, 옛지 AIDC 시범사업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에 대해 수용합니다.

두 번째, 데모다크팩토리 실증기반 구축에 200억 원 증액, 탄소중립 선도모델에 100억 원 증액, 구조고도화 문화선도사업에 22억 원 증액에 대해 수용합니다.

AX 실증산단에 20억 원 증액 수용합니다. 다만 특정 산업단지를 지정한 부분이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특정 지역을 지정하는 부분을 제외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마지막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위원님들, 지금 사업이 5개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승규 위원 제가 먼저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예.

○강승규 위원 산단 단위 옛지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추경에 필요하다 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존 사업의 확장입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신규사업입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옛지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양해해 주시면 저희 국장이 답변……

○강승규 위원 예, 좋습니다.

○산업통상부지역경제정책관 김규성 지역경제정책관입니다.

저희가 25년에 10개의 AX 실증산단을 선정했고 올해도 3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증산단에서 기업들이 실증을 하면서 관련된 데이터들이 집적이 되고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AI 기술 개발도 같이 연계해 나갈 겁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데이터가 모아지면…… 그러면 지금까지 AI 실증사업하는 사업장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모아지고 있어요?

○산업통상부지역경제정책관 김규성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어떤 것을 통해서 모아지나요? 특화망이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지역경제정책관 김규성 특화망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일반망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합니다.

○강승규 위원 물어볼게요.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담긴 5G 특화망은 이 옛지 AI 데이터센터와 관련 없는 시설이요?

○산업통상부지역경제정책관 김규성 저희가 옛지 AIDC가 설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별도로 운용을 하겠지만 특화망이 설치가 되면 그 2개를 연계해서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강승규 위원 그러면 다시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담긴 구축사업으로 5G 특화망을 구축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면 그 데이터는 어디에서 씁니까? 중앙으로 가져갑니까? 허브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산단별 옛지 AI 데이터센터에서 소비, 활용하기 위해서 5G로 특화망을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5G로 구축해 가지고 AI 통합데이터센터로 가져가요? 가져가려고 구축했습니까? 이 추정 사업이 없다고 했을 때……

○**산업통상부지역경제정책관 김규성** 기존의 5G 특화망을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데이터의 흐름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거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센터로 그 처리가 가능하지만……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신속하게 수집한 데이터를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AI가 그걸 분석해서 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실증사업 하려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부지역경제정책관 김규성** 예, 맞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산단 옛지에 설치한다는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5G 특화망만 구축한다고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추경이 없으면, 지금 전쟁이 날지 몰랐잖아요. 그러면 5G 특화망은 왜 구축했느냐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지역경제정책관 김규성** 위원님……

○**강승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정부가 그린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 제조 AI 혁신의 완성 엔드 투 엔드 실증 인프라 구축 이것 산업부에서 한 걸 보면 올해 본예산 20억 원 해서 5G 특화망을 구축해서 데이터 수집·전송을 하면 옛지 AIDC 데이터 연산 분석, 추경에 140억 원을 반영해서 구축하는 옛지 AIDC에서, 현장 근처에서 데이터를 즉시 처리한다…… 아니, 추경 안 했으면 5G 데이터 특화망 설치해도 소용없네, AIDC 없었으면?

○**산업통상부지역경제정책관 김규성** 아닙니다. 옛지 AIDC가 아니어도 기존의 AIDC를 통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산단 인근에 옛지 AIDC를 설치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직접 활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실증이나 테스트까지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옛지 AIDC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강승규 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를 지금 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산업단지 제조 AI 혁신의 완성 엔드 투 엔드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정부가 5G 특화망 해서 데이터 수집·분석도 제대로, 빨리 고속도로 해서 수집하고 옛지 AIDC를 구축해서 현장에서 데이터도 즉시 처리하고 이런 것들의 그림이 그려진 속에서 작년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5G 특화망은 본예산에 20억을 반영해 놓고 옛지 AIDC는 애기도 없다가 추경 편성하니까 이게 갑자기 등장해 가지고 5G 특화망과 함께 연계해서 산업단지에 옛지 AIDC로 현장에서 즉시 데이터를 해 가지고 AI 실증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정부가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계획이 부실했던 건지, 산단의 옛지에서 AIDC를 하면 즉석 처리를 해 가지고 효율화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건지, 그래서 뒤늦게나마 추경에다 이렇게 반영한다는 건지, 뭐가 옳은 거예요? 작년에 정부가 계획을 수립할 때 미흡했던 거예요, 아니면 하려다가 예산심의에서 빠진 거예요, 아니면 산단별로 옛지 AIDC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걸 뒤늦게 발견한 거예요? 뭐예요?

○산업통상부지역경제정책관 김규성 기존의 AI 데이터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워낙 좀 시급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승규 위원 뭐가 시급해요? 전쟁 나서?

○산업통상부지역경제정책관 김규성 지금 AX 쪽에는 워낙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속도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강승규 위원 아니, 작년 예산과 지금 추경이 몇 개월이나 차이가 난다고. 이게 지금 와서 AI 환경이 급격히 변해서 추경에 편성할 예산이냐는 거지요.

제가 지금 질의하려는 목적을 이해하시나요, 국장님?

○산업통상부지역경제정책관 김규성 예.

○강승규 위원 차관님 얘기해 보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처럼 5G로 해 가지고 죽 데이터 모으고 하는 것들을 해서 AI 데이터센터가 집중형이든 아니면 근처에 있는 것 쪽으로 보내서 하는 것을 했던 게 작년 예산에 담았던 내용들입니다.

○강승규 위원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런데 그 이후에 맥스(M.AX)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역경제라고 하는 것 2개를 했을 때 맥스의 중심이 더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올해 들어 와서 산단 활동을 계속……

○강승규 위원 올해 들어와서?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게 하면서 그 부분의 속도를 좀 더 빨리 하고 효과를 더 빨리 보는 방법이 뭐냐에 대한 의견 교환들이나 또 건의들이 있었던 과정이 있었습니

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비판해 보면 어때요? 적어도 산단에서, 현장에서 5G든 뭐든 수집한 데이터를 AI 데이터센터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가공해서 쓰려고 하면 규모가 있어야 되겠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래서 작년에 계획 수립할 때는 이렇게 산단별로 옛지 AIDC를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효용가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와서 추경 만들려고 보니까, 예산 만들려고 보니까 지역의 민원도 좀 해결하고 산단에다 AIDC 만들면 민원도 좀 덜고 거기에 데이터센터도 만들어지니까 그럴듯할 것 같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은 그럴 만한 규모가 안 돼. 그리고 효용도 없어요. 옛지 AIDC가 이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급조한, 필요 없는 부속품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 요구합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구자근 위원 신규만 아니면 참 좋은데……

○소위원장 정진욱 일단 첫 사업에 대해서는 보류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 조금 말씀드리면, 강승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5G 특화망 구축사업 단계에서는 아마, 옛지 AIDC라는 게 그야말로 소규모 AI 데이터센터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 산단 안에 있는 AIDC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것은 아마 맥스 얼라이언스를 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AIDC도 필요하지만 산단

내에 입주해 있으면서 산단의 요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방식의 AIDC가 제조 AI 내지는 퍼지컬 AI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하다는 이런 판단을 통해서 이 사업이 새롭게 설계가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AI 사업의 특성상 사실은 굉장히 시간을 다룹니다. 이걸 처음부터 본예산에 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AI는 AI 회사도 못 따라갈 정도의 변화가 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고 다시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업단지 데모다크팩토리 실증기반 구축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200억 반영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정부 수용 여부 물어봐야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아까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예, 죽 말씀하셔서.....

3번, 탄소중립 선도모델 구축사업에 대해서 혹시 이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100억 원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 22억 원 증액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스마트그린산단촉진과 관련해서 20억 원 증액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부대의견도 채택하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위기지역 위기업종 전기요금 한시지원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차관님한테.....

○소위원장 정진욱 예, 말씀하시지요.

○김종민 위원 2번의 산업단지 환경조성 관련해서 다른 사업들은 위원님들 큰 이견이 없어서 다 반영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옛지 AIDC에 대해서만 강승규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추경하교의 아주 긴밀한 직접적 적합성을 놓고 보면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옛지 AIDC라고 하는 게 최근 AI 추세에서 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집어넣으신 것 같고 저는 거기에 동의하거든요. 그 필요성을 시간 나실 때 나중에 최종 정리하기 전에 강승규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세희 위원 저도 잠깐 얘기할게요, 그 부분에서요.

○소위원장 정진욱 예, 오세희 위원님.

○오세희 위원 지금 산단 입주기업의 96%가 50인 미만 중소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AI 초기 투자 비용, 도입 성과에 애로를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인프라 구축하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거든요. 산단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단지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가속화해야, 이게 1년에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빨리 시작을 해서 산단이 좀 살 수 있게…… 산업단지 모여 있는데 역할을 빨리빨리, 우리가 지원을 해서 활성화나 성장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또 전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이해해서 가지고 같이 합의를 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동만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잠깐만요, 중간에 공지를 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산자위 전체회의가 8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8시 의결을 위해서는……

○오세희 위원 저녁 안 먹고 해야 되겠네요.

○소위원장 정진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빠듯한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논의하는 속도를 조금은 더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민 위원 예, 빠르게 합시다.

○소위원장 정진욱 이견이 있어서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은 저희가 계속 보류해 왔습니다마는 최소한 중기부도 저희가 전체에 대해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강승규 위원 본회의 시간을 늦추면 되지요, 오늘 충분히 논의합시다. 오늘 끝내지요, 본회의 시간을 늦춰 놓고. 그래도 지적할 건 해야지요.

○소위원장 정진욱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서 그것도 조금 감안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동만 위원 저도 시간 때문에 말을 많이 아끼고 있는데……

○소위원장 정진욱 예, 정동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동만 위원 강승규 위원이 아까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차관님.

옛지 AI 데이터센터 중에 민간이 하는 대형 센터 있지요? 그것 구축 기간이 대충 얼마나 걸립니까? 한 4년 걸리지요?

○산업통상부지역경제정책관 김규성 예, 맞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렇지요?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소형 센터는 대충 어느 정도 걸립니까, 시간이?

○산업통상부지역경제정책관 김규성 모듈형이라서 5개월 이내에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6개월 정도 걸리지요?

○산업통상부지역경제정책관 김규성 6개월 이내입니다.

○정동만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산업부가 제출한 것처럼 하면 올해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같이 연계하려고 했던 5G 특화망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시작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지역경제정책관 김규성 올해 시작했습니다.

○정동만 위원 했습니까, 5G 산단하고 연계하는 것?

○산업통상부지역경제정책관 김규성 지금 공모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렇지요. 아직 시작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 다시 세워서 옹게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희 위원 하라는 얘기지요?

○정동만 위원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계획 세워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그런데 다시 계획 세우면 내년에 됩니다, 내년에. 그러면 또 1년이 걸어집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산업통상부 심사 보류해 놓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산업통상부 소관에 대해서는 심사 마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소위원장 정진욱 예.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다섯 번째, AX 실증산단 20억 원 증액하는 것은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는 조건이라는 것을 확인을 한번 하고 마쳤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예, 알겠습니다.

심사를 보류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분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신학 차관님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퇴장하셨다가 다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정회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 2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정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일 경우에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는 직위 그리고 성명을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소기업부 소관 연번 1번 사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중소기업부 소관 소위심사자료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출입니다.

연번 1번, 신용보증기금 출연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최소 18조 원 이상의 보증여력이 있어서 별도 출연은 불필요하므로 10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2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출연입니다.

현재 기술보증기금 운용배수는 적정 운용배수인 10~12.5배 이하로 보증여력이 있어서 별도의 출연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10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취지는 존중합니다만 정부로서는 감액 수용이 곤란합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왜 수용 곤란한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우선 이번에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충분한 인수를 위해서는 기존 재원을 통한 경우에는 부실율이나 향후에 운용배수 급격한 상승에 대한 위험 때문에 적극적인 인수가 어렵다는 것이 해당 기관의 입장입니다.

○구자근 위원 지난해 추경 때 이것 신설했는데 그때 보증계획 얼마나 됐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그때 3.5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5조를 추가로 인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자근 위원 이것 그때 받아서 작년에 추경할 때, 4월 달에 추경했지 싶은데 그때 연내 다 공급한다고 하셨지요? 연내 다 공급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추경할 때 급하다고, 지금처럼 똑같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냐고.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님, 아까 25년 추경은 3조고요. 올해 2.5조고, 작년에 3조 중에 2조 원 공급이 됐고 1조 원은 아직 공급이 안 됐습니다.

○구자근 위원 제가 보기에 1조 6000억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됐는데……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2조 원 공급한 것으로……

○구자근 위원 당시에 이런 명분을 달아서 1000억을 갖고 가서 자체 재원까지 합쳐서 한 2400억으로 해도 3조가량 했는데 2조 하고 1조 지금 남았던 말입니다, 백번 양해하더라도. 예결위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보증 공급한 걸 보면 2400억 원이 아니라 1274억 원으로도 안정적으로 공급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신용보증기금의 운용배수가 한 8.2배 정도 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우리가 맥시мум이 한 20배 정도까지 치는데, 보통 한 10배 정도 되면 안정적이라고 치는데 지금 8.2배잖아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맥시мум 10배 정도 이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1000억이 정부 출연이 없어도 운용배수가 9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어려움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지금 우리

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다다익선이고 많으면 좋지요. 1000억이 문제입니까? 한 2000억 갖다 넣고 3000억 갖다 넣으면 되지, 그러면 마음 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기준으로 그래도 10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9배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뒤에 조금 있으면 기보도 나오겠지만 거기는 기준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제가 삭감 의견을 내지는 않았습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그렇게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는 게 기관 재원 보장해 주려고 추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자근 위원 예.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이번에 추가되는 게 사실 중동 전쟁 피해 기업입니다. 기존에는 미 관세 피해 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 해당 기업인데 중동지역 전쟁 피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부실률이 높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증기관 성격상 일종의 버퍼로서의 신규 자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적극적인 인수를 안 할 것으로 그렇게 정부 측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에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여력이 됩니다. 충분한 여력이 되고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동만 위원님.

○정동만 위원 중동지역 피해 기업이라고 하는데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일단은 해당 지역으로 수출입하는 기업들이 될 수 있고요, 해당 지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 그리고 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폭넓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위기대응 특례보증이 일반보증 비율인 기존 85%에서 90%로 인상되지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5%p……

○정동만 위원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정동만 위원 이 특례보증에서 보증 절차가 간소화되고 있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기존보다 높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아무래도 유동성 위험 기업에 대한 공급이기 때문에 적기 공급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방금 구자근 위원이 추경에 대한, 연내 처리하지 못했던 부분이 1.6조만 집행하고 처리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1000억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했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산중위 국감에서도 대위변제 부실에 대한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정동만 위원 재정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계속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코로나 당시에 좀 공격적으로 지원한 부분들이 현실화되다 보니까 최근에 부실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등을 통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동만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1000억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기술보증기금 출연하는 이 부분도 최근 경기침체가 되고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서 보증 사고율도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니까 2025년 기술보증 사고율이 2021년 2.5%에 비해서 5.2%, 2배 이상 높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최근에 좀 높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또 구상권 회수율 보니까 2025년 2.7%로 3%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사고액이 2021년 6000억 규모였지만 2025년 1.5조, 4년 사이에 1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 상황으로 보면 추경보다 더 급한 것이 사고율 낮추는 것과 구상권 회수율을 올리고 최종적으로 사고액을 줄여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그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최근에 민간 금융 쪽에서 소극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때는 공적 금융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유동성 위기 기업들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동만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시고, 재정건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이 필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특별한 지원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으로서는 증액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오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희 위원 앞서 말씀하신 염려, 사고액을 줄이고 리스크를 줄이라는 것은 되겠지만 지금은 전쟁이에요. 전쟁은 뭐냐? 인력을 채용하고 있고 수출하던 회사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대상의 회사들이 멈춤이거든요. 그래서 수출이 올 스톱 되고 원자재도 못 구입하고 생산도 못 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미리 국회가……

저는 이 1000억 가지고는 솔직히 적다고 봅니다. 기업을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리스크 줄이고 사고액도 줄이고 이런 거지만 그런 룰의 규제나 어떤 제도를 떠나서도 정부가 책임 있게 그 기업에, 왜냐하면 기업에는 그냥 기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력들이 많단 말이에요. 몇 달 동안 생산도 못 하고 수출도 안 되고, 수출을 위해서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걸 보전하고…… 사실 1000억 가지고 많은 기업들을, 최소한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의 지원금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때는 전쟁이다. 나라가 없어지고 지금 유류도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특별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이 금액 말고 더 지원할 수 있으면 더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꼭 지원해야 된다.

○소위원장 정진욱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최근에 부실률이 높아졌다는 말씀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아무래도 코로나 때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것들이, 계속 만기 연장했던 것들이 종료되면서 불가피한 현상으로 다소 높아진 경향은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지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보증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 예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아무래도 중동 전쟁 때문에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 은행에서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여신 제공에 소극적인 쪽으로 전환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라든지 전문가들 토론회에서 나오는 것이 유가 상승으로 인한 원가 상승이라든지 또 수출기업의 판로의 단절 또는 자금의 회수,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상당히 악화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특별한 지원이 불가피하다라는 지적이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다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사고율이 평상시보다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보증기준을 오히려 더 강화한다는 것은 본래의 상황 여건을 대처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좀 맞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특수한 환경, 이것은 70년대 석유파동 1차·2차 파동의 합보다도 오히려 더 충격파가 크다, 그리고 IMF 당시의 충격파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증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보증 여력이 있냐 없냐 그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보증 여력이 없다고 한다면 오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000억이 아니라 그 이상의 출연도 시도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하시는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감안돼서 보증기관의 여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보강돼야 될 것으로 공감합니다.

○이재관 위원 다만 한없이 사고율이 증가하는 부분들을 감내만 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사후적인 대책도, 미리 예방을 하고 그러한 것에 대한 대책도 분석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풀어야 될 과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저희가 적기에 자금이 공급되는 게 중요한 탓에 심사 절차는 다소 간소화해서 운영하겠지만 보완해서 미래 성장성을 AI로 평가한다든지 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든지 통해서 리스크가 높아지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다른 의견 없으시면 1번, 2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자료 2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입니다.

추경안을 통해서 신설된 내내역사업인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육성 사업은 추경 편성의 긴급성과 직접성이 부족하고 또 인턴십 제공 등 단기 인건비 제공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며 기존 스마트공장 인력양성 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있어서 12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조AX선도모델과 관련해서 자료 3페이지입니다.

실제 구축사업의 소요기간 고려 시 연내 집행 가능성이 저조하기 때문에 75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리고 유사 사업인 대중소상생형 AI트랙의 수요 수준으로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6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반면에 제조AX 가속화나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원 물량과 비율 상향을 위한 예산 7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역사업들, 제조AX선도모델 지원 사업,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육성 사업 모두 증액분 총 87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그러면 지금 사업이 몇 개인가요? 제조혁신 인프라 조성 사업 있고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성소미 세부사업으로는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에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육성 사업 그다음에 제조AX선도모델 사업 두 가지 있는데 4페이지 보시면 이 두 가지를 모두 감액하는 의견이 87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여기 두 가지 사업이 들어 있나요?

○전문위원 성소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하나는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육성 사업 맞나요?

○전문위원 성소미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그리고 또 하나는 제조AX선도모델 사업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성소미 예.

○소위원장 정진욱 좋습니다. 여기도 지금 감액 의견이 들어와 있는데요.

정부 측 의견 들어 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정부로서는 감액안 수용이 곤란합니다. 이유는 저희는 2개 사업 모두 추경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사업은 청년 실업 해소와 중소기업 기술인력 확보라는 당면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추경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조AX선도모델 사업도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에너지효율 향상 등 중소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금번 추경의 취지로서 위기 극복 이후에 경제도약 발판 마련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개 사업 모두 추경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일단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육성 관련해서 추경 목적에 부합하다고 그랬는데 전혀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요. 대통령께서 전쟁 추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관련해서 전체 금액 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근거로 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제조혁신 인프라 조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1200명을 양성하는 걸 목표로 해서 120억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조AX선도모델 같은 경우에는 과제당 30억 중에 50%를 정부재정으로 지원하고 총 50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생각해서 750억을 편성했습니다.

○구자근 위원 뒤엣것 말고 앞엣것 진행할게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1200명에 대해서……

○구자근 위원 의원실에서 이 관련해서 준비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수요조사, 교육 및 실습 내용, 참여기업 논의, 수행사 선정 계획 등 전부 다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답변들이 딱 한 두 줄 정도네요, 향후 추경안이 확정 시 어떻게 하겠다. 전부 다 이렇게 향후 추경 확정 시 어떻게 하겠다……

추경 안 되면 안 하는 거잖아, 그렇지요? 준비도 안 됐는데,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준비도 안 됐는데 머릿속에만 갖고 있으면서 위원들하고 논의도 안 하고 협의도 안 하고. 그러니까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그런 것 아닙니까, 준비도 안 됐는데? 내가 보기에 연내 집행 분명히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님, 사전 협의를 저희가 제대로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렇게……

○구자근 위원 아니, 이해를 못 하고, 자료 제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이해를 해서 정부에서 주는 안대로 믿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는데?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님, 저희가 사실 예전부터 3만 5000개의 스마트공장……

○구자근 위원 아니, 여기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에 딱 두 줄씩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왔던 자료가 전부 다 추경이 확정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뭐 야당이라서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자료 제출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스마트제조공장 구축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관련 학과들이 이미 100여 개 가까이 있고……

○구자근 위원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신규사업으로 왜 넣었느냐는 말이지.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신규사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지는 청년 실업 해소와 중소기업 기술인력 확보라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구자근 위원 일단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른 분들 이야기하면 제가 다음 750 삭감한

것 또 이야기할게요.

○소위원장 정진욱 다른 위원님 있으신가요? 의견 없으시면 2번……

○구자근 위원 아닙니다, 같이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제조AX선도모델 관련해서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이게 추경에서 750억 더 없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25년도 사업 얼마 정도였어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25년도 같은 경우에 대중소 상생형 300억이었습니다.

○구자근 위원 287억으로 되어 있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아마 운영비 이런 부분 빠지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니까 25년도 287억이에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구자근 위원 그리고 26년도 당초에 거의 배 이상, 그러니까 402억으로 확 올랐어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구자근 위원 그렇게 하면 400억 중에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1800만 원 집행했네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3월 말 기준으로……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연초기 때문이에요.

○구자근 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공고 내고 사업 착수하면 9월 달, 10월 달 그때 가야 됩니다. 400억, 그러니까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셔서 지난 연도보다 배로 넣은 데다가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추경까지 해서 750억을 넣었어요. 750억 넣고 이거 추경 해 가지고, 당초 여기 넣은 것도 지금 집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750억 넣어 가지고 될지 안 될지 그런 확정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안 주시잖아. 그냥 추경 후에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2023년도에 비해서, 167억에서 작년에 402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402억 올라간 데다가 750억 보태면 천백…… 얼마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1150억입니다.

○구자근 위원 1152억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도대체 전년도 대비 몇 프로예요? 400~500% 되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당초 예산, 들인 예산이라도 충실하게 집행하고 알차게 집행해서 거기에서 생기는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시켜서 가는 게 맞지 지금 추경에 750억을 그렇게 이어서 가는 게 맞냐 이 말입니다.

더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삭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님,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퍼지컬AI 포함한 제조AI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이미 많은 부분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개발한 걸 중소기업에 확산하기 위해서 시급히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포함을 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참여율이 많지도 않은데 뭐…… 상생형 대중

소 다 합쳐봐도 1.6 대 1이고 상생형 AI트랙 또한 1.1 대 1이라.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님, 상생형 AI트랙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하고 이미 사전에 조율을 해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 외에 자율형 같은 경우에는 5 대 1이 넘습니다. 이건 대기업하고 사전 조율을 한 결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자근 위원 더 자꾸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소위원장 정진욱 이재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관 위원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이 부분 예산이 전쟁과 관련된 중동 전쟁 추정이나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들이 자주 나오는데 사실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영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렇게 경영환경이 악화될수록 그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인 조치가 있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이재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혁신적인 전환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어떤 역할인 것이고 특히나 이렇게 어려울 때 청년들의 취업이라든지 약자들의 아픔, 어려움은 더 커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위기를 기회로 하기 위한 저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이 예산은 오히려 더 배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지금 현재 어렵다고 해서 자꾸 위축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점에 오히려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 기간이 지나고 났을 때 오히려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정책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예산은 꼭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오세희 위원님.

○오세희 위원 지금 AI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4.2%, 차관님 이게 전문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구축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오세희 위원 4.2%.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오세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업에도 조사를 했지만 대한상의도 그렇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빠르게 도입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은 과연 언제 DX·AX를 통해 기회를 창출합니까?

이건 전쟁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집행할 때는 계획안은 있겠지만 예산에 대한 구도가 잡혀야 선제적으로 그걸 집행하지 예산도 없는데 집행 먼저 할 수 없잖아요, 특히 정부가. 그래서 이것을 선제적으로 아무 계획 없이 한다기보다는 모든 게 예산이 뒷받침됐을 때 실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계획은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줘야 이거 빨리 집행하고, 지금 집행해도 올 연말 안에…… 연말에 본예산으로 가면 내년 상반기에 이게 집행하게 되거든요.

과연 우리가 중소기업을 키워야 되냐 했을 때 또 AI 전환이 빨리 가속화돼야 되는데 전문가가 없다는 거야, 전문가. 전문가가 없다는 건데 80.7%가 AI 전문인력이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그랬지만 이게 1000억이다 얼마다, 1000억대다 이게 정말 적은 금액입니다. 정부가 여기다가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야 스마트공장 보급도 돼서 인력이 할 수 없는 일 그런 것도 AI를 활용해서 빨리 생산성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왜 이거 계획도 없이 이렇게 추경부터 하나 그게 아니라 추경이 결정돼야 집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내로 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청년 실업도 거기다 담아야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성무 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성무 위원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의 전문인력이 두 가지 방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급 기업의 전문성이 중요하고요, 그 공급 기업의 전문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동시에 수요 기업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재화하고 기업 스스로가 그것을 돌릴 수 있으려면 수요 기업 내에도 전문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잘 매칭이 될 때 이 스마트화, DX·AX의 효과가 극대화되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인력이 부족하거나 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간혹 그런 사례가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기부가 더 책임성 있게 전문인력 육성을 양 측면 모두에서 해야 되고.

특히 수요 기업의 기업인의 마인드가 전문화되는 거, 스마트화되고 AX·DX를 하겠다는 마인드를 갖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면 이걸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기부가 더 좀 노력을 강화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

특히 이제 대중소 상생형은 제가 지난 연말, 올 초, 세 번에 걸쳐서 토론을 해 봤습니다. 이것 공급하는 대기업 다 아침 일찍 7시 반에 초대해서 하고 또 이 혜택 본 기업의 성공 사례도 다 발표시키고 또 현장도 가 보고 다 이렇게 했는데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대기업들도 자기들이 잘되기 위해서는 협력하는 업체들의 수준도 높아져야만 자기들의 제품의 수준도 높아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더 설득을 잘하셔서 더 많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애를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저는 오히려 드리고요.

중국과의 제조 경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대안이기에 때문에 이걸 통해서 기업인들과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좀 줄 수 있도록 중기부가 적극 나서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님,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의 트랙1이 수요 기업 인력이고 트랙2가 공급 기업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40여 개 DX 기술을 보유한 대기업들과 이미 검토·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는 큰 문

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권향엽 위원님.

○권향엽 위원 오전에 산자부 예산 심의를 할 때도 비슷한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통계상 보면 청년 실업이 굉장히 심각하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습니다 하는 인력이 1년에 한 40만 가까이 이렇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48만……

○권향엽 위원 예, 지금 그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젊은 인력들 그리고 또 실제로 제조업 현장 쪽에서는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인데 청년들을 제조업 현장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암묵지라든가 이런 것을 살려 내는 데도 필요하고요. 실제로 또 스마트공장 같은 경우 업종별 공정이라든가 장비별 제조 데이터의 표준화를 통해 가지고 표준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을 좀 더 촉진해서 우리의 경쟁력을 살려 내는 일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추경이다 본예산이다 이것을 따지면서 전액 삭감 이렇게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들을 일터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더더욱이나 이 예산은 우리가 빨리 해서 제조업을 살려 내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안대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동만 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동만 위원 차관님, 아까 추경 목적에 부합한다고 하는데,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이 통상 어느 정도 걸리지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이번 추경 하면 사업이 내년 하반기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무슨 부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설비나 시스템 구축할 때 정부재정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보통 이런 부분은 사업 초기에 2~3개월 안에 집중적으로……

○정동만 위원 오늘 추경 하는 거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미래 도약을 위한 준비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혀 공감할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는 스마트제조 분야는 제조 공정과 정보기술 등에 대한 전문 분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정동만 위원 설비 제어시스템이나 데이터 분석 모델 간 인터페이스 최적화 등 높은 수준의 교육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청년 취업들 아주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전문인력을 2개월 훈련 기간을 거치고 3개월 인턴십 프로그램 해서 스마트제조 기업 수요 충족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취지는 충분히 존중합니다만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 스마트제조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든지 이런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정동만 위원 그런 고급 인력들을 제조업에 투입해서, 현실적으로 많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지금 대학에 한 47개 정도 학과가 있고요, 특성화고하고 마이스터고 포함 시 44개도 있기 때문에 총 학과가 91개 정도 되고 또 지역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미스매치 문제가 정보의 불균형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번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동만 위원 최첨단 인재를 전문직으로 양성을 해야 되는데 직접 현장에 가서 그 분들 고민,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저희가 스마트공장 클러스터 방문해서 다 대표님들 의견 수렴했습니다.

○정동만 위원 일단은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쟁 추경, 이 용어가 뭐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전쟁을 계기로 해서 생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보완하기 위한 추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쪽 논의한 추경안에서 쉽게 합의한 항목들도 보면 대부분 전쟁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예산 투입으로 어떤 효과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초래된 경제 상황을 뒷받침하거나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쪽, 이런 쪽의 추경들이 또 한 축이거든요. 그래서 대개 보면 직접 영향이 있는 추경이 있고 또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추경이 다 있어서 우리가 이게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를 너무 단선적으로 또 직접적인 영향만 보면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제조AI 관련해서 이 AI 전환이 지금 필요한 건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이게 필요하다면 두 번째는 시급한 거냐, 시급하다면 이게 지금 있는 경제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되느냐, 이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걸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위원님들은 없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시급하다는 면에서 볼 때도 대한민국이 지금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든가 기타 다른 모델이 좀 뒤져 있지만 제조AI 면에서는 앞으로 AI 시대에 대한민국의 출구다 또는 돌파구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빨리 앞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분야지요.

그다음에 중소기업하고 관련해서 중요한 논의가, 우리는 좀 덜 느끼지만 전체적으로 현장에서는 엄청난 일자리 동요가 지금 이미 현실이 돼 있습니다. 지식 노동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에 있었던 인력들이 감원되거나 아니면 감원 계획이 있거나 해서 되게 뒤숭숭하거든요. AI 시대에도 어떤 일자리가 있고 어떤 길이 있다는 걸 빨리 선도해 주지 않으면 이 사회가 되게 불안해져요.

그런 최근의 상황과 결부해서 보면 이렇게 AI로 인해서 되게 불안정해져 있는 상황, 여기에 유가라든가 경제 불안정 또 국제적인 정세 불안정이 초래해서 경제적으로도 뒤숭숭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AI와 관련된 어떤 출구가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오픈AI나 이런 빅테크만이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AI 관련해서 뭔가 가능성이 있다,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걸 빨리 뚫어 주는 게 지금 정부의 중요한 임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서는 전쟁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전쟁으

로 인해서 초래된 종합적인 경제의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는 효과성이 있느냐 이런 측면에 좀 주목해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중기 분야에서 사실 이 사업만큼 중요한 사업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근 위원 잠시만요, 전쟁 추경이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정정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소위원장 정진욱 지금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지요?

○구자근 위원 전쟁 추경 때문에 이 사업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예, 말씀 좋습니다마는 지금 구자근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시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시에 전체회의를 해 났는데 오늘 우리가 추경 심사하면서, 제가 이러나저러나 결과가 똑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을 통해서 어떻게,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경기침체나 경제의 어려움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이중고 삼중고를 겪는데, 전쟁과 그동안에 경쟁해 온 AI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별개로 있지 않은데 김종민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함께 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서로 전혀 안 돼 있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추경에 대한 심사가 과연 정말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우려를 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과연 우리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지금 참 걱정입니다.

전체회의를 8시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 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상대가 말한 것들 다 잡아 가지고 일일이 해설하고 설명하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저는 그걸 좀 감안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구자근 위원 예, 일단은 이야기하게 발언 기회 주십시오.

○소위원장 정진욱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전쟁 추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명분 없이 이렇게 방해하는 것 아니냐 그런 식의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에서 402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돈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402억이 책정되어서 지금 집행률도 없고 9월 달, 10월 달 되어야지 사업 착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액한 그 예산을 올해 충분하게 소진하고 써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차관님, 이 스마트공장 보급 관련해서 중간점검 한번 해 보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중간점검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하고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구자근 위원 제가 20년도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280개 정도 이것 관련해서 과제 점검한 것 보면, 그 이후 건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시다마는 그때도 한 50%도 채 안 돼요. 42.7%가 정상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그냥 돈만 많이 투입해서 이게 스마트화되고 현장에서 그

렇게 진행될 것 같으면 애초에 그냥 몇조씩 잡아 넣지요. 그런데 당장 올해 당초 예산 준 것도 지금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9월 달에, 10월 달에 그렇게 집행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또 당초 예산보다 2배로 늘려서 가는 게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쟁 추정 때문이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당초 예산 간 것부터 좀 쓰시라니까. 그것도 안 쓰고 이걸 2배로 해서 얹어 놓으면, 여기 와서 그렇게 요구하면 어떡합니까?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말씀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님, 저희가 올해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공고를 했고요, 이게 대기업하고 같이해야 되기 때문에 모집되는 대기업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 좀 기다리다 보니까 본예산은 위원님 보시기에 진행이 조금 더디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7월부터 해서 말씀 주신 대로 8월부터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만 추경의 경우에는 저희가 대기업들을 다 모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수시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이미 많은 기업들과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본예산보다 더 빨리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보류하고 넘어가지요.

○소위원장 정진욱 연번 3번도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해서 전문인력 양성하는 것,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그리고 또 새로 신설한 제조AX선도모델은 최근에 피지컬AI가 나오면서 우리가 새롭게 더 주목하고 있는 분야인데 이 정도를 합의를 못 하면서 추경안을 계속 심사하는 게 맞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4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번부터 6번까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번, 기술혁신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기술사업화 패키지는 본예산 신규사업이었는데요, 사업의 성과평과 없이 3개월 만에 추경을 통해 50%를 증액하고 있고 본예산 집행을 저조, 전쟁 피해에 대한 긴급 대응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125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사업 공고 결과 기업 수요가 미달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11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5번,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동 수출 피해기업에 대해서 본예산으로 우선 지원하고 2차 피해기업은 추후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10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도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 본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추경안의 적기 집행을 위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구체적 집행계획을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6번, 마케팅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판로진출지원 사업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소비 위축에 따른 직접 피해 대응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66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기술사업 패키지와 수출바우처 그리고 마케팅지원 사업 세 가지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감액안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사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예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차로 부처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창업 기업이 매우 부진한 상황입니다. 부처에서 추천 자체가 고업력 기업으로 이루어지면서 창업 기업이 소외된 측면이 있고 또 금년에 창업기업의 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어 별도 트랙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수출바우처는 수출 피해 기업을 500개로 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이 500개는 현재까지 저희 수출애로센터에 접수된 기업이고 저희가 중동지역에 직접 수출하는 기업들만 1만 개가 넘기 때문에 피해를 본 기업들이 매우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판로진출사업의 경우에도 결국은 경기가 악화되면 창업기업의 피해가 가장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미래 성장동력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 지원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구자근 위원 예.

○소위원장 정진욱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기술혁신기반조성에서 아까 차관님은 별도 트랙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걸 무슨 내용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저희가 정부 R&D 우수과제하고 기술거래 플랫폼 연계 그리고 규제혁신 R&D 연계 이렇게 3개 분야에 있어서 기업들의 기술사업 패키지를 관계부처 추천을 통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중소기업 R&D에서 창업기업 비중이 한 70% 정도 되는데 저희가 부처로부터 추천받은 기업 중에는 창업기업이 30%밖에 포함돼 있지 않다 보니까 결국 부처들이 고업력 기업 중심으로 편중되게 추천하는 경향이 있어서 창업기업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판단에서……

○구자근 위원 잠깐 차관님, 이 본 사업이 예상 물량을 다 못 채웠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아직까지는, 그런데 진행 중인 사업으로……

○구자근 위원 이게 이런 것 아닙니까?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관련해서 그걸 중심에 두고 지금 추경예산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거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예를 들어 평가사항이나 평가위원조차 아직 완료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지금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자근 위원 예, 그렇지요.

당연히 당초에 그 예산이, 모두의 창업이라는 예산이 없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께서 말씀 한마디하시니까 부랴부랴 그것에 기반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그 부분은 이따 그 해당 사업에서 정부 측 입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 하여튼 저도 이걸 재검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승규 위원 이것도 연계돼서, 그러면 모두의 창업 부분 들여다보면서 이것도 같이 하지요. 보류하시지요.

○소위원장 정진욱 4번은 일단 보류하고 가겠습니다.

5번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성소미 5번, 6번까지 보고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5번 논의하겠습니다.

5번은 보류할까요?

○허성무 위원 아니요, 이걸 지금 현재 긴박한 거잖아요.

○이재관 위원 이걸 보류하면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을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수출지원기반 추경하자는 건데.

○허성무 위원 지금 중동지역의 직접 수출기업만 1만 개가 넘는 상황인데……

○김종민 위원 위원장님, 보류를 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표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정진욱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러나저러나 결과가 같다고.

○허성무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재관 위원 서로 토의를 하자고요. 논의를 해요.

○허성무 위원 수출지원기반활용은 지금 전쟁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 아닙니까? 이걸 당연히 다 수용해 줘야지요.

○강승규 위원 저는 수출지원기반활용에 대해서 의견 낸 적 없어요.

○김종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관련해서 한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정진욱 예.

○김종민 위원 지금 보류를 계속 해 놓으면 그걸 충분히 숙의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보류 의견을 이렇게 미뤄 놓는다는 게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소위원장 정진욱 의미 없지요. 의미 없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의견이 나오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분명하게 나뉘지는 경우에는 다수의견, 소수의견을 좀 구분해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좀 정리해 놓고 넘어가서 우리가 최종 의결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판단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다시 논의할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정진욱 좋은 의견이십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저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예.

○구자근 위원 다수의견, 소수의견으로 구분해서 그것 넘어가서 다수의견으로 다 할 것 같으면 이 소위 회의 진행할 의미가 뭐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들끼리 앉아서 다 하면 되

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소위원회만큼은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고 우리가 오랜 관행으로 그렇게 내려온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정진욱 예, 오랜 관행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 보면 예산심사를……

○김종민 위원 그런데 추경이나 예산안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들이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게 왜 예산편성권을 헌법에서 정부에 줬을까요, 국회 권한인데? 편성이 되게 전문적이어서 그래요. 이 전문적인 편성권을 우리가 여기서 짧은 회의 시간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산 의결할 때 중요한 건 정말 이걸 안 된다고 해서 분명히 안 되는 이유를 들고 나와서, 30개 있다면 30개에서 한 두세 개, 서너 개, 이것은 내가 반드시 막아야겠다…… 사실 예산심의는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지 이렇게 건건이 다 보류시키는 예산심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기구를 국회에다 뒀어야지요.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러면 25년 예산은 민주당은 어떻게 예산심의를 했습니까?

○김종민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강승규 위원 아니, 지금……

○소위원장 정진욱 잠깐만요. 지금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고 계시니까……

○강승규 위원 얘기하시는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25년도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셨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세요?

○김종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다고 보복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옛날에 그랬다고 보복하듯이 그렇게 의정활동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강승규 위원 보복이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도 지금 심의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폼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김종민 위원 기본적으로 예산심의는요……

○강승규 위원 지금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는 것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폼뽕해서…… 전문성도 없는 국회에서 전문성을 가진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왜 이렇게 시시콜콜 따지느냐라고 하면 안 되지요.

○김종민 위원 그게 아니지요. 제 말씀은 우리가 확실하게 조사하고 이것은 안 된다고 근거를 가지고 몇 개 정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지 매번 사사건건 이렇게……

지금 오늘 보류한 게 몇 개입니까, 도대체? 이 정도로 할 거면 우리가 예산심의기구를 뒀야 돼요. 거기서 검토한 것 가지고 한 한 달 정도 검토한 다음에 회의를 해야지 어떻게 지금 이삼일 보고 이런 예산심의를, 이렇게 디테일한 것을 합니까?

○구자근 위원 이제까지 다 그렇게 해 왔어요.

○김종민 위원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을 짚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여기서 결론을 내야지요.

○강승규 위원 문제가 될 만한 것을 지금 짚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지금 수출지원기반활용이라든지 마케팅지원 사업 같은 것이……

○권향엽 위원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잠깐만요.

아까 허성무 위원님 발언하시려고 하셔서 허성무 위원님 먼저 하고 드리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래서 5번 수출지원기반활용은 이것은 누가 봐도 시급하게 해결해 줘야 되고 오히려 더 지원해 줘야 될 사안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너무 적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갖는 거지요,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그래서 정부가 편성한 예산에 적극 동의하면서 동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권향엽 위원** 저도 발언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권향엽 위원님.

○**권향엽 위원** 우리가 오늘 추경을 갖다가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쟁 추경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전쟁 추경이 전쟁 물자만을 위해서 하는 전쟁 추경이 아니라 민생 추경이기도 합니다. 민생 추경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수출지원기반활용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도 보면 알지만 지금 현장의 중소기업들 그리고 현장에 있는 민생까지 파급되는 것, 여러분들도 전부 다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는 정쟁으로 나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요불급한 사안에 대해서 전액 삭감 이것은 좀 너무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을 하면서도 다시 한번 더 민생을 생각한다면 좀 더 발상의 전환이 있어 주셨으면 좋겠고 정부안대로 함께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보류해 놓고 삭감 규모 등을 나중에 종합적으로 하면 어떨까요?

○**오세희 위원** 저도 의견 좀 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오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희 위원** 저도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하는데, 지금 다 감액이거든요. 이게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 정말 타당성을 생각하셔서 정당을 떠나서…… ‘진짜 이것은 하면 안 되겠다. 지금 이것은 안 해’ 이런 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모두가 다 감액이예요. 그러면 이 상임위 예산소위가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정도는 정부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고 어찌다 정말 이것은 감액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것 의미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자근 위원** 하지 말까요, 그러면?

○**오세희 위원** 지금 다입니다. 건건이 다 있으면 이것을 도대체…… 이게 한두 개 있어야 되는데 다 지금 미뤄 놔단 말이에요, 산업부 것도 마찬가지고. 저도 작년에도 하고 해 보지만 저희 전 정부에도 이렇게 반대 안 했거든요, 한 두세 개 가지고 집중했지.

○**강승규 위원** 그러셨어요?

○**오세희 위원** 우리 그랬잖아요.

○**강승규 위원** 그래요? 구자근 예결위 간사께서 예를 좀 들어 주세요.

○**오세희 위원** 우리 전 정부에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강승규 위원** 그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오세희 위원** 아니, 이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지금……

○**강승규 위원** 한 5배는 더 했어요.

○**오세희 위원** 아니고 진짜, 지금 시간이……

○**권향엽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는 합의 처리했습니다.

○오세희 위원 합의 처리했어요.

○허성무 위원 우리 산자위에서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김종민 위원 아니, 의정활동을 그렇게 보복하듯이 하면 언제 정치가 제대로 정상화되겠어요?

○오세희 위원 지금 6시인데요. 6시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강승규 위원 보복이 아니고 저희도 지금 추정 예산을 제대로 편성했는지 심의해야 되겠습니다. 보복이 아니고 제대로 심의하는 겁니다.

○김종민 위원 아니,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전임 정부 때 어떻게 했다고 지금 이렇게 한다, 이게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할 얘기에요?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오세희 위원 아니,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라 모두가 다, 건건마다 다 되어 있거든요.

○강승규 위원 건건마다 그러지 않고 있어요.

○오세희 위원 뒤에 보면 다 그래요.

○강승규 위원 언제 건건마다 그랬어요?

○오세희 위원 아니, 여기 뒤에 다 그렇다고.

○강승규 위원 아니, 지금까지 심의를 했는데 언제 건건마다 했어요? 제가 제기한 게 건건마다 그랬어요? 저 3분의 1도 안 했어요.

○오세희 위원 아니, 거의 산업부 것도 그렇게 했고 이것도 그렇잖아요.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 강승규 위원님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6시는 다 되었는데, 저는 진짜 이게 의미가 있나……

○강승규 위원 예산심의를 무슨 시간 정해 놓고 합니까?

○오세희 위원 아니, 밤샘 수도 있어요.

○강승규 위원 예, 하세요.

○오세희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심의 내용이. 이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대선배니까 더 아시겠지만.

○강승규 위원 그런데 저희도 이런 예산편성은 아닌 것 같아요.

○구자근 위원 이야기를 좀 들어 주세요. 지금 수출기반……

○오세희 위원 여태까지 들어 드렸어요. 저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구자근 위원 아니, 저 부대의견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지원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다 들어 보셔야 되지 여기에다가 건건이 반대한다고 그렇게……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구자근 위원님, 얘기를 들어 주는 것은 좋은데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정리해서 의결을 하실 거냐, 제가 묻는 거예요.

○구자근 위원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답답하네, 진짜.

○김종민 위원 자꾸 보류를 한다니까, 보류하면 의결로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보류해 놓고서 계속 펜딩(pending)으로 가는 건지 이게 좀 답답한 거지요, 지금 보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구자근 위원 위원님, 제가 보류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의견만 제시했을 뿐이고 위원장께서 그것을 보류로 넘기시지 않습니까, 회의 운영의 원활함을 위해서? 그

래서 지금 수출지원기반활용에서 제가 부대의견……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보류로 하지 마시고 다수 의견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다수 의견대로, 그냥 위원회안으로 감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반대하는 위원 있으면 반대를 속기록에 남겨 놓으시고 전체회의에서 판단을 받으면 되지요.

○**구자근 위원** 그런 소위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부대의견이 있어서……

○**김종민 위원** 이런 식으로 보류를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소위원장 정진욱** 좋은 의견이지만 그동안 우리 예결소위 또는 소위가 해 온 전통이 아니어서 보류를 할 수밖에 없고요.

○**구자근 위원** 이 지원은 제가 반대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소위원장 정진욱** 그러면 5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이게 공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지금 중동지역 수출 기업이 1만 개 넘는다고 했는데 대충 보니까 한 1만 3000개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50% 이러니까 제가 보기에 추정치로 대충 한 것 같은데, 추정치로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수요가 많아질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추경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이런 논란 속에서 이 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에서 그 내용들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맞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래서 저는 삭감 의견 내지는 않았습시다. 부대의견으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지금 전쟁 상황에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이나 우리 수출 기업들의 애로 사항들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나가게 되면 빨리 수요 파악을 해서……

지금 50%로 하고 개수까지 이야기 다 하셨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제가 보기에 추정치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현장에 빨리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1차 바우처가 4월부터 지원이 될 예정인데 추경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5월부터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게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정진욱** 그러면 5번에 대해서는……

○**구자근 위원**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이 있어서 나는 모르겠다마는……

○**소위원장 정진욱** 감액 의견을 철회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강승규 위원** 누가 철회해요?

○**권향엽 위원** 김성원 위원님이세요.

○**구자근 위원** 저는 부대의견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강승규 위원 김성원 위원이 반대 의견을 해 놔잖아요.

○소위원장 정진욱 김성원 위원님이 반대 의견을 냈는데……

○구자근 위원 뭐 당사자가 없으니 어떻게 하겠나?

○소위원장 정진욱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오세희 위원 그런데 여기 소위는 아니잖아요. 소위 위원 아닌데…… 없는 위원님까지 여기서 하면 어떻게 해요? 없는 위원님까지 여기서 얘기를 들어야 되나요?

○김종민 위원 아니, 이런 것은 좀 동의를 해 주셔야, 수출바우처 이것……

○강승규 위원 동의 안 한다고 안 했는데 왜 자꾸들 그러세요? 제가 여기……

○구자근 위원 눈치껏 넘어가면 되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나는 신속하게 집행하라 그랬잖아.

○오세희 위원 우리 예결소위에다 맡겼으면 예결소위 위원님들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권향엽 위원 저는 구자근 위원님의 부대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구자근 위원 예, 맞습니다.

○허성무 위원 동의하고 넘어갑시다.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강승규 위원 수출지원기반 동의할게요.

○소위원장 정진욱 그러면 구자근 위원님의 부대의견에 동의하면 김성원 위원님의 의견을 채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원안.

○이재관 위원 원안.

○소위원장 정진욱 아, 원안입니까?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6번도 마찬가지로 원안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6번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봐야지요.

○소위원장 정진욱 아니, 6번도 같이 가자고 하신 것 아닌가요?

○강승규 위원 아니, 의견을 물어봐야지요.

○소위원장 정진욱 6번 의견 있으십니까?

○오세희 위원 없지요?

○강승규 위원 예.

○소위원장 정진욱 특별히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집을 보면, 쪽 한번 넘겨 보세요. 다 세모입니다. 다 감액이에요. 그러면……

○구자근 위원 아니, 다른 사업이 많은데 감액만 여기에 넣어 놓은 거지.

○소위원장 정진욱 지금 산업부도 아니고 중기부입니다.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는 중기부 예산에 대해서 전부 감액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현장감이나 절박감 없이 이렇게 예산을 심사해도 되는 것인지, 논리로만 예산을 심사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요.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진행만 해 주세요.

○강승규 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예산심의 지침을 얘기할, 저기 하시는 게 맞습니까?

○소위원장 정진욱 그래서 제가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나가셨을 때 그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강승규 위원 뭘 정리를 했어야 돼요? 뭘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구자근 위원 뭘 정리를 해요? 단독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독으로 하세요, 그러면.

○소위원장 정진욱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런 방식으로 논의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강승규 위원 그러면 논의를 안 하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구자근 위원 일방적으로 입을 막고 그렇게 한다는 건가?

○강승규 위원 아니, 예산편성이 제대로 됐는지 논의 안 하려면 뭐하러 해요?

○소위원장 정진욱 와서 합의를 한다거나 또는 서로가 양보를 한다거나 이런 게 전체 돼야지.

○구자근 위원 이게 위원장님 마음대로, 의견대로, 생각대로 다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소위원장 정진욱 그렇게 안 되지요. 제 마음대로 다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구자근 위원 그런데 그것 아까 무슨 말씀이세요? 나갔을 때 막지 않았어야 된다고, 찾아가지 않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소위원장 정진욱 아니, 최소한의 협력은 있어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김종민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민주주의가 다수와 마음대로 해도 안 되는 거지만 소수파가 주장한다고 거기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대개 민주주의라고 해서 굴러가는 형태를 보면 여 7, 야 3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책임지고 한 7 정도를 밀고 가고 야당이 막 싸워 가지고 한 3 정도를 이렇게 좀 양보받아 가지고 좋아, 이대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항목을 보면 반반이에요, 그냥.

그러면 정부가 뭐하러 전문적으로 예산편성, 이것을 연구하고 이렇게 짭니까? 이 정도 되면, 지금 특히나 이번 추경이 석유 쪽하고 중소기업 쪽인데 중기부 추경 예산이 다 세 모표예요. 그러면 만약에 야당 위원들이 이것을 다 관철시킨다고 치면 실제 추경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런 추경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야당 위원님들이 이런 것은 의견은 내지만 적어도 ‘한 여 7, 야 3 정도의 감각으로 우리가 합의를 하겠다’ 이런 정도 생각을 해 주셔야 쟁점이 있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있지만 야당이 양보해서 이렇게 간다’ 이런 것을 좀 남겨 줘야 나머지도, 여당 입장에서 ‘이것은 감액을 받아들이자’, 이게 이렇게 왔다 가야 이 회의가 끝나요. 그런데 지금 이것 이렇게 5 대 5로 가면 이 회의 안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감액 의견은 말씀하시되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것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다수의 위원들이 비슷하게 간다 그러면 수용 좀 해 주시고 가끔가다 하나씩 딱딱, 이것은 안 되겠다고 세계 얘기를 해 주셔야 효과가 있는 거지요.

○강승규 위원 예, 그러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매번 이러면 어떡합니까?

○강승규 위원 매번 안 그랬습니다.

○구자근 위원 아니, 매번 그렇든 안 그렇든……

○강승규 위원 매번 그랬다는 것을 어떻게 자꾸 단정해서 위원장은 심의 방향을 지시를 내리고 위원님들은 그것을 가지고 야당 위원의 비판 내용을, 무슨 관례를 없……

○오세희 위원 위원님 안 오실 때 구자근 위원님께서 계속 그러고……

말씀 좀 하세요. 오시기 전에 계속 그러셨잖아, 반대.

○강승규 위원 오세희 위원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단정하지 마세요, 상대 위원에 대해서.

○소위원장 정진욱 지금 기업들이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현장의 고통과 절박감 없이 논의하면 국민들이 우리를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습니까? 제발 좀 국민의힘 위원님들 절박감을 가지고 좀 해 주세요.

○구자근 위원 아니, 그것은 또 무슨 말씀이세요?

○정동만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강승규 위원 정진욱 위원장님이 지금 위원들 평가해요?

○구자근 위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정진욱 제가 평가했으면 죄송합니다.

또 심사 이어 가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호소드리는 것 아닙니까.

○오세희 위원 답답해서 그러겠지, 하루 종일 저러고 있으니.

○구자근 위원 왜 그러세요? 또 옛날 이야기 꺼내야 되네. 건건이 담당 정해 가지고 다 반대 안 했습니까?

○소위원장 정진욱 6번에 대한 의견 해 주세요.

○오세희 위원 오늘 하루 종일 저렇게 사회 보는데 답답해서 그러실 거예요, 아마.

○구자근 위원 아니, 당연하지. 전에 보니까 민주당 위원님이 예산편성권도 국회에 가지고 오자 그러대.

○소위원장 정진욱 다 원안으로 했군요.

7번 가겠습니다.

하나씩 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성소미 자료 6페이지, 7번 창업저변확대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국회가 의결한 창업지원 사업을 축소하고 창업정책을 불특정 다수 대상의 분산형·이벤트형 지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정책 효과와 효율성 측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고려해서 155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리고 불필요한 현금성 지원 1378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에 창업 열풍 확산을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하반기 추가 운영을 위해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부대의견도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산이 없는 신규사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추경 확정 이전 선집행한 경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역혁신창업활성화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과도한 단발성 창업 지원이

폐업으로 이어지는 등을 고려하여 98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반면에 지역 경제 위기 대응력과 회복력을 강화하고 지역 창업 촉진을 위해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부 의견 들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정부로서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감액안 수용이 곤란합니다.

먼저 지역혁신창업활성화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지역의 창업 인프라를 리모델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역 창업이나 혁신 활동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적하신 부분들이 여러 건이 있어서 하나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대 간 격차라는 K자형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서 청년 실업 해소와 쉬었음 청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생 안정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위기 이후에 경제 도약 발판 마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는 이 모두의 창업이 분산·이벤트가 아니라 일종의 예비 창업가 육성 플랫폼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창업가 육성이라는 기존 예산의 목적과 기능이 유지됐다고 보고 있고, 다만 정책의 효과성과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해 운영 방식의 변경이라고 생각하고 기획예산처와 사업목적, 지원 대상, 비목 등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강승규 위원 예, 제가 질의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우리가 시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핵심만 짧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하기 전에 예산심의에서 자꾸 지침 내리실래요, 정말?

○구자근 위원 아니, 질의하는 걸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왜 그렇게 자꾸 가이드라인을 굿습니까?

○강승규 위원 이렇게 물어볼게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창업저변확대 코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신규 예산은 창업저변확대로……

○강승규 위원 신규 예산에, 창업저변확대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라고 들어가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강승규 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심의에서 올해 통과시킨 예산 중에 아무리 찾아봐도 창업저변확대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금 광화문 네거리에 이렇게 쪽 붙었어요. 모두의 창업 패키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 모두의 창업 예산이 나왔나 했더니 예비창업패키지 예산에서 260억 그다음에 창업중심대학에서 예산을 176억을 끌어서 436억이…… 이미 추경에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라는 신규 예산이 들어오고 추경이 시작도 하기 전에 올해 예산에 창업중심대학과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에서 460이 집행되고 있어요. 이게 예산 전용이 아니에요? 이것을 그냥 창업저변확대로 인식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국회 예산심의의 취지에 맞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추경 예산 전에 이미 1기는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승규 위원 1기를 진행하고 있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그게 창업사업화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강승규 위원 아니, 이랬잖아요. 작년 예산에, 그러니까 올 예산 편성에 모두의 창업패키지가 있으니까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신규 코드를 또 땀어요? 아니,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신규 코드……

○강승규 위원 이 사업, 정부가 이미 시작한 사업과 정부가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한 것과는 다른 사업이에요? 맞아요, 달라요? 같은 사업이에요, 다른 사업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방식이, 저희가 추경 예산 전에 이미 모두의 창업……

○강승규 위원 아니, 그 사업명이, 정부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 사업 어디에서도…… 이게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된 거니까 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정부가 편성을 하더라도 올 2026년 예산에 모두의 창업 패키지 예산이 있으니까 썼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라고 지금 막 진행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추경에 모두의 창업 패키지 예산으로 신규 예산을 또 천삼백 얼마를 요청했어요. 이 사업과 이 사업이 다른 거냐니까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1기 사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비 창업가 육성을 위한 기존 예산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브랜드 차원에서 모두의 창업이라는 브랜드만 썼다……

○강승규 위원 브랜드 차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2기 때는……

○강승규 위원 그러면 이름은 같은데 내용은 달라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강승규 위원 어떻게 달라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1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예비창업패키지와 창업중심대학의 예비 창업자 육성 기능을 빼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강승규 위원 아니, 뺐다는 거지. 사업 내용이 같냐 이거지.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사업 내용은 같습니다.

○강승규 위원 같으면 그게 무슨 신규사업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아니, 그러니까 2기……

○강승규 위원 아니, 지금 말장난해요, 차관님?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아니, 신규사업이 아니라 이번에 추경으로 2기……

○강승규 위원 아니, 예산 코드에 신규사업이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그러니까 2기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을……

○강승규 위원 지금 말장난해요, 국회에 와서?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아닙니다, 말장난이 아니……

○강승규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라며, 이것은 기존 사업이고 사업비가 있다면서요.

○김종민 위원 위원장님, 얘기를 충분히 하셨으니까……

○소위원장 정진욱 버르고 버르셨으니까 더 하십시오.

○김종민 위원 저 취지에 대해서 제 의견도 얘기해 볼게요.

○소위원장 정진욱 더 하시고 그다음에 말씀하십시오.

○강승규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잖아요.

○김종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가 충분히 전달됐어요.

○강승규 위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김종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들었으니까 저것에 대한 의견을 한번 토론해 보자고요, 토론이 필요해요.

○소위원장 정진욱 먼저 말씀하시고.

○강승규 위원 기존 사업을 전용해서 써 놓고, 그러니까 기존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을 정부가 예산을 올해 얼마 반영했으면 그에 대해서 많은 창업패키지 준비를 해 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확 줄였잖아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확 줄었다기보다는 일부를……

○강승규 위원 줄였잖아요, 뭘 자꾸. 기존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을 올해 300명으로 진행한다면서요. 그러면 기존에 사업설명회도 다 했고 국회에서 편성할 때 사업계획이 있었잖아요. 예비창업패키지라는 게 작년도에 얼마 했고 올해도 얼마 하겠다 해서 우리가 그걸 승인해 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강승규 위원 그런데 거기서 그 사업은 300명으로 확 줄여 놓고 이것을 모두의 창업이라고, 대통령 한마디에 그냥 갖다 써 놓고 이게 예산 전용이 아니고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썼어요. 써서 지금 하고 있어.

또 창업중심대학 기존 예산을 확 줄이고, 그걸 줄여 놓고 백몇십억을 여기다 전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 놓고 이것을 천삼백을 또 달래. 그런데 이것은 신규 예산이래. 그걸 국회가, 누가…… 그 사업 내용이 다르다 그러고.

그런데 차관은 계속 전용한 예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이것 같은 내용이다. 예비패키지의, 창업중심대학의 확장 사업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 확장 사업에 신규 사업을 더한 거다, 브랜드 통일 차원에서 이름만 같이 썼다, 내용은 좀 다르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프로세스가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이것을 인정하라 그래요? 아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이걸 전용한 것이 아니다, 계속 주장하실 거예요?

○소위원장 정진욱 강승규 위원님, 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대답해 보세요. 전용한 것이 아닙니까? 그 대답만 해 보세요. 전용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할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저희가 국가재정법상 사업목적이나 지원 대상, 비목 등에 변경이 없으면 전용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목적은 예비 창업가 육성이 동일하다고 아까 설명드렸고요.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러면 신규 코드 낸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기존의 1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고 저희가 2기 프로젝트는 왜 저변확대로 편성했냐고 하시면……

○강승규 위원 아니, 한 해에 똑같은 사업을 1기·2기 하는데 그 예산 사업코드가 다른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르게……

○강승규 위원 아니, 추경이라고 하더라도 코드가 다른 거냐고, 똑같은 사업을. 1기, 2기로 나눈다고 그래서 그게 코드가 다른데 전용이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님, 1기 프로젝트는 기정 예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활용을 한 거고요.

○김종민 위원 위원장님,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다른 위원도 들어 봅시다.

○소위원장 정진욱 됐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계속 같은 말씀이셔서 이 정도 하시고, 김종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저는 강승규 위원님께서 너무 여기에 현미경을 갖고 보시면서 약간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봅시다.

○강승규 위원 아니, 위원 보고 착오 있다는 얘기는 쓰지 마세요.

○김종민 위원 아니, 생각이…… 잠깐만, 제가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승규 위원 위원 보고 착오 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단정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김종민 위원 자,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예산의 내역사업 명칭입니다. 지금 강승규 위원님이 거리에서 본 것은 이재명 정부의 창업 정책 슬로건이에요. 그 정책 슬로건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창업 지원 사업을 여러 가지 한 거예요. 그런데 모두의 창업이 되게 중요해져서 또는 이게 필요해져서 예산 내역사업으로 명칭을 하나 따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이 이번 추경에 들어온 거지요. 그래서 이걸 동일하게 해서 이게 전용이다 이렇게 논할 사항이 아니고요.

사실은 모두의 창업이 이재명 정부 갑자기 와서 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 한다고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이게 다 창업 국가 하자고 한 겁니다. 나는 그 선견지명에서, 그 명칭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를 안 했지만 창업 국가를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은 보수든 진보든 다 지지했습니다. 왜? 그 길로 가야 돼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지금 이 AI 시대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로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예전의 산업혁명 때처럼 다른 일자리가 생기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디지털혁명 때처럼 다른 일자리로 대체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일자리 대 전환에 대한 유력한 대안 중의 하나가 이 창업이고 창업을 하이테크 창업, 카이스트 나온 사람들, 삼성전자 출신들만이 아니라 누구나가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특히 AI가 나왔잖아요. 그러니 AI가 있어서 열 명, 스무 명 직원 데리고 기업 할 수 있는 세상이 왔어요. 그러면 모두가 다 그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국가가 빨리 대책을 세워 줘야지요.

그래서 저는 모두의 창업이라는 용어가 정말로 적시타다, 지금 타이밍이 좋다고 봐요. 이 AI 시대에 불안해하는 것, ‘당신 불안하냐, 그러면 창업으로 당신 인생을 새롭게 한번 돌파해 볼 수 있다’, ‘나는 카이스트도 안 나왔고 테크놀로지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상관없다. AI 같이 결합을 해서 모두 창업할 수 있는 나라로 지금 가고 있다’, 이게 정책 방향이 맞지요. 그러면 그 정책 방향이 맞고 좋으면 그걸 집중적으로 하는 예산 내역 사업을 하나 만드는 게 그게 뭐가 중복이고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모두의 창업을 이재명 정부가 했다고 그래서 공격하는 것도 온당하지가 않고, 왜? 보수 정부, 국민의힘 정부 계열에서도 다 창업 국가, 창업을 위한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AI 시대에 본격적으로 더 확대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너그럽게 수용을 해 주시고.

특히 지금 강승규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오해입니다. 모두의 창업이라고 하는 예산 사업을 그전에 내역도 안 잡아 놓고 추진했다가 다시 뒤늦게 잡아 놓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정책 명칭으로 브랜드화시켜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가 이게 반응이 좋고 필요하니까 또 중요하니까 이걸 예산 내역으로 처음 잡은 거라고 보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 문제가 그렇게 크게 복잡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소위원장 정진욱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구자근 위원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요.

○소위원장 정진욱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해다라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고, 제가 보기에 차관께서 여기 이 자리에서 말장난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작년에 당초 예산받을 때 이 목이 예산명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전용 아니지요, 새로 신규사업을 넣었으니까. 그게 있어서 같은 목 내에서 바뀌어야 전용이 되는 건데 당연히 작년에 안 했으니까 전용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지금 김종민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예산을 활용한 브랜드 정책으로 했다가 이게 중요해져서 추경으로 정식 사업으로 신청했다……

○구자근 위원 그러니까 오해를 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 예산 세울 때 분명히 이 창업패키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260억 받고 750명 할 때는 충분하게 설득을 시켜서 예산을 다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그 목에 썼어야 되는 건 맞지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처음 계획대로 안 했냐고 말씀하시면 변경은 있었습니다.

○구자근 위원 해야 되지요. 그러면 허위 예산서를 제출한 거지요. 750명이 300명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예를 들어 충분히 그 정도만 해도 가능했을 예산을 지금 모두의 창업으

로 쓰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용은 아니지만 이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해 주고 의결해 준 부분에 대해서 부처에서 임의로 신규 사업을 집행하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집행부를, 부처를 예산 통제하는 기능을 실질적으로는 무시한 처사입니다, 이게. 그런 선례를 남긴 거예요, 전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2차 프로젝트도 추경이 아닌 다른 쪽에서 또 갖다 쓰면 되지 않습니까? 왜 여유가 없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뭐 국회에서 의결해 준 그 내용만 가지고 그렇게 알아서 신규 사업들 해서 갖다 쓰는데 전용 아닌 것들 찾아서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지금 이걸 오디션 방식으로 하실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오디션이라기보다는 총 3단계에 걸친……

○구자근 위원 예, 뭐 그런 저런 과정을 거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선별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예, 그러니까 과정들, 예를 들어 중점 평가사항이나 평가위원도 구성해야 되고……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보육도 같이 들어가고 사업화 지원도 들어갑니다.

○구자근 위원 그런 방향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지금 준비돼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지금 다 플랫폼이 구축돼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 플랫폼이 준비돼 있다는데 왜 이 답변은 또 이렇게 야당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가 직접적으로 물었는데 ‘경영과정별로 중점 평가사항 및 평가위원 구성 방향에 대한 지침은 4월 말까지 수립 예정이다’, 내부적으로는 다 수행하고 뭐 여당에만 자료 줬어요? 왜 자료 주는 거는 이런 방향으로 주고…… 다 준비했다면서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님, 선발 평가과정에 대한 기준은 개별 운용사들이 이미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자료를 다 줘야 되고, 그리고 정히 할 거라 치면 2차 추경에서 이 정도 금액 필요 없습니다. 1차 수준으로, 절반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오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세희 위원 그러니까 이 창업 프로젝트가 기존의 예비창업패키지가 있고 창업중심대학이 있고 혁신 소상공인 창업 이렇게 청년 창업지원 사업에 의결이 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중기부에서 없던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의…… 우리가 왜 브랜딩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각자, 요즘의 흐름에 맞게 사업의 이름 명을 다룰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뭐냐면 창업 지원 범위 내에서 정책이고 어떤 창업 지원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이걸 가지고…… 왜냐하면 제 주위에도 이걸 응모한 사람들이 무지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갔다 왔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기 대응이나 일자리의 전환, 창출 이런 걸 위해서 역할이 있는

데…… 그리고 각자 프로젝트마다 뜻이 있거든요, 목표가 있고. 이걸 꼭 굳이 그렇게 전용됐다, 이게 너무 과거와 똑같다 이런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굳이 예산을 삭감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사업의 취지 또 이게 전용이 아니고 새로운 방식의 변경이다 이런 부분들은 말씀 나누시면서 충분히 모두의 창업 관련해서 공유가 된 것 같습니다.

○강승규 위원 공유 안 됐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다만 감액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있어서 이 안은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8번, 창업사업화지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8번,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창업중심대학과 관련해서 긴급한 민생 피해대응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으며 추경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24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반면에 창업도시와 연계하여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지정 확대를 위해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내내역사업 지역창업패키지에 대해서는 긴급 피해대응과 관련이 없는 점, 사업 프로세스 연내 완료가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서 510억 8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역창업 촉진을 위해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창업중심대학과 지역창업패키지 두 건에 대해서 정부 측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로서는 정부안 유지를 희망하고 감액안 수용이 어렵습니다.

이 건은 결국 창업도시 지정에 대한 추경안 적합성인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창업도시 지정을 통한 사업 추진이야말로 청년 실업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고 지금 가장 해결해야 될 시급한 현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권향엽 위원님.

○권향엽 위원 위원님들의 말씀을 차분하게 적극적으로 경청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좀 많이 답답합니다.

지금 창업중심대학 예산이나 창업패키지 예산 이 자체는 사실은 이게 추경의 목적에 굉장히 부합한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경기가 불안하고 고용시장이 위축되면 가장 직접적이고 장기적으로 피해를 입는 계층이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청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년들이 일터로 나서지 못하고 그냥 쉬었음 하는 통계가 48만에 이르는 그런 현상입니다. 특히나 비수도권에 창업중심대학이라든가 창업패키지를 통해 가지고 청년들의 혁신 아이디어들을 창업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사실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번번이 항목마다 여당 위원님들과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이 아

주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런 양상이 있는데 꼭 이 자리에서 이 논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여당 위원들의 의견은 그냥 패싱하고 계속해서 보류로 넘어가는 경향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정중하게 좀 이런 점도 균형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정부안대로 동의해서 이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이 사업에 대한 감액 의견이 전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게 지역 대학과 지역의 자치단체하고 연계되는 사업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창업도시 지정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이재관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관 위원 오히려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력이 집중되는 부분들을 완화하는, 창업의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지역거점도시를 육성해서 지역의 균형을 도모하자라는 사업의 의미도 있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재관 위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이 사업은 더 활성화되고 더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이 사업 규모가 240억, 510억…… 이것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오히려 더 증액을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감액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더 심사숙고해서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승적으로 받아서 진행을 빨리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저 의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창업중심대학 올 본예산에 882억이 책정이 되었고,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 176억을 모두의 창업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에 240억 예산을 창업중심대학에 증액해 달라는 애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맞습니다.

○강승규 위원 이게 맞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전용은 아니고요, 아까 모두의 창업의 예비 창업 부분을……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가……

○김종민 위원 차관님, 모두의 창업이라는 게 그때는 예산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종민 위원 자꾸 그렇게 답변하니까 헷갈리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죄송합니다.

○김종민 위원 그것은 모두의 창업 사업이 아니에요. 그냥 모두의 창업이라는 브랜드 밑에 있었던 기존의 예산 사업으로 한 거지요, 차관님.

○소위원장 정진욱 그렇지요.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걸 묶은 브랜드가 모두의 창업인

겁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이것 참 현혹시켜도…… 아니, 모두의 창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기존 예산 칠백몇 명 뽑기로 했던 것을 300명으로 줄여 놓고 거기서 빼 쓰고 창업중심대학 있는 것, 작년에 사업계획 다 넣어 가지고 국회가 승인해 줬는데 그 예산에서 쪽 빼서 170억 쓰고 다시 여기다가 또 추정해서 증액해 달라는데 계속 아니라고 우기면 됩니까?

○김종민 위원 그건 예산 사업이 아니지요. 아, 나 진짜.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님, 다시 설명드리자면 예비 창업자 육성 예산을 창업중심대학에 포함된 예산의 일부……

○강승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단순 브랜드예요, 모두의 창업이?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모두의 창업은……

○강승규 위원 이것 홍보비 얼마 들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강승규 위원 이것 얼마 들었어요, 홍보비?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홍보비는 1차는 지금 100억 편성돼 있는데……

○강승규 위원 아니, 이거 30억 쓴 게 그냥 브랜드…… 이것 모두의 창업 사업 홍보한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30억은 후에 진행할 그런 TV……

○강승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짜로 했어요? 이걸 예산이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엠블럼 제작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승규 위원 브랜드는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브랜드는 그냥 이름만 붙이면 그런 브랜드고, 이 모두의 창업이라는 사업 홍보를 하는 것 아니예요? 홍보비 여기 안 들어갔어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모두의 창업은 아시는 것처럼 모두의 성장이라든지 그런……

○강승규 위원 모두의 창업은 그냥 브랜드야?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국정과제의 흐름상……

○강승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규 코드 낸 건 계속 얘기했는데 그건……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모두’라는 표현이 창업하고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강승규 위원 아니, 신규 편성된 예산, 모두의 창업은 뭐예요? 단순 브랜드 사업이예요, 그것은?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강승규 위원 그건 사업이냐고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그것 1차는 브랜드고요.

○소위원장 정진욱 잠깐만요.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런 말장난이 자꾸 어디 있어요!

○소위원장 정진욱 강승규 위원님.

- 강승규 위원 하나는 단순한 이름, 브랜드고……
- 소위원장 정진욱 강승규 위원님.
- 강승규 위원 하나는 사업 예산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 소위원장 정진욱 강승규 위원님.
- 강승규 위원 그런 거짓말……
-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사업 예산을 신청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 강승규 위원 여기 국회가 지금 애들 장난하는 데예요? 지금 교육시키는 거예요?
-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 소위원장 정진욱 강승규 위원님.
- 강승규 위원 우매 교육 시키는 거예요?
- 김종민 위원 강 위원님, 그렇게 강압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 강승규 위원 아니, 우기니까 그렇지. 우기니까.
- 김종민 위원 아니, 나는 다 이해가 되는데 이해 안 된다고 그렇게 큰소리치면 어떡해, 지금.
- 강승규 위원 뭐가 이해가 돼, 이게!
- 오세희 위원 아니, 그런데 너무 고압적이세요.
- 소위원장 정진욱 강승규 위원님.
- 김종민 위원 아니, 회의 때 큰소리를 치고 그래요?
- 강승규 위원 왜 남의 이해……
- 김종민 위원 남들 다 이해가 되는데 혼자 이해 안 되는 걸 큰소리치면 돼?
- 강승규 위원 본인만 이해하세요. 본인만 이해하세요!
- 소위원장 정진욱 강승규 위원님!
- 김종민 위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아니,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 강승규 위원 말이 되는 얘기가……
- 김종민 위원 아니, 이런 걸 트집을 잡아, 이런 걸?
- 강승규 위원 말이 되는 얘기를, 우기고 있으니까 그렇지.
- 오세희 위원 아니, 중기부도 인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직원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
- 소위원장 정진욱 국회상임위 예산소위가 강승규 위원님의 직성을 푸는 곳이 아니에요.
- 구자근 위원 아니, 그걸 왜 직성이라고 이야기하세요?
- 오세희 위원 직원들을 너무 그렇게 말하네요.
- 강승규 위원 그러면 정진욱 위원 직성은 어떤 건데요?
- 소위원장 정진욱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 강승규 위원 정진욱 위원 직성은 계속 야당 위원들 가르치는 게 정진욱 위원 직성이예요?
- 소위원장 정진욱 아니, 여기 차관님이 강승규 위원님이 열 번 이상 그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알아들을 분입니까?
- 오세희 위원 아니, 차관 정도 와서 질문하고 하면 정상적으로 해야지 뭐 그렇게 다그

칩니까? 이것 너무하는 건데. 너무 강하게 하십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저는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반드시 하반기에는 상임위 위원장 전체를 우리 민주당이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구자근 위원 뭘 소리 하는 거야!

○강승규 위원 나갑시다.

○구자근 위원 지금부터 다 해라, 지금부터.

○소위원장 정진욱 우리가 여기서 다수결로 합의를 해도 위원장이……

○강승규 위원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구자근 위원 아니, 위원장이 도대체 추경을 하려고 하는 거야 말려고 하는 거야?

○강승규 위원 자, 퇴장.

○소위원장 정진욱 위원장이 국힘인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수결 안 하는 거고요.

○강승규 위원 예, 그러세요. 혼자 하세요.

○소위원장 정진욱 김밥 드시고 가야지요. 김밥 준비했는데 김밥 안 드십니까?

○강승규 위원 가자, 철수.

(일부 위원 퇴장)

○김종민 위원 아니, 꼭 잡을 거 몇 개를 딱 특정해 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지. 무슨 사 사건건이 다……

○허성무 위원 정상 진행하세요, 회의.

○소위원장 정진욱 진행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정상 진행하세요, 다시 빠르게. 가부만 묻고 빨리빨리 의결합시다.

○소위원장 정진욱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고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8번, 창업사업화지원……

전체 한번 쪽 일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류했던 것들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사업화지원 이것은 원안대로 가는 겁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9번, 민관협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자료 8페이지, 민관협력 창업자육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은 단기 피해대응 및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784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리고 또 협업 성과를 보면 라이선스 계약, 공동 R&D, 실증 고도화 등에 성과가 없었으므로 274억 4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글로벌 기업협업 프로그램은 현시점에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서 2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부 의견 들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과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계속해서 자료 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재기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실패 기업인 재도전 지원을 위한 중장기 창업지원 사업으로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한 점, 지원기업 생존율 등 성과 검증이 선행되어야 되는 점을 고려해서 1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취지와 무관한 홍보성 예산인 재도전 응원본부 지원 사업비 1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출되었습니다.

반면에 폐업 증가에 따라 지원 확대가 필요하고 재도전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출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정부는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사유로는 지금 지적하신 재도전 지원이 중장기 창업지원이 아니라 폐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라는 단기성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받은 기업의 생존율이 훨씬 높을 정도로 사후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특히 재도전 응원본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개선도 재도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번도 원안으로 통과하겠습니다.

11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11번, 창업생태계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예산이 없음에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 또 창업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긴급추경 편성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서 53억 원 5000만 원 전액 감액 필요 의견과 그리고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도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산이 없는 신규사업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예비·초기 1인창업기업의 창업역량 강화, 사업모델 실증, 초기 매출 창출까지 연계 지원하기 위해서 내역사업 1인창업기업 코칭 지원을 신설하여 30억 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먼저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K-솔로프리너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증액안 수용하겠습니다.

정부안 유지가 필요한 이유는 이게 기존 예산을 활용해서 목적 범위 내에서 저희가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해 오다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등 여러 가지 부분이 확인돼서 이번에 추경 사업으로 급하게 요청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줄속으로 추진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이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제가 증액 의견을 냈는데요.

창업이라는 게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용어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모두의 창업이라고 했을 때 모두의 창업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창업지원정책과 특별히 차이가 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창업가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정부의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게 메시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런 점에서 보면 1인창업이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1인이라도 창업을 할 수 있는, 특히 AI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런 내역이 지금 없어요, 우리 예산 내역에. 그래서 굳이 제가 여기다가 1인창업이라고 하는 사업내역을 하나 좀 집어넣자라고 제안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이 만약에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뿌려지면 모를까 일단은 30억이면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시범사업이니까 기본적으로 비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 내지는 고학력, 1인창업 수요가 절실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이 될 필요가 있겠다, 그 점을 꼭 당부를 드립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권향엽 위원님.

○권향엽 위원 정부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국민 누구나 다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 열풍을 좀 불업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런데 특히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은 창업부터 시작해서 법률적인 문제, 세무적인 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답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인데, 일반 국민들이 또 이렇게 생각이 있는 분들이 쉽게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잘 홍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만 시스템을 갖추지 말고 누구나 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쉽게 홍보하는 방안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 균형 있게 이러한 곳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마음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특히 도심 중심으로만 배치되지 않도록 좀 더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기존에는 오프라인 원스톱 플랫폼만 운영하다가 올해부

터 온라인 플랫폼도 해서 접근성을 개선했고요, 전국 17개 창조경제센터에서 오프라인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열일곱 곳의 창조경제지원센터가 주로 도심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잘 안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1인창조기업이 현재 100만 개를 넘어가는 만큼 1인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1인창조기업지원센터가 40개가 있는데 현재는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고 실제 보육이나 사업 지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40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15개 정도를 잘 선별해서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그러면 11번 창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의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원안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1인창업기업 코칭 지원 이것은 30억 반영하는 걸로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장님, 부대의견이 있고요 부대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말씀해 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부대의견이 지금 보시면 ‘예산이 없는 신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없는 신규사업은 기존에 진행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이신 것 같아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과 취지에 맞게 기존 예산을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신규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소위원장 정진욱** 그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규사업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재정 여건과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수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그러면 수정의견으로 부대의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벤처캐피탈선진화 사업입니다.

아이디어 단계부터 사업화 투자 연계까지 통합 지원하는 컴퍼니빌딩형 창업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수도권 중심의 내역사업 벤처스튜디오 활성화를 신설하여 49억 6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증액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민 위원** 이것도 하여간 비수도권 대책을, 수도권에는 벤처스튜디오가 되게 다양하게, 대기업도 있고 하니까 비수도권에 대한 대책으로 잘 구상을 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비수도권을 특화해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13번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성소미 인력유입 인프라 조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과 관련해서 비수도권 및 수도권 내 접경 지역,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과 청년 AI기술 핵심연구인력을 위한 자산형성 공제사업 지원을 위해서 3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지난번 상임위 논의도 있으셨기 때문에 증액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지출 연번 1번……

○허성무 위원 진행하시기 전에 잠깐만……

차관님, 이렇게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런데 그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되면 맞벌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소득기준이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런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상담회를 해 보면 미혼인 상태에는 소득기준이 조금 낮아서 충분히 지원 대상이 됐는데 결혼했을 경우에 정부가 청년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맞벌이가 되니까 소득이 많이 올라가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서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한번 정부의 여러 청년 지원 정책들 중에서 그런 게 없도록 잘 살펴 주시면 좋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알겠습니다.

결혼 패널티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 없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득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이 사업은 없고요. 다른 청년 지원 사업들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연번 1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자료 12페이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지출 사안입니다.

1번과 2번, 긴급경영안정자금(용자)와 신시장진출지원자금(용자)이고 위원님들 자료 21페이지 보시면 소상공인지원(용자), 이 세 꼭지에 관련해서 동일한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용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용자금 그리고 21페이지의 소상공인지원 용자와 관련해서 증액에 따른 부실률 추가 상승 우려에 대해서 부실률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한다라는 내용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채택하신다면 이 3건은 1건으로 정리해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통합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부대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국회에 보고가 상임위 보고를 말씀하시는 건지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상임위에 보고하는 거지요?

○김종민 위원 당연히 그런 것 아닐까요?

○전문위원 성소미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당연히 상임위로 해야지요.

○소위원장 정진욱 상임위 보고로.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상임위 보고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은 국회를 상임위 보고로 하는 걸로 하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번.

○전문위원 성소미 계속해서 자료 13페이지,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입니다.

내역사업인 창업기반지원은 긴급 민생 추경의 직접성·시급성이 부족하고 즉시 소비 진작과 현장 피해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15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창업 지원보다는 폐업 예방 및 보호가 더 중요하므로 역시 동일하게 15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정부로서는 감액안 수용이 곤란합니다.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원안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4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14페이지 4번, 재도약지원자금(융자)입니다.

내역사업인 재창업자금은 추경 목적과의 부합성이 낮으므로 5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반면에 민간 금융권이 지원을 회피하는 성실 재창업자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해서 재도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부 측 말씀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정부로서는 감액안 수용은 곤란하고 정부안 유지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5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입니다.

모태조합출자는 긴급 민생 추경과 시급성·직접성이 부족한 점, 자펀드 결성과 실제 자금 집행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 미투자액 발생 우려에 따른 단계적 출자를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17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 취지와 맞지 않는 창업열풍펀드 300억 원, 제도전펀드 200억 원 등 총 5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출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정부로서는 감액안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고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결국 시급성·직접성 부족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업의 중요성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투자 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벤처투자의 기본 구조상 사실 일정 부분의 미투자 재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존 펀드를 통한 지원은 이미 주목적 투자 분야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결성된 펀드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초기창업·지역·제도전 펀드의 출자를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점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원래의 취지가 투자에 취지가 있기 때문에 미투자액이 최대한 적게 나오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벤처투자회사들이 미투자하는 경우가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용석 제1차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류했던 걸 다시 한번 볼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 생각에는 보류했던 것은 다시 전체로 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허성무 위원 일단 빨리 진행을 하고 보류했던 거를 중소벤처기업부부터 먼저 보면 되잖아요.

○소위원장 정진욱 예, 지금 보류했던 걸 다시 보는 것은 좀 순서상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1차관님 잠깐 퇴장해서 쉬고 계시다가 곧바로 아마 보류 사업 심사할 것 같습니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연번 1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자료 15페이지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사업입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 대응을 위한 재보증재원 추가 마련을 위해서 정부 출연금 7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너무 급격히 상승하고 환율도 올라서 취약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위원님들……

○**허성무 위원** 정부 원안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정진욱** 통과하겠습니다.

2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은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로컬트랙)을 운영해 창업 열풍을 확산시키려는 내용인데 이것은 추경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453억 2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확실치 않은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과도한 예산 반영은 적절치 않으므로 현금성 지원인 창업활동지원금은 전액 삭감해 282억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계속해서 17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인 혁신 소상공인 도약지원과 관련하여 지역기반 소상공인·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K-라이콘 후보군을 발굴·육성하여 창업 촉진 및 일자리 지원, 지역균형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23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과 관련해서 긴급 민생 안정 목적의 추경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기 때문에 15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도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사업은 2025년 해당 사업의 민간운영사가 개인투자조합 내 주요 출자자의 대주주나 임원이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에 투자한 사례가 적발되었고 사업 목적에 부합한 유망 소상공인을 선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사를 미 실시하였으며 투자심의위원회 간소화 등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사례가 발견된바 중소기업부는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운영사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첫 번째,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에 대해서 감액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불수용입니다.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은 기존에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7 대 1에서 20 대 1까지 이르는 시장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고요. 또 최근 위기 국면에서 이런 창업지원이 지역경제에 굉장히 크게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원안 유지 의견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혁신 소상공인 도약지원입니다. 김종민 위원님께서 내신 증액 안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150억 원 감액에 대해서는 불수용입니다. 소상공인들이 민간투자와 연계돼서 기업형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강승규 위원님이 내신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권향엽 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과 관련해서 창업 열풍 확산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들의 아이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유용하고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내에서 1단계에서는 1000명 그리고 2단계에서는 2000명의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발굴을 해서 그거를 광역 오디션과 파이널 오디션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서 심사 단계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시장 수요를 감안하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 대상이 된 업종과 창업 아이템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 의원실로도 나중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2번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권향엽 위원 예, 없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2번 3개 사업 증액하고 그다음에 부대의견 수용하는 것으로 통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권향엽 위원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정진욱 부대의견 수용하신다고 아까……

○허성무 위원 정부가 수용한다고 했어요.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예, 정부가 수용하신다고 했으니까요.

○권향엽 위원 현장 미실시에 대해서도 되어 있는데 괜찮아요? 현장실사 미실시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부대의견 내용이……

○소위원장 정진욱 ‘사업 목적에 부합한 유망 소상공인을 선발해야 함에도 현장실사를 미실시하였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

○권향엽 위원 괜찮습니까?

○소위원장 정진욱 의견을 바꾸셔도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현장을 미조사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미 일부 관리 강화 방안을 실시는 하고 있는데……

○권향엽 위원 그러면 표현을 좀 달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위원장 정진욱 자구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외하고 수용 하나요, 아니면 그냥 부대의견은……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지적하신 부분이 민간운영사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더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추가 방안을 강구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그러면 이 구절이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지요?

○허성무 위원 부대의견에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그러면 ‘부대의견 중에서 중기부는 정책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고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운영사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

안을 마련할 필요'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해 주시면……

○소위원장 정진욱 그러면 그렇게 자구수정하는 걸로 통과하겠습니다.

그다음 3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와 관련해서 영세 소상공인의 에너지 관련 고정 비용 절감을 위해서 3314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액 금액은 동일하지만 증액 사유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똑같이 3314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포장재·배달용기 구입비를 포함한 직접 피해 지원 항목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증액 사유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내역사업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을 신설하여 1114억 3000만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부대의견입니다.

내역사업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의 통신비 항목은 전년도 전체 바우처 지원의 12.33%를 차지할 정도로 현장 수요가 높았으며 온라인·디지털 기반 영업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통신비는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경영비용에 해당하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제도 보완을 통해 통신비를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1인 여성 자영업자 육아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350억 78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역사업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과 관련하여 전쟁 피해 대응을 명분으로 한 추경에 성장 지원성 신규 내역사업을 편성한 것은 예산의 목적 외 편성 소지가 있어 4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첫 번째,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들 중에 1114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재 도시가스나 전기료는 아직 인상이 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유류비에 집중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고사용 업종, 산업위기지역 등 이런 취약 지역에 특화해서 지원하는 안으로 만들어진 1114억 증액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한 부대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희 위원님께서 통신비를 지원 항목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 국회 때 소액결제 건들이 포함돼서 사용되는 바람에 국감 때 지적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신사하고 그 뒤로 계속 협의를 해서 통신비 중에 소액결제하는 부분들을 빼고 그게 가능한지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다다라서 통신비를 포함시키는 대신에 유류비 지원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소상공인들이 그 차액으로 통신비 부분은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 부대의견은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세희 위원 예, 철회해요.

○소위원장 정진욱 나머지는 어떠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그리고 두 번째, 1인 여성 자영업자 육아 지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350억 7800만 원 증액안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 1인 여성 소상공인과 같은 취약계층들이 큰 타격을 받는데요, 여성 소상공인들은 여성 근로자와는 달리 출산 또는 육아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극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총액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그것도 물론 근로자에 비해서는 매우 부족하고요.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년 6개월까지 지원받는 반면에 1인 여성 자영업자들은 아예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해서 육아에 대한 지원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에 대해서는 400억 감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지역 특산물이나 지역의 스토리와 연계된 제품들을 개발하고 상품화해서 그 지역에 앵커 점포들을 늘리고 또 관광객들을 유입시키는 효과가 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전체로 보면 부대의견은 철회하셨고요, 4개 사업을 그대로 원안대로 가는 걸로 통과하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증액 의결……

○소위원장 정진욱 증액입니까? 잠깐만요.

첫 번째 거는 증액이고요……

○이재관 위원 두 번째, 1114억 3000만 원.

○소위원장 정진욱 두 번째?

○이재관 위원 예,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그것은 증액 의결, 부대의견 철회.

○소위원장 정진욱 에너지 비용 지원 증액 의견 그다음에 부대의견은 철회하고요. 그다음에 1인 여성 자영업자 육아 350억 7800만 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생활문화에 400억 이렇게 통과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정부 의견대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정진욱 그다음 4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통한 민간과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할인쿠폰 사업비 63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등과의 결제를 연계해서 공공배달앱을 지원하기 위해 5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최근 배달앱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배달앱 3사들의 과점 시장에서 입점 소상공인들이 불공정행위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공공배달앱을 지원함으로써 공공배달앱이 2% 미만의 낮은 수수료율로 지역 주민들에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쿠폰으로써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의견 있으십니까?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면 정부 의견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금액을 명확히 둘 중에 하나……

○소위원장 정진욱 635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635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증액 수용이고요, 그다음에 5억 2000만 원 증액.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5억 2000만 원은 사실 635억이 되면 이게 여기에 포함돼서……

○소위원장 정진욱 그 안에 들어가나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포함돼서 더 큰 금액이 지원이 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635억 증액안으로 통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5번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심사 과정에서 영세·취약 소상공인이 배제되고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저금리 지원 융자만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32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내내역사업인 청년고용연계자금은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는 기준 없이 연령 중심의 지원이며 청년고용 정책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설계는 고용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15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은 앞서 설명에서 통합 1건으로 잡아 주신 바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예, 그렇지요.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두 가지 감액 의견에 대해서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금은 우리 소상공인들, 특히 내역사업으로 있는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에 접근하기 어려운, 특히 청년들의 경우에는 사업 연도가 짧기 때문에 자금을 융통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런 청년 사업자들 그리고 연령과 관계없이 청년들을 과반 이상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저희들이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감액 의견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부실률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여 저희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국회 상임위에?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상임위에……

○소위원장 정진욱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200억 원 증액안 통과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감액 불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아, 그런가요? 감액 불수용입니까? 정부안 그대로네요. 원안 유지하는 거네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원안 유지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그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6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온누리상품권발행과 관련해서 지방·전통시장 우대 환급행사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상향을 통한 소비심리 회복과 취약상권 매출 진작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증액 금액은 각각 1617억 1600만 원 증액 그리고 500억 원 증액, 476억 9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출되었습니다.

부대의견도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소비가 다양한 업종으로 균형 있게 확산되고 점포 간 국가 지원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비농축수산물 점포를 포함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시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시장상권인프라 조성과 관련해서 전통시장·상점가의 마케팅과 시장경영 지원을 통한 경영 정상화 그리고 활력 제고를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증액 액수는 각각 49억 6000만 원, 14억 그다음 10억 4000만 원,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시장상권 홍보사업과 중복 우려가 있으며 전쟁 피해에 대응하는 추경의 본래 목적과 무관한 행사성 예산이기 때문에 6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온누리상품권 지방·시장 우대 환급에 대해서는 1617억 원 증액안을 수용합니다. 저희들이 사전 할인율을 7%에서 10%로 올리고 환급행사를 실시하는 안으로 해서 1617억 원을 증액하는 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오세희 위원님 말씀처럼 농림부와 해수부가 명절을 앞두고 환급행사를 할 때 같은 시장 내에 있는 농축수산물 외의 제품을 파는 상인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17억 원이 증액되면 금번 돌아오는 추석 때 행사를 할 때 농림부, 해수부랑 하는 시기를 맞춰서 비농축수산물 제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환급행사를 같이 발맞춰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좋습니다.

부대의견 채택하시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허성무 위원 좋기는 한데 이 비용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 증액으로?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농림부·해수부와 같은 금액의 환급행사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금액을 조금 줄이거나 해서 여기에 담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아주 지혜롭게 대처를 해 주십시오.

○오세희 위원 그것 불만이 많아. 같은 상가인데 농수산물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되는 거야. 그걸 좀 해서 같이하면 되지.

○허성무 위원 아니, 좋은데 지금 증액된 금액으로 돈이 부족할 것 같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정진욱 그다음에 내역사업 중에 시장상권인프라 조성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시장상권인프라 조성에 대해서는 14억 원 증액안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6억 원 감액안은 불수용합니다.

이 예산은 지역별로 전국상인연합회 지방 지회들이 있고 그 지회에서 해당 지역에 있는 시장들로 하여금 공동마케팅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달 저희들이 체감경기 BSI를 조사해 본 결과 특히 전통시장에서 굉장히, 전 쟁 이후로 체감 BSI가 약 34%p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봤기 때문에 이런 공동마케팅 사업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여기에 대해서 오세희 위원님 혹시 의견 없으십니까?

○오세희 위원 사실은 지난해에 이걸 우리가 반영을 못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6억 전액 감액 의견은 뭐냐 하면, 지금 중앙회가 이걸 집행하려고 해도 인프라가 없어요. 사무실도 없고 매니저도 없어. 이 사업을 집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실 임대비가 들어간 금액이 이거예요, 매니저 1명하고.

전체적으로 홍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직원이 있고 사무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없는 거예요, 이게 법정단체임에도. 그래서 관련법이 만들어졌잖아요. 지원법이 만들어졌단 말이지요, 작년에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그렇습니다.

○오세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6억 원은 별도인데 그건 중앙회의 사무실 임대료와 유지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지원팀을 만드는 거지요. 매니저 1명 이렇게 들어간 게 6억 원이고, 매니저 2명 들어가는 이것은 49억 6000이라고 했는데 17개 도시에 2명 하면 16억 5000인가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기존에는 각 지회에 매니저 1명씩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1명씩 추가해서 2명씩 지원하는 걸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번 달 4월 달부터 저희들이 추가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오세희 위원 이걸 우리가 지금 이미 매니저 2명을 추가로 주고, 16억 2000은 그 수치계산을 다 했거든요. 이게 최소한도 필요해.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지금 저희가 전상연 본회에는 매니저 3명 인건비 지원 그리고 지회마다 2명씩 하고 있어서, 저희가 전상연과 소통해 본 결과 공동마케팅 사업으로 기존 정부안에 있는 6억 더하기 증액 14억으로 이렇게…… 총 20억입니다.

○오세희 위원 그러면 증액 14억에서 중앙회에 가는 걸로 별도로 5억을 해 주시지요, 6

억인데 5억. 여기서 지금 6억을 깎겠다는 거잖아요, 구자근 위원께서 전액 감액……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아닙니다. 정부안 6억에다가 추가로 14억 해서 총 20억이 되는 겁니다.

○오세희 위원 20억, 오케이. 중앙회로 가는 것, 5억이 지금 중앙회로 가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저희가 이 사업 구조를, 20억 전체가 소진기금에서 전상연으로 가고 전상연이 17개 지회에 마케팅 비용을 나눠 주고 전상연이 자체 집행도 합니다.

○오세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은 이게 운영비라는 거지, 운영비. 이게 이미 그 얘기가 된 거거든요. 여기 운영비가 있어요. 그래서 14억에……

좋아요. 49억 6000이 아니라 14억에다가 5억을, 운영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무실 임대, 지원을 해야 되니까…… 인프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5억을 해서 추경에 20억.

○소위원장 정진욱 운영비 5억이면 19억인데 20억으로?

○오세희 위원 20억. 아니, 왜냐하면 49억 6000인데 그걸 안 주더라도 14억하고 중앙회 운영비 5억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위원님, 그게 지금 이 시장경영 지원 사업 내에서는 단체운영비 지원 성격의 사업을 넣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세희 위원 그런데 그게 인건비가 안 들어간 건데, 그래서 사무실을 주자는 거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전상연이 지금 수원에 있는 시장에서 임시로 쓰고 있는데……

○오세희 위원 그게 그 지부의 사무실인데 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저희가 그 문제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독자적인 사무실을 만드는 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세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독자적인 그게 있는데……

이게 작년 예산에서 누락이 된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좀 줘야 된다는 게 전체적인…… 중앙회 운영비가 5억이나 6억이 꼭 있어야 됩니다, 계산을 했을 때.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그러면……

○오세희 위원 임대료 월 500만 원.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그 운영비 명목의 다른 사업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세희 위원 아니, 예산에 그게 들어간 건데? 거기에 올린 건데……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마케팅 지원사업, 경상사업 안에 그걸 넣기가 조금……

○오세희 위원 매니저는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매니저는 현재 3명 있습니다.

○오세희 위원 그러니까 매니저는 들어가는 거고 중앙회 운영비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권향엽 위원 위원장님, 이것 빨리 좀 정리가 좀 되어야 전체회의 정리하지요. 따로 설명을 좀 드려 주시면 어떨까요?

○소위원장 정진욱 차관님, 그러면 지금 중앙회 운영비는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지금 신규사업으로 추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오세희 위원 49억 6000을 증액하는 게 아니라 14억, 그래요. 14억 한다 치고……

○소위원장 정진욱 오세희 위원님, 중앙회 운영비는 지금 이 항목 속에는 추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세희 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들어 있어요.

○소위원장 정진욱 이 안에요?

○오세희 위원 이 예산에, 49억 6000에 들어 있어요.

○소위원장 정진욱 49억 6000에는 들어 있지요.

○오세희 위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안 하고……

○소위원장 정진욱 안 하고 지금 14억을 하겠다?

○오세희 위원 14억에다 하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소위원장 정진욱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이……

○오세희 위원 6억이 들어가 있어요, 6억이.

○소위원장 정진욱 그런데 지금 차관님 말씀이 운영비는 여기에 넣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면 넣을 수가 있네요?

○오세희 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소위원장 정진욱 넣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세희 위원 운영비를 별도로 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양보를 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정진욱 그러면 그걸 넣어서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오세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는 들어가 있지만……

○오세희 위원 예, 그러니까요. 여기 올라간 거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있는 이 시장경영 지원 사업의 성격에는 운영비가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세희 위원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내 말은 14억에 매니저하고 마케팅비가 들어가고, 49억 6000을 올렸잖아요. 그 안에 중앙회 사무실 운영비 이게 6억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인프라 없이 어떻게 이 사업을 집행하나요? 그래서 월 500만 원의 임대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현재 있는 인프라, 그러니까 전상연 중앙본부에 지금 매니저 3명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공동마케팅 사업은……

○오세희 위원 여기 인건비 아니예요, 운영비.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인프라로 충분히 자기들이 수행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운영비 지원과 사무실……

○오세희 위원 아니, 그걸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 저는 얘기를 다르게 들었어요. 차관님은 말씀을 꼭 자기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저번에도. 왜 이게 그렇게 전달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14억 좋아요, 14억 그렇게 한다면. 그렇지만 일단은 사무실 운영비를 여기다가 좀 넣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지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소위원장 정진욱 저희가 지금 마무리를 해야 돼서,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차관님, 다시 한번 방안을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업에 단체 운영비를 넣는 건 부적절하고, 저희들이 일단 공동마케팅 사업으로 6억 더하기 14억 해서 20억으로 하고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단체 운영비 또 사무실 이런 것들을 꼭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그러니까 안 돼도 올려 보시지요, 일단. 그 나머지를 얘기할 것 아닙니까? 이건 이미 얘기가 된 건데……

○소위원장 정진욱 방법이 없습니까?

오세희 위원님,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건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때가 돼서……

○권향엽 위원 정리하시지요.

○소위원장 정진욱 오세희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위원님, 정부안을 좀 밀어주시면 저희가 책임지고 전상연 사무실 문제하고……

○오세희 위원 아니, 저는 19억이나 20억으로 올리자는 의견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위에 가서 안 되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내역의 성격이, 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여기에다 넣으면 저희가 사실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오세희 위원 별도로 해서, 구분해서 올려 보세요. 14억 매니저하고 이것 6억.

○소위원장 정진욱 예결위에 넣을 수 있나요, 차관님? 예결위에 새 꼭지로 넣을 수는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그렇게……

○소위원장 정진욱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전상연 운영비 지원 항목으로, 별도 항목으로……

○소위원장 정진욱 예, 별도 항목을 만드세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말씀하신 5억을 별도 항목으로 넣는 것으로……

○소위원장 정진욱 그러면 5억을 별도 항목으로 만들어서 예결위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예결위에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허성무 위원 아니아니, 6번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야지요.

○소위원장 정진욱 아, 6번 정리 아직 안 했나요?

미안합니다. 마음이 급하네요.

6번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14억 증액이지요? 14억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맞나요?

○허성무 위원 아니, 정부가 쪽……

○소위원장 정진욱 정부가 이야기한 게 14억……

○허성무 위원 의견을 썼기 때문에 6번과 관련해서 정부 의견을 동의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정진욱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재관 위원 6번이잖아요?

○소위원장 정진욱 예, 6번입니다.

○이재관 위원 6번, 1617억 1600만 원 증액하는 것……

○소위원장 정진욱 잠깐만요. 제가 밑에만 보고 했네요.

정리하겠습니다.

6번,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은 1617억 원 증액하고요. 그리고 부대의견 채택하고요. 그리고 시장상권인프라 조성과 관련해서는 14억 원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그다음에 운영비 5억 원……

○소위원장 정진욱 그리고 여기 예산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새로운 항목으로 중기부에서 예결위에 5억 원을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위원장님,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정부안 6억 더하기 추가 증액 14억 해서 20억에 별도 항목 5억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정진욱 그런가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소위원장 정진욱 그렇게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류한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보류한 항목들은 다루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안과 관련된 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국힘의 필리버스터나 다름없는 시간 끌기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심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님,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님, 이병권 차관님, 지식재산처 정연우 차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여러분 그리고 성소미 전문위원님, 국회 직원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종민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산회하시기 전에……

그러면 보류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소위원장 정진욱 일단 산회하겠습니다.

(19시2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강승규 구자근 권향엽 김종민 오세희 이재관 정동만 정진욱 허성무

○청가 위원(1인)

박상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전문위원 성소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부

차관 문신학

지역경제정책관 김규성

첨단산업정책관 최우혁

산업공급망정책관 송현주

무역정책관 나성화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 조용환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노용석

제2차관 이병권

기획조정실장 김우중

글로벌성장정책관 이순배

기술혁신정책관 황영호

지역기업정책관 권순재

창업정책관 조경원

벤처정책관 김봉덕

소상공인정책관 김정주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 박상용

상생협력정책국장 이은청

지식재산처

차장 정연우

기획조정관직무대리 박현희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박진환